



# 인사말씀

오늘 학술회의 주제는 “전환기 일본교과서 문제의 제상”입니다.

지난 1980년대 교과서 파동 이후 한일 양국은 상호 이해와 ‘근린제국조항’을 통해 역사적 갈등을 축소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새역모’의 후소샤 교과서 발간을 계기로 한일관계에서 교과서 문제가 다시 역사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 4월 9일 ‘새역모’의 지유사판 역사교과서가 예상대로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하였습니다. 물론 이 교과서는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일본 문부과학성도 인정했듯이 신학습지도요령을 충실히 따른 ‘새역모’의 지유사판 교과서는 2012년부터 사용되는 교과서 제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2년부터는 개정된 교육기본법과 신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일본의 모든 역사교과서가 개편됩니다. 중학교 역사과목 학습시간이 증가하고, 학습지도요령의 ‘근현대사’항목이 ‘근대사’와 ‘현대사’로 분리됩니다. 따라서 한일간 교과서문제는 이제 또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분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한일관계사학회에서는 기존의 방법론을 총괄하여 새로운 분석틀을 얻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많은 참여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7월 4일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이 훈 배상

# 일 정

09:30~10:00

등록 및 開會式

開會辭

韓日關係史學會 會長

## ▶제1부

사회 : 오성(세종대)

1. <10:00~10:30>

기조강연 :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의 사적 전개  
정재정(서울시립대)

2. <10:30~11:10>

전후 일본의 김정제 역사교과서 문제  
- 家永교과서 재판을 중심으로 -  
發表 : 김은숙(한국교원대)  
討論 : 현명철(경기고)

3. <11:10 ~ 11:50>

‘새역모’의 일본 고대사 구상의 특질과 문제점  
- 自由社版 교과서 및 扶桑社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 -  
發表 : 이재석(동북아역사재단)  
發論 : 이근우(부경대)

11:50~13:00

中 食

▶ 제2부

사회: 장순순(반민규명위)

4. <13:00 ~ 13:40> 『일본인의 역사교과서』(自由社)의 근세 한국사관련 서술과  
일본 近世史像  
發表: 손승철(강원대)  
討論: 민덕기(청주대)
5. <13:40 ~ 14:20> 김정 통과 중학교 교과서의 아시아 침략에 대한 서술의 특징  
發表: 최덕수(고려대)  
討論: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6. <14:20 ~ 15:00> 김정 통과 중학교 교과서의 현대 한일관계 서술의 특징  
發表: 신주백(연세대)  
討論: 남상호(경기대)

15:00~15:20 休 息

▶ 제3부

종합토론

<15:20~17:00>

사회: 정재정(서울시립대)

# 목 차

---

## 【기조연설】

- 韓日 歷史教科書 問題의 史的 展開  
..... 鄭 在 貞 ..... 1

## 【발표문】

- 전후 일본의 검정제 역사 교과서 문제  
..... 김 은 숙 ..... 13
  
- ‘새역모’의 일본 古代史 구상의 특질과 문제점  
..... 이 재 석 ..... 39
  
- ≪일본인의 역사교과서≫(自由社)의 근세 한국사 관련서술과 日本近世史像  
..... 손 승 철 ..... 65
  
- 검정통과 중학교 교과서의 아시아침략에 대한 서술의 특징  
..... 최 덕 수 ..... 91
  
- 검정 통과 중학교 교과서의 현대 한일관계 서술의 특징  
..... 신 주 백 ..... 107



# 韓日 歷史教科書 問題의 史的 展開

## - 역사교과서 연구와 역사교과서 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

鄭 在 貞(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대학원장)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探索과 理解를 위한 歷史對話, 1976-2000年
- III. 是正과 連帶를 위한 歷史對話, 2001-2006年
- IV. 和解와 平和를 위한 歷史對話, 2007-現在
- V. 맺음말

## I. 들어가며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유사 이래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다. 그 과정에서 두 나라는 友好와 協力を 실현하기도 했지만, 심각한 葛藤과 衝突을 빚어낸 경우도 많았다. 그리하여 두 나라의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는 결코 양호한 것이 아니다. 한국인은 일본이 恩惠를 怨讐로 갚은 無道한 나라, 일본인은 한국이 自身을 지키지도 못한 軟弱한 나라라는 印象을 갖게 되었다. 물론 일본에서 韓流 붐(boom)이 일어나고 한국에서 日本 필(feel)이 유행하는 오늘날에는 그런 否定的 이미지가 서로 많이 稀微해졌지만, 역사인식과 그것을 규정하는 역사교과서 기술을 둘러싼 對立과 攻防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최근에도 일본의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가 다시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통과한 2005년 초부터 2년여 동안 역사인식 등을 둘러싸고 ‘외교전쟁’ 혹은 ‘역사전쟁’이라는 험악한 용어가 亂舞하는 特異한 관계를 顯出했겠는가?

한일 양국의 역사연구자와 역사교육자는, 비록 少數이기는 하지만, 일찍부터 두 나라의 歷史葛藤을 直視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끈질기게 모색해왔다. 이른바 역사인식과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歷史對話가 그것이다. 한일의 역사갈등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이 불거졌던 1982년, 2001년, 2005년 등을 계기로 증폭되었지만, 逆說의으로 역사대화 역시 이를 통해 한 단계씩 더 進展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이 글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한 역사교과서 문제의 斷面을 역사교과서 연구와 역사교과서 대화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그것들의 성과와 限界를 바탕으로 하여 몇 가지 課題와 展望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자와 역사교육자가 함께 추진해온 역사교과서와 역사인식을 주제로 삼은 연구와 토론, 이른바

역사대화에 論議를 한정하겠다.<sup>1)</sup> 이것이 오늘의 심포지엄 주제와도 잘 照應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글이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연구와 역사교과서 대화의 개략적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그러한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또 그 수준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참고가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연구와 역사교과서 대화는 2006년 이후 넓이와 깊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여 왔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원고 마감시간에 쫓겨 그 실상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완하고자 한다. 다만 2006년 이래의 동향에 대해서는 우선 이 글 末尾에 참고문헌을 게재하는 것으로써 가름하고자 하니,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라마지 않는다.<sup>2)</sup>

## II. 探索과 理解를 위한 歷史對話, 1976-2000年

### 1. 역사대화의 개요

일본에서는 이미 1955년을 전후하여 역사교과서 기술을 둘러싸고 정치와 언론 등에서 심각한 논란을 벌인 적이 있다. 그리고 1982년에는 역사교과서 기술에 대한 문부성의 검정과 간섭이 다시 정치 문제로 비화하고, 그 파장이 동아시아 각국에까지 미쳐 주요 외교懸案으로 부상했다. 오늘날까지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른바 ‘近隣諸國條項’은 이 사태를 撫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苦肉之策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발생한 역사교과서 문제는 한국의 역사학자와 역사교육자에게 역사교과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일본과 역사대화를 모색하게 만드는 데 일정한 자극을 주었다. 역사교과서 연구와 역사교과서 대화를 처음 시작한 것은 한국의 歷史教育研究會였다. 이 단체는 1970년대 중반 이래 4회에 걸쳐 일본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각 심포지엄에서 다룬 주요 議題는 “민족”을 역사교육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한일 양국의 역사교육이 내셔널리즘에 傾斜되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時宜適切한 주제였다고 생각된다.

---

1) 이 글은 역사교과서연구회(한국)와 역사교육연구회(일본)가 『한일역사공통교재, 한일교류의 역사-선사에서 현대까지』의 간행(한일 동시 간행, 2007.3.1)을 기념하여 서울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을 약간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 이후의 역사교과서 연구와 역사교과서 대화의 推移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충할 예정이다.

2)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연구와 역사교과서 대화의 書誌에 대해서는 우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동북아역사재단, 『한일 역사현안 관련 일본 역사교과서 연구논저 목록』(동북아역사재단, 2009). 다만 이 목록에는 빠진 것도 많기 때문에 이 글의 末尾에 게재된 연구서적 등을 이용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韓日文化交流基金은 1989년에 역사교과서 서술 문제를 논의하는 한일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기금은 원래 1982년에 발생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족했기 때문에, 이런 주제의 심포지엄을 주최한 것은 합당한 일이었다.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을 계기로 하여, 세계 각국 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서술을 是正한다는 명목에서 자주 국제 역사대화를 개최했다.

공식적인 학회를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한일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계속한 것은 한국의 李元淳과 일본의 加藤章 그룹이었다. 이 그룹은 1988-90년에 「일본국과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 서술에 관한 기초적 연구」를 시행하여, 自國中心主義로 되기 쉬운 역사교육을 검토함으로써, 타국에 대한 偏見과 蔑視를 제거하고 상호이해를 깊게 하며,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국제적 비판에 대해 학문적 해결을 모색했다.

한국의 李泰永과 일본의 藤澤法暎를 중심으로 한 韓日歷史教科書研究會는 1991-92년에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근대 한일관계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 연구회의 활동은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가 자세하게 보도함으로써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역사대화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에서 國際教科書研究所와 韓日關係史研究會 등이 잇달아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도 국제 역사대화를 주선하여 활동의 지평을 넓혔다.

일본에서는 吉田悟郎·西川正雄 등이 이끈 比較史·比較歷史教育研究會의 활동이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회는 1982년에 발족한 이래 수차례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그때마다 결과를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이 연구회는 역사교과서 자체를 검토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동아시아 각국이 自國史와 世界史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등을 話題로 삼았다. 이 연구회의 역사대화에는 한국 이외에 북한·중국·대만·베트남 등도 참가했다.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를 연구하는 소규모 모임에서도 간헐적으로 한국의 관련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

## 2. 역사대화의 주요 논점

한국과 일본의 역사대화는 서로 역사인식의 편차가 심했기 때문에 결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험악한 분위기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 특히 매스컴이 밀착하여 취재한 경우가 그러하였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보건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구자 상호간의 이해가 깊어져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었다. 여러 역사대화의 논점은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먼저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점이다.

① 自國史를 어떻게 상대화하여 파악할 것인가.

#### 4 • 전환기 일본 교과서문제의 諸相

- ② 역사교육에서 내셔널리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 ③ 일본의 역사교육 또는 역사교과서에서 皇國史觀의 혹은 植民史觀的 한국사 이해는 모두 拂拭되었는가.
  - ④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역사교육의 방법은 무엇인가.
  - ⑤ 한일 사이에 역사인식의 공유는 가능한가, 또 그것은 바람직한 일인가.
- 다음에는 특정의 역사적 事案을 둘러싼 논점이다.
- ① 明治維新 직후에 일본에서 대두한 征韓論의 실체는 무엇인가.
  - ② 청일전쟁과 그 후 일본이 도발한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 ③ 韓日連帶의 사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교육할 것인가.
  - ④ 재일 한국인·조선인 문제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 3. 역사대화의 성과

한일 역사대화는 참가자 모두를 납득시킬 만한 공통의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그런대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 ① 근대 한일관계사를 둘러싼 한일의 인식 차이를 명확히 부각시키는 한편, 이것을 접근시키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였다.
- ② 양국의 역사교과서 제도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것을 분석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③ “加害”와 “被害”에 대한 역사를 서로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새로운 한일관계의 구축에 꼭 필요한 과제임을 일반인에게 어필하는 데 기여하였다.
- ④ 양국의 역사연구자·역사교육자 사이에 이해가 깊어져 공동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인맥이 구축되었다.
- ⑤ 국민 또는 민족에 따라 서로 다른 역사해석을 도마에 올려놓고 토론함으로써 역사인식을 심화시켰다.
- ⑥ 역사대화가 매스컴이나 서적을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짐으로써 역사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⑦ 한국 근대사에 관련된 일본의 역사교과서 서술이 많이 개선되었다.
- ⑧ 공동연구와 심포지엄 등의 역사대화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 4. 역사대화의 과제

역사대화가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浮刻되었다.

- ① 역사교육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과제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현실을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을까.

- ② 自國史的 觀點을 뛰어넘는 상대방 인식이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육에서 얼마나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
- ③ 한일의 역사연구 성과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정확하고 풍부하게 전달될 수 있을까.
- ④ 역사교과서 연구의 영역을 한국과 일본의 全時代로 확대해야 한다.
- ⑤ 역사대화의 참가자가 뚜렷한 문제의식과 성실성을 견지해야 한다.
- ⑥ 다양한 채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대화의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
- ⑦ “다른 민족에게는 다른 역사상이 있다”는 명제를 “역사교육의 국제화”에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가.
- ⑧ 한일 양국인이 역사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역사대화의 목표를 왜소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 ⑨ 역사교육 내지 역사교과서에 참고할 만한 勸告案이나 副教材를 함께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 Ⅲ. 是正과 連帶를 위한 歷史對話, 2001-2006年

#### 1. 역사갈등의 再燃

한국과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하여,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고 한국이 일본의 그런 태도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데 합의했다. 양국이 정부 사이의 공식문서에서 미흡하게나마 역사인식에 대해 이렇게 공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었다. 두 정부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한일의 역사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일본의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가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2001년을 전후하여 한국과 일본의 역사갈등은 再燃했다. 그리고 이 교과서가 다시 검정에 통과한 2005년 초부터 2년여 동안 한국과 일본은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특히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빚어 頂上外交를 중단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사태가 이렇게 反轉된 것은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한국정부가 강하게 비판하고 반발했기 때문이지만, 양국 정부가 역사인식의 충돌을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해온 시스템이 붕괴한 것도 주요 원인의 하나였다. 그 基底에는 한국이 일본정치의 ‘妄言’과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 등을 겪으면서 일본의 역사인식에 不信을 품게 되고, 일본이 戰後 60년을 계기로 역사의 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慾望에서 내셔널리즘을 옹호하는 역사인식으로 기울게 된 상황이 깔려 있었다.

한일 사이에서 역사갈등이 再燃한 것은 그 동안 추진되어온 역사대화의 효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역사학자와 역사교육자의 역량이 정부를 움직일 만큼 성숙하지 못 했다는 것을 反證하는 사태였다.

## 2. 역사대화의 활성화와 다양화

2001년 『새 역사교과서』의 등장과 그로 인한 韓日間의 역사갈등은 逆說的으로 역사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참가자의 外延이 확장되어 兩國間뿐만 아니라 多國間 대화가 많아지고 話題도 다양해졌다. 한국과 일본이 관련된 역사대화의 유형을 참가자의 國籍에 따라 간단히 분류하여 論議의 要點만을 摘示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에서 한국인 역사연구자와 역사교육자만으로 이루어진 학술회의이다. ‘한국인끼리의 역사대화’인 셈이다.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와 이를 확대 개편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역사문제연구소, 역사교육연구회, 전국역사교사모임,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서양사학회, 한국교육개발원과 그 사업을 移管하여 繼承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한일관계사학회 등이 잇달아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한국사, 일본사, 중국사, 서양사의 시각에서 한국과 상대국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
  - ② 한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 연구자와 교육자가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사건’을 규탄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역사대화이다. ‘南北共助型 역사대화’인 셈이다. 평양과 서울이 주요 무대였다. 이런 역사대화를 발판으로 하여 2004년 4월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발족했다.
  - ③ 한국과 일본이 話者가 되어 兩國을 오가면 개최한 역사대화이다. ‘韓日兩國型 역사대화’이다. 서울시립대학교가 거점이 된 역사교과서연구회와 東京學藝大學이 중심이 된 역사교육연구회가 ‘역사연구의 동향과 역사교과서의 서술’이라는 대주제를 내걸고 1997년 이래 10여 년 동안 진행해온 역사대화가 전형적인 예이다. 이들은 총 15회의 심포지엄을 열어 양국 교과서의 한일관계사 기술을 검토하는 한편, 2007년 3월 1일 한일 양국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교재를 간행했다. 그밖에 전국역사교사모임(한국)과 역사교육자협의회(일본)가 2001년부터 역사대화를 시작하고, 歷史學會(한국)와 歷史學研究會(일본)을 매개로 하여 양국에서 전국적 규모로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10개 역사학 단체가 2001년 12월 이래 ‘한일합동역사연구심포지엄-교과서 문제-’라는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의 韓日主敎交流會는 1996년 2월 16일 ‘한일 교과서 문제 간담회’를 발족하고 2002년까지 8회에 걸쳐 역사대화를 갖고, 해마다 두 차례 한일 청소년의 교류를 지원했다. 현대일본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국사편찬위원회 등도 역사교과서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특기할 만한 것은 『새 역사교과서』의 등장으로 인해 한일의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자, 이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역사대화가 출범했다는 점이

다. 2001년부터 시작한 ‘한일역사가회의’와 2002년부터 활동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그것이다. 前者는 역사학국제위원회의 양국 국내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개최하는 역사대화로서, 역사연구의 현황과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비교적 자유로운 모임이다. 後者는 2002년 5월에 발족하여 2005년 5월 말까지 3년 동안 양국 정부의 전면적 지원 아래 양국을 오가면 회의를 개최하고, 한일관계사에 관련된 19개 주제에 대해 47편의 논문을 생산하여 발표했다.

- ④ 한국이 중국과 역사대화를 나누거나 일본·북한·러시아 등이 여기에 가담하는 역사대화이다. ‘東北아시아型 역사대화’인 셈이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을 해마다 개최하여,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을 만들어가기 위해 근현대사에 관한 한중일 공동 역사교재를 개발했다.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2003년 9월 上海에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일본학술회의 역사학연구연락위원회 역사연구와 교육전문위원회’와 일본역사학협회는 2002년 10월 東京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역사교과서의 편찬—그 역사와 현상—’이라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⑤ 한국·중국·일본의 어느 나라와 유럽·미국 등의 서양 여러 나라가 함께 참가한 ‘역사대화’이다. ‘동북아시아·서양 聯合型의 역사대화’인 셈이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등은 독일의 게오르그 에케르트 국제교과서연구소와의 함께 동서양 교과서의 식민지 역사 서술을 검토했다. 한국의 역사학회와 미국의 세계사학회는 2002년 8월 ‘역사 속의 한국과 세계’라는 대주제를 내걸고 대규모의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의 출연기관으로서 출범한 동북아역사재단은 2006년 11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폴란드 등의 학자가 참가한 대규모 역사대화를 주최했다. 아시아재단(TAF, The Asia Foundation)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ES, Friedrich Ebert Stiftung)은 2001년 11월 東京에서 ‘유럽, 아시아, 미국의 교과서·역사·전쟁 체험’이라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본교직원조합은 2002년 1월 27일 일본의 宮崎市에서, ‘아시아와의 共生·連帶를 展望하는 역사교육의 今後 - 국제교과서연구에서 배운다 -’라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독일연방정치교육센터 동서코레그, 켈른 일본문화회관, 독일·일본연구소는 공동으로 2002년 9월 켈른에서 ‘일본과 한국-공통의 미래를 향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3. 역사대화의 성과와 과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루어진 역사대화의 성과를 역사인식의 심화와 공유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에 대해 철저히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종래에는 일본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가 화제의 중심이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

라고 볼 수 있다.

- ② 일본의 ‘역사왜곡’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공동대응의 태세를 갖추었다. 국제연대의 모색이 그것이다.
- ③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의 역사인식을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노력했다. 그리고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시민연대가 출범했다.
- ④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삼국이 유럽·미국 등 서양 여러 나라의 역사인식·역사교과서 문제의 처리 경험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자세를 취했다.
- ⑤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역사인식과 역사교과서 문제의 성격을 세계적 시야에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국제이해와 평화공영을 지향하는 외국의 유력 재단이 이런 시도를 선도한 것은 뜻 깊은 일이었다.
- ⑥ 한국과 일본이 함께 역사교재를 개발하거나 서로 수업사례를 교환함으로써 역사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려는 작업이 활발해졌다. 역사공통교재의 개발에 대해서는 節을 달리 하여 좀 더 부연하고자 한다.

#### 4. 국제간 역사공통교재의 편찬사업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역사공통교재에는 4종류가 있다. 그 主題만을 간략히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역사교과서연구회(한국)와 역사교육연구회(일본)가 간행한 『한일역사공통교재, 한일교류의 역사-선사에서 현대까지』이다. 두 단체의 활동과 성과, 교재의 내용과 지향 등에 대해서는 이 책의 서문과 후기 등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참조하기 바란다.
- ② 전국교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히로시마교직원조합이 한일공통역사교재제작팀을 만들어 간행한 『한일공통역사교재 조선통신사-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에서 우호의 조선통신사로』(2005년 4월에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출판)이다. 이들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7차의 ‘한일 역사부교재 만들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 ③ 한일역사교육교류모임(한국)과 일한역사교육교류회(일본)이 2006년에 간행한 『마주보는 韓日史』이다. 이들은 2002년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前近代史의 특정 주제를 비교 설명한 역사공통교재를 만들었다.
- ④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의 합작 활동이다. 이들은 한중일공동역사부교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2002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1차례의 회합을 가졌다. 그리고 2005년 5월 26일 한국·일본·중국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역사부교재인 『미래를 여는 역사-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를 간행했다. 주요 내용은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침략과 저항, 협력과 갈등, 전쟁과 평화의 측면에서 眺望한 것이다.

그밖에 韓日主教交流會는 李元淳·鄭在貞·徐毅植에게 부탁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함께 읽을 수 있는 한국사 개설서를 출간했다. 저자들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이 책을 통해 한국사와 한일관계사의 개략적 흐름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미래로 열린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평화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가까운 이웃으로 변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IV. 和解와 平和를 위한 歷史對話, 2007-現在

2007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연구와 역사교과서 대화는 좀 더 주제가 확장되고 논점도 다양해졌다. 그리고 이에 참가하는 역사학자와 역사교육자의 층도 두터워졌다. 그리하여 한 해에 생산되는 논문과 저서의 수도 무척 많아서 한 사람이 그 全貌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각 연구와 대화의 主旨 또는 志向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역사인식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글의 末尾에 붙어 있는 論著들의 제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나는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역사교과서 연구와 역사교과서 대화가 현재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가 도달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원고를 아직 완성하지 못한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역사대화의 實例를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피하고자 한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각 논문들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역사인식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 V. 맺음말

최근 한국과 일본은 역사교과서 기술과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정부레벨에서는 극도의 갈등과 대립을 보인 적이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민간레벨에서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활발하게 역사대화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양국의 역사연구자·역사교육자·시민은 물론이고 중국·유럽·미국의 관계자들도 참가했다. 그리하여 역사대화의 外的 돌레는 동아시아와 세계로까지 확장되었다. 이와 아울러 역사대화의 폭과 깊이가 아주 넓고 깊어지고, 그 내용과 수준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역사교과서 깃루과 역사인식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상호이해는 적어도 민간레벨에서만큼은 괄목할만하게 진전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에 힘입어 양국에 숙명처럼 드리워 있는 분열된 역사인식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게 될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기술과 역사인식의 대립이 역사대화를 통해 一直線的으로 개선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한국과 일본은 상대방의 역사교과서 기술

과 역사인식을 서로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歷史和解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에 걸쳐 迂餘曲折을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두 나라에서 利害得失을 따져가며 역사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세력과 사회세력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일본의 歷史和解는 영원히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연구자와 역사교육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 앞에서 소개한 사례를 디딤돌로 삼아 역사대화를 확대하고 역사공동교재를 개발함으로써 민간레벨의 상호이해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또 역사화를 통해 ‘역사의 명에’를 ‘미래의 動力’으로 바꿔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역사교재의 공동 제작은 필자간의 신뢰와 연대를 구축하고, 독자 사이의 이해와 공감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시도해볼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사이의 역사인식의 개선과 상호이해의 증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知識人과 指導層이 意識的으로 이것을 牽引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언론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 더구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역사인식의 모색은 동아시아 또는 세계의 미래를 전망하는 큰 그림 속에서, 뚜렷한 목적의식과 실행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한국의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가 국내외의 무대에서 역사교과서 연구와 역사교과서 대화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한일관계사학회가 개최한 오늘의 심포지엄도 거기에 큰 힘을 보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참고문헌〉

- 比較史比較歴史教育研究会, 『自国史と世界史-歴史教育の国際化をもとめて』(未来社, 1985)를 포함한 5권의 관련 서적
- 日韓相互理解研究会, 『日韓相互理解アンケート調査集計結果報告書』(1992)
- 日韓歴史教科書研究会, 『教科書を日韓協力で考える』(大月書店, 1993)
- 李元淳, 『韓国から見た日本の歴史教育』(青木書店, 1994)
- 中村 哲, 『歴史はどう教えられているか』(日本放送出版協会, 1995)
- 君島和彦, 『教科書思想-日本と韓国の近現代史』(すずさわ書店, 1996)
- 坂井俊樹, 『韓国朝鮮と近現代史教育』(大月書店, 1997)
- 藤沢法映, 『韓国との対話』(大月書店, 1997)
- 정재정, 『한국의 논리 - 전환기의 역사교육과 일본인식』(현음사, 1998)
- 정재정, 『일본의 논리 - 전환기의 역사교육과 한국인식』(현음사, 1998)
- 鄭在貞, 『韓国と日本-歴史教育の思想』(すずさわ書店, 1998), 同 改訂 増補版 (2006)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1세기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 한일 역사교과서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도서출판 오름, 1998)

- 鄭在貞, 「歴史教科書問題と韓日協力」(第9次韓日フォーラム、2001.8)
- 鄭在貞, 「韓国人の日本認識-その歴史的進展と課題」『東北アジア研究』第5号(東北大学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2001)
- 石渡延男, 鄭在貞共同編集, 『韓国発 日本の歴史教科書への批判と提言』(桐書房, 2001)
- 신주백,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 1965-2001: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한국근현대사연구』17(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 鄭在貞, 「問われる歴史教科書, 広がる歴史の対話」『朝鮮史研究会論文集』40(2002.10)
- 鄭在貞, 「歴史和解'를 향한 韓國과 日本의 共同 努力-歴史認識과 歴史教科書 改善을 위한 最近의 活動 事例-」(UNESCO Asia 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Historical Reconciliation in Europe and Asia Focusing on Textbook Issue, 2004. 7)
- 李元淳·鄭在貞·徐毅植, 『한국과 일본에서 함께 읽는 열린 한국사 - 공동의 역사인식을 향하여』(솔출판사, 2004.5)
- 鄭在貞, 「広がる対話, 深まる議論」『歴史教科書をめぐる日韓対話』(大月書店, 2004.11)
- 전국교원노동조합 대구지부, 『한일공통역사교재 조선통신사-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에서 우호의 조선통신사로』(한길사, 2005)
- 동아시아역사인식과평화포럼, 『미래를 여는 역사』(한겨레신문사, 2005)
- 정재정, 「한일 역사대화의 구도 : 역사교과서와 역사인식을 중심으로」『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도서출판 한울, 2006.3)
- 한일역사교육교류모임, 『마주보는 한일사』(사계절, 2006)
- 정재정, 「韓日の 歴史對話-和解와 相生을 위한 오딧세이」『일본학연구』제19집(단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6.10)
- 역사교과서연구회(한국)와 역사교육연구회(일본), 『한일역사공통교재 한일교류의 역사-선사에서 현대까지』(도서출판 혜안, 2007.3)
- 이신철, 『한·일 근현대 역사논쟁』(선인, 2008)
- 한국사연구회·한일관계사학회, 『일본 역사서의 왜곡과 진실』(경인문화사, 2008)
- 아시아 평화와 역사연구소, 『역사인시를 둘러싼 자화상, 외부의시선』(선인, 2008)
- 동북아역사재단, 『21세기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문제의 극복』(동북아역사재단, 2008)
- 현대송 편,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나남, 2008)
- 한운석, 『독일의 역사화해와 역사교육』(신서원, 2008)
- 동북아역사재단, 『역사 대화로 열어가는 동아시아의 역사화해』(동북아역사재단, 2009)



# 전후 일본의 검정제 역사 교과서 문제

## - 家永교과서 재판을 중심으로 -

김 은 속(한국교원대학교)

〈 목 차 〉

I. 머리말	VI. 1982년 교과서 파동 후 일본의 역사 교육
II. 전후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의 강화	VII. 家永三郎의 제3차 소송과 교과서 재판 종결
III. 家永교과서 제1차, 제2차 소송	VIII. 보수 우익의 교과서 『新編日本史』와 문부성
IV. 보수 우익의 제2차 교과서 비판과 家永 제2차소송 최고재판소 판결	
V.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과 「근린제국조항」	

### I. 머리말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새로 발행될 때마다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일본의 역사교육의 추이에 대해 주시하면서 일본 교과서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정부에서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는 거둬드는 우리나라의 교과서 수정 요구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는 사람도기도 하였다. 그러면 과연 일본교과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이것은 우선 일본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45년 패전 이후 교과서 검정제도를 운영하여 교과서를 발행하였지만,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기 어려웠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家永三郎의 교과서 재판이다. 家永의 교과서재판에는 역사학자, 역사교육자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일반 시민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원활동을 하면서 많은 기록을 남겨 놓았다. 이를 통해 일본 문부성의 검정 과정의 구체적인 모습과 문제점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家永교과서 재판을 중심으로 1945년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 II. 전후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의 강화

제2차세계 대전 후 일본을 점령한 미군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억제하기 위해 교육의 민

주화를 피하였다.<sup>1)</sup> 미군 점령 하에 1947년에 제정된 「학교교육법」 제21조에서는 “학교에서는 감독청의 검정 또는 인가를 거친 교과용도서 또는 감독청에서 저작권을 가지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舊教育委員會法 50조에 의하면 감독청은 원래는 주민 선거로 선출된 都道府縣 교육위원회에 의한 검정을 의미하였지만, 당시 用紙 사정 때문에 용지할당제가 폐지될 때까지 문부대신이 검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舊教育委員會法 86조).<sup>2)</sup> 1947년 미국의 교육과정(course of study)을 모델로 『학습지도요령』이 만들어졌다.<sup>3)</sup> 이 학습지도요령은 어디까지나 학습의 안내서로 제시된 것이었다.<sup>4)</sup> 1949년 4월부터 검정교과서가 사용되었다.

1950년 6.25가 발발하자 7월 4일 일본정부는 한국전쟁에서 미군에게 협력하기로 하였고, 맥아더는 내각총리대신 吉田茂에게 7만5000명의 경찰예비대를 창설하고 해상보안청 8000명을 증원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일본정부는 교육을 통해 전쟁을 지지하는 의식을 형성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1952년 4월 미군 점령이 끝난 후 1952년 9월 自由黨 吉田茂내각 총리대신은 자유당 의원회의에서 재군비를 위해 애국심 교육을 부활할 필요를 말하면서 이를 위해 지리와 역사 교육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였다.<sup>5)</sup> 1953년 10월 池田, 로버트슨 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력 점증과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애국심 교육을 지향할 것이 논의되었다.

1953년에 교육에서도 이른바 「역코스」가 진행되어 학교교육법, 교육위원회법이 일부 개정되어 문부대신이 검정권자가 되어<sup>6)</sup>, 교육행정이 중앙집권화가 추진되어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때부터 문부대신도 學者文相制에서 黨人文相制로 바뀌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우려하게 만들었다.

1955년 2월 헌법개정문제가 논점이 되었던 중의원총선거에서 일본민주당(현재 자민당의 전신)은 「국정교과서의 통일」을 선거강령 속에 넣었다. 총선거에서 제1당이 된 일본민주당은 그해 8월부터 11월까지 『우려할 만한 교과서 문제』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검정교과서를

1) 일본이 근대국민국가를 만들어가던 1886년에 처음 검정제가 실시되어 소학교에서는 1903년, 중학교에서는 1943년 국정제로 바꾸기 전까지 실시되었다. 大森直樹 「日本の教育現場と歴史教科書問題」 『일본우익의 동향과 역사교과서』(2007년 일본사학회 국제학술대회) 2007.

2) 浪本勝年 「教科書裁判運動小史」 『歴史評論』278, 1973. 7, 36쪽.

3) 김보림 「일본 사회와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 편찬」 『일본역사교과서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08, 104쪽.

4) 文部省 『學習指導要領』一般編(試案) 서론에서 “이 책은 학습지도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여태까지의 교사용 책처럼 하나의 움직임 수 없는 길을 정하고 그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에서 만든 것은 아니다. 새로 아동의 요구와 사회의 요구에 응해 생긴 교과 과정을 어떻게 살려나갈까를 교사 자신이 스스로 연구해 가는 안내로 쓰인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5) 大森直樹 「日本の教育現場と歴史教科書問題」 『일본우익의 동향과 역사교과서』(2007년 일본사학회 국제학술대회) 2007.

6) 학교교육법, 제2장 小學校, 제21조 “소학교에서는 문부대신의 검정을 거친 교과용 도서 또는 문부성이 저작 명의를 가진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격하여, 교과서의 국정화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일본 보수,우익의 제1차 교과서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sup>7)</sup>

그해 11월 15일 일본민주당은 자유당과 합당하여 자유민주당(자민당)이라는 거대한 보수 정당을 만들어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해 12월 자유민주당 정부는 교과서검정제도를 강화하는 교과서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민들의 활발한 반대운동이 일어나 이 법안은 1956년 6월 3일 심의를 마치지 못 하고 폐기되었다. 그러자 6월 5일 문부대신은 “교과서제도 개편은 입법을 필요로 하지 않고 행정조치만으로 할 수 있다”고 발표하여, 법을 고치지 않고도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교과서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 강화는 교과서 조사관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교과서 조사관제도는 1955년 12월 문부성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가 「교과서제도의 개선에 관한 답신」에서 건의한 것으로, 1956년 10월부터 상근직 교과서 조사관제도가 발족하였다. 교과서 조사관은 임시직인 조사원과 문부대신이 임명한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 회원과 함께 검정을 담당하였다.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 검정규칙에 의해 원고, 교정쇄, 견본본의 세 단계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교정쇄부터는 문부성의 교과서 조사관이 전담하므로 검정에서 조사관의 비중이 매우 컸다. 교과서 조사관 제도는 정부가 교과서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으로, 일본 교과서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교과서 조사관이 설치되자 검정이 강화되어, 1957년 4월 발표된 검정 결과에 의하면 家永三郎의 교과서를 포함하여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의 3분의 1이 불합격되었다.

자유민주당과 문부성의 교과서 통제를 위한 시도는 계속 이어져 교과서 법안을 다시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1957년 9월에 일교조, 출판노조간담회, 민간교육단체, 학자문화인, 부인단체가 모여 「교과서문제협의회」를 만들어 교과서운동을 계속 전개해가기로 하였다.

문부성의 교육에 대한 통제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에도 나타났다. 과거 문부성이 편집, 발행한 저작물이었던 소,중,고교의 학습지도요령을 官報 告示로 바꾸어 발표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다.<sup>8)</sup> 1958년 10월에 관보로 개정 고시된 소학교와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의 「총칙」에서는 과거 교육에서 참고자료로 여겨지던 학습지도요령을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등과 함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sup>9)</sup> 『소학교학습지도요령』

7) 일본 보수 우익의 교과서 공격은 제1차 1955년, 제2차 1979-1982년, 제3차 자유주의 사관 등장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정재정 「사법부의 심판을 받은 교과서 검정」 『일본의 논리』현음사, 1998, 62쪽.

8) 김보림, 위 논문, 104쪽.

9) 『小學校學習指導要領』(昭和33年改訂)과 『中學校學習指導要領』(昭和33年改訂) 總則에서 “각 학교에서는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칭 동 시행규칙, 소학교학습지도요령, 교육위원회규칙 등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라 지역과 학교의 실태를 고려하고 아동의 발달단계와 경험에 맞춰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에는 교육목표로 소학교 5학년에서 「국토에 대한 애정과 국민적 자각」을 강조하였고 『중학교학습지도요령』에서는 「향토와 국토에 대한 애정을 기른다」 「국민으로서 자각을 높이고」 등이 교육목표로 제시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애국심 교육 부활을 주장한 吉田茂 같은 지배층의 생각이 반영되었다.<sup>10)</sup>

문부성은 1958년에는 교과서 검정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 조사관을 증원하였고, 1960년에는 長州一二등의 중학교과서 『밝은 사회』를 불합격시키고, 1961년에는 上原專祿 등의 교세계사 교과서를 불합격시켰다. 출판사에서 교과서 저자들이 책의 간행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났다. 1958년부터 1961년에는 학교 현장에서도 반대를 무시하고 교원근무평정, 전국일제 학력테스트 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행되었다.<sup>11)</sup>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역사학계에서는 1960년 5월 대판역사학회, 대총사학회, 사학회, 사학연구회, 사회경제사학회, 토지제도사학회, 일본사연구회, 역사학연구회, 조도전대학사학회 역사관계 9학회가 문부대신에게 「현재의 검정방침이 사실의 틀을 넘어서 歴史事象의 해석에까지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가지게 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역사 해석의 다양성에 제한을 하여 교과서를 획일화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다음 대의 국민의 사상의 빈곤화를 가져오고 또 연구와 사상의 자유를 위협할 걱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검정방침을 개선하라는 요망서를 제출하였다.<sup>12)</sup>와 이를 사실 밝혀왔으므로

### Ⅲ. 家永교과서 제1차, 제2차 소송

이렇게 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되던 시기에 교과서 집필자인 家永三郎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였다. 家永은 일본사상사 전문가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가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sup>13)</sup> 통사와 교과서를 저술하였다. 일본이 패전한 후 미군 점령 하에 있던 시기에 처음 나온 역사교과서 『나라의 발자취』(1946)를 함께 썼으며, 1947년에 일본사 교과서로 『新日本史』(富山房, 1947, 4)를 간행하였다.<sup>14)</sup> 1949년부터 동경교육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1952년부터 고등학교용 사회과 교과서 『新日本史』(三省堂)을 단독집필하였다. 1956년 학습지도요령 개정 이후 그가 제출한 『신일본사』 전면개정판이 1957년 4

10) 大森直樹「日本の教育現場と歴史教科書問題」『일본우익의 동향과 역사교과서』(2007년 일본사학회 국제학술대회) 2007.

11) 永原慶二「家永教科書訴訟の32年」『歴史學研究』706, 1998, 1

12) 菊池克美「教科書訴訟とは何か」『歴史評論』487, 1990, 11, 18쪽,

13) 家永三郎『新國史概説』(富士書店, 1948, 4)“모든 사람은 사람인 한, 다소간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가는 이를 스스로의 직분으로 삼아 특수한 기술과 연찬에 의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대신할 뿐이다. 역사 연구는 인류가 끝까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데 필수 지식이다.”

14) 菊池克美「教科書訴訟とは何か」위 논문,

월 검정에서 불합격하자, 그는 그해 5월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다. 이번에도 불합격하자 그해 11월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여 1958년 3월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후 家永은 1960년 10월에 개정 고시된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에 의거하여 1962년 『新日本史』 전면개정판을 저술하여 검정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그가 쓴 교과서의 태평양전쟁 등과 관련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너무 어둡다면서 1963년 4월 문부성이 불합격처분을 내리자, 家永은 내용을 수정하여 그해 9월 다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문부성은 1964년 3월 조건부 합격처분을 내리고 323개의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거기에는 태평양전쟁에 대해 ‘무모한 전쟁’이라고 서술한 것에서 ‘무모한’을 빼라, 국가의 상징인 천황과 황후의 사진이 책의 아래 쪽에 있는 것은 이상하니까 위로 올리라는 등의 수정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문부성의 검정 의견에 접한 그는 과거 자신이 받았던 역사교육과 1941년 고등학교의 교사가 된 후 중학교까지 철저한 일본주의, 군국주의를 주입받은 학생들을 상대로 전전공공하였던 자신을 돌아보았다.<sup>15)</sup>

그는 국가가 교육을 통제하고 있는 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sup>16)</sup> 家永三郎은 1965년 6월 12일, 1963년의 불합격처분과 1964년의 부당한 수정 요구는 모두 헌법에서 인정한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헌법에서 금지한 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며 교육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제1차소송) 그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헌법, 교육기본법을 짓밟고 국민의 의식에서 평화주의, 민주주의의 정신을 짜르려고 하는 현재의 검정의 실태에 대해 그 비참한 체험을 해온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잠자코 이를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으로 현행 검정이 교육행정의 정당한 틀을 벗어난 위법적인 권력 행사임이 명백하게 되는 것, 이 소송에 원고로서 제가 바라는 바는 단지 이 한 점입니다.

이 재판은 과거 정부와 자민당의 교과서 검정에 대해 방위 또는 저항의 자세를 취해 왔던 교과서운동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up>17)</sup> 그전까지 교육재판은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옹호하려던 교사들이 부당하게 피고석에서 형사소추를 받고 방위하는 변론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의 한 사람 家永三郎이 원고가 되었고 국가가 재판받게 된 것이다. 그의 용기있는 행동에 대해 지원활동이 뒤따랐다.

역사학계에서는 7월 12일의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9월 18일 「교과서검정소송을 지원하는

15) 歴史教育者協議會「歴史教育50年のあゆみと課題」441-442쪽.

16) 家永三郎은 제소 이전에 그동안 자신이 쓴 『新日本史』의 검정과정의 실태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검정의 부당성을 주장한 『教科書檢定-教育をゆがめる教育行政』(日本評論社, 1965, 3)을 간행하였다.

17) 교과서 검정에 대해 역사학회 총회에서 1960년 5월 「교과서문제에 대한 성명」, 1965년 5월 「교과서 검정에 관한 성명」을 내서 문부성의 검정에 대해 비판하였다.

역사학관계자의 모임」을 결성하여 활발하게 지원활동하였다. 대표위원으로 大久保利謙, 兒玉幸多, 芳賀幸四郎를 선임하고 발기인 203명의 명의로 입회권유를 발표하였고, 『역사학연구』와 『역사평론』에서는 선전과 계몽활동을 하였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지원조직도 만들어졌다. 1965년 8월 22일 동경대 宗像誠也교수를 비롯한 교육학자, 역사학자, 교사, 변호사 등 약 40명이 모여 「교과서검정소송을 지원하는 전국연락회」를 만들기로 하여 그해 10월 창립총회를 열었다. 창립총회에는 교육학자, 역사학자, 국회의원, 각종 노조, 어머니회 등 민주단체의 대표와 출판관계자, 법조인, 교원, 배우, 「家永소송을 지원하는 시민의 모임 준비회」 대표 등 각계층의 대표 80여인이 참가하였다.

창립총회에서 宗像誠也는 검정이 검열을 금지한 헌법21조 2항(「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23조(「학문의 자유를 보장한다」)의 학문의 자유와 26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널리 이해시켜 교과서제도를 개혁하도록 하는 운동으로 지원활동을 발전시킬 것을 말하고 있다. 宗像誠也가 언급한 헌법23조 와 26조는 家永 소송의 처음 소장에서는 없었던 것이지만, 이후 원고측의 주장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게 되었다.<sup>18)</sup>

「전국연락회」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 재판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자 이에 대항하는 문부성 지지파의 사람들이 1965년 12월 「교과서문제협의회」를 만들었다. 이들은 「전국연락회」의 운동이 좌익혁명을 의도하는 혁명교육운동이며 반체제활동이라고 비판하면서 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모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문부성은 1966년 1월 검정제도를 강화하고 내실을 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家永은 그 후 1966년 개정판 교과서의 개정 내용에 대해 문부성<sup>19)</sup>이 내린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1967년에 동경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제2차소송).

제1차소송 1심 재판 법정에서 문부성은 검정에서 「결함」이라고 하였던 323개의 항목과 그 이유를 공표하였다. 과거 극비문서로 분류되던 검정 관련 문서가 드디어 처음으로 공개되어 밀실 검정의 실태가 일본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재판을 지원하고 공부하는 모임에 참가자가 늘어났다.

家永의 교과서 소송 중에서 재판 진행이 빨랐던 것은 수정 의견이 3건 6개소로 비교적 적었고 행정소송이었던 2차 소송이었다. 그동안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않았던 우익단체 「교과서문제협의회」는 2차 소송의 일심 판결을 앞두고 1969년 6월 국가와 문부성을 응원하는 「교과서를 지키는 모임」을 만들었다.<sup>20)</sup>

1970년 7월 17일 동경지방법원은 家永의 제2차소송에 대해 원고측의 승소판결을 내렸

18) 浪本勝年, 위 논문, 38-39쪽.

1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이므로 피고는 문부성이 되었다.

20) 浪本勝年, 위 논문, 39쪽.

다(衫本판결). 3건 6개소의 수정의견이 모두 헌법 21조 2항에서 금지한 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며, 교과서의 오기, 오식, 그 밖에 저자의 학문적 견해와 관련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이라 할 수 없는 기술 내용의 적부에 개입하는 것이므로 교육기본법 10조를 위반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하였다.<sup>21)</sup> 이 법리는 적용위헌론, 적용위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그러나 교과서 검정제도가 헌법 제21조의 1항<sup>23)</sup>의 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교과서 집필, 출판의 자유가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공 복지의 견지에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해야 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교과서 검정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제도위헌론은 부정하였다. 이 제도위헌론 부정의 논리는 그 후의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sup>24)</sup>

原告 勝訴의 衫本판결에 대해 7월 24일 문부대신이 항소하였다. 그러나 衫本판결은 「국민의 교육권」 「진리교육」 「교육과 학문의 불가분성」 등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원고와 그 지원자들이 느끼고 있었던 것을 법이론으로 명쾌하고 판결한 것으로,<sup>25)</sup> 이 판결을 계기로 교과서 문제가 「국민의 교육권」 문제라는 점을 인식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교과서 재판을 지원하는 움직임은 교과서 검정제를 폐지하고 교과서의 자유발행, 자유채택을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학생의 학습권을 기초로 한 「국민의 교육권」 문제는 헌법23조의 학문의 자유와 관련되면서 이를 국민의 지적 탐구의 자유로 내면화하려는 학문의 국민화운동이 일어났다. 落合延孝는 明治이래 교육은 위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여 국가의사에 속박(呪縛)당했던 국민이 교육을 권리로 의식하고 자각하기 시작한 사상창조운동이 일어났다고 하였다.<sup>26)</sup>

「국민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기둥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사물을 생각하는 사고능력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하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1958년 개정된 소,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으로 국가는 교육 내용을 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교육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학습지도요령의 존재는 받아들일 수

21) 君島和彦 「教科書裁判三二年と歴史學」 『歴史評論』 582, 1998. 10, 41쪽.

22) 家永는 교과서 검정에 의한 학문,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국민의 정신적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념을 위배하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위반하였다고 제소하였다.

그러므로 이 교과서 소송에서 법이론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교과서 검정제도가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제도위헌론, 검정 처분이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적용위헌론, 그리고 만약 이것들이 부정된다면 검정 과정에서 재량권남용이 있었다는 재량권남용론이 있다(菊池克美 「第3次教科書訴訟 東京高裁判決について」 『歴史學研究』 655, 1994. 2, 39쪽).

23)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24) 君島和彦 「教科書裁判三二年と歴史學」 위 논문, 43쪽.

25) 永原慶二, 위 논문.

26) 落合延孝 「教科書裁判運動の歴史」 『歴史評論』 290, 1974. 6

없는 것이었다. 교과서 재판은 1958년 이후의 학습지도요령(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은 1960년에 개정)과의 전면적인 대결이기도 하였다.<sup>27)</sup>

그후 家永교과서 제1차소송의 동경지방법재판소 판결이 衫本판결이 나온 후 4년 후인 1974년 7월에 나왔다. 제소한지 9년만에 일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高津판결). 이 판결에서는 衫本판결과 달리 국가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교육 내용에 대해 국가권력의 개입을 거의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국가교육권론을 취하였는데 이후 교육재판에서는 이 高津판결의 국가교육권론이 계승되었다.<sup>28)</sup> 그리고 검정은 사상 심사를 본래 목적으로 하지 않고 미리 심사하는 제도도 아니므로 검열이 아니라면서 교과서 검정제도는 합헌, 합법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家永의 원고와 검정의견에 대해 각각 역사적, 교육적으로 어느 쪽이 올바른지 재판관 스스로가 재검정을 함으로써 국가가 검정을 통해 학문, 사상, 교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를 묻는 소송의 본질을 왜곡하였다. 그러나 그 중 몇 군데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면서 국가가 원고측에 10만엔을 배상하도록 명하였다. 문부성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부분적인 「승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sup>29)</sup> 당시 많은 역사학자와 법률학자가 이 高津 판결이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하였다. 家永측은 곧 항소하였고 피고측도 附帶항소하였다.

高津판결이 나온 다음해 12월에 제2차 소송의 이심 판결이 나왔다. 東京 高等 裁判所는 문부성이 과거 합격시켰던 3건 6개소의 기술을 불합격시킨 것은 항소인(문부대신) 스스로가 정한 검정기준을 지키지 않고 ‘일관성과 안정성이 없고 매우 자의적인 처분’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衫本판결에서 다루었던 교육권 문제와 헌법, 교육기본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회피하고 검정행정의 자의성을 지적하는 데 그쳐 1심 판결보다 많이 후퇴하였지만, 家永측의 승소판결을 내렸다(峠上판결). 그러나 이에 대해 문부대신은 다시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여 1976년 4월부터 심리가 시작되었다.

#### IV. 보수 우익의 제2차 교과서 비판과 家永 제2차소송 최고재판소 판결

1977년 5월에 家永三郎과 永原慶二 등 247명의 교과서 집필자는 교과서 검정 개선을 문부대신에게 신청하였다. 그러나 그해 6월 문부성은 소학교와 중학교의 신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하고, 9월에는 「교과용 도서검정규칙」과 신「교과용도서검정기준」, 『동 실시세칙』을 발표하여 검정제도를 유지할 것을 밝히면서 ‘精選’이라는 이름으로 검정을 강화하였다. 국가

27) 横山伊徳「教科書裁判と學習指導要領」『歴史の法廷-家永教科書裁判と歴史學』大月書店, 1998, 1.

28) 君島和彦「教科書裁判三二年と歴史學」『歴史評論』582, 1998.10, 48쪽.

29) 君島和彦, 위 논문, 48쪽

에 의한 교육 통제가 강화되는 속에서 「교과서 국가통제에 반대하고 교사, 국민의 손에 의한 교과서 제작을 목표로 하는 제1회 교과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1978년 8월에 문부성은 신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하였고, 1979년 7월에는 고교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그 해 10월에 石井一朝는 「新 우려할 만한 교과서 문제」를 『旬刊 世界と日本』에 썼다. 보수 우익의 제2차 교과서 비판이 시작된 것이다. 1980년 1월부터 8월까지 자민당 기관지에서는 국어와 사회과 교과서 비판 캠페인을 벌였다.<sup>30)</sup>

교과서 비판 캠페인 진행되던 1980년 6월에 실시된 중의원과 참의원 동시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후 자민당 우파의 발언권이 강해졌다. 1980년 7월에 奥野誠亮법무대신은 閣議 후의 기자회견에서 “현행 교과서는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을 기피하고 있는 등 매우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그해 8월에 문부성은 총합안전보장에 대응하여 「나라를 지키는 기개」를 교육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10월에는 자민당이 교육문제연락회 속에 교과서 소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해 11월에는 일본정부의 經濟廣報센터에서 『경제교육』(I,II)를 발행하여 중학교의 新『公民』교과서와 고등학교의 『政治經濟』 교과서를 비판하였으며, 12월에는 자민당 政調會 文部部會의 전후교육의 재검토 소위원회의 하나로 교과서문제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81년 2월에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중학교사회과 교과서 내용이 논의되어 민사당의 塚本三郎서기장이 교과서가 편향되었다고 비난하였다. 그해 3월 교육학자 本多公榮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하여 교과서 공격이 터무니없다고 발언하였다. 자민당 교과서문제소위원회는 교육 통제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1981년 3월에 國定化를 포함하여 교과서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5월에는 검정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都道府縣 단위의 광역채택제를 확립하기 위해 교과서법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6월에는 교과서제도개혁안을 만들었다. 그해 11월에는 제13기 중앙교육심의회가 발족하여 교과서 제도 재검토를 심의하였다.

이러한 자민당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여 1981년 4월 교과서회사로 구성된 교과서협회는 업계로서 일련의 교과서 비판을 배려하여 이례적인 자주규제조치로 중학 『公民』교과서를 전면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 방침에 대해 그해 5월 교과서 집필자 7명은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반발하였다. 8월에는 교과서회사가 자민당에 7년간 1억엔의 정치헌금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발각되었다.

자민당의 교과서 제도 개악 움직임에 대항하여 교과서 소송을 지원하는 역사학자들과 시민들이 활발히 움직였다. 1979년 5월에 역사학연구회총회는 「최고재판소는 교과서 재판 제2차소송의 국가측 상고를 기각하라」고 결의하였고, 1980년 1월에는 교과서 소송 관계자

30) 遠山茂樹는 이를 앞으로 나올 최고재판소 판결을 의식한 캠페인이었다고 보았다(「あらためて教科書裁判に學ぶこと」『歴史學研究』508,1982.9,2쪽.0

모임에서 교과서 제2차 소송의 상고 기각을 요청하는 서명을 최고재판소에 제출하였다. 8월에는 학자, 문화인이 중심이 되어 「교과서문제를 생각하는 시민 모임」을 개최하여 「시민모임」을 발족하였다. 그해 3월과 11월에 자민당 정권의 교육과 교과서의 통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국민집회를 열었다.

이렇게 교과서를 둘러싸고 보수 지배층과 진보 국민들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던 1982년 4월 8일에 家永 교과서 제2차 소송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中村판결). 中村판결에서는 문부대신이 상고 이유로 든 세 가지 주장에 대해 심리하였다. 세가지 주장은 첫째 검정신청자는 발행자인 삼성당이지 家永이 아니라는 原告適格문제, 둘째 제2심 卍上판결에서 지적한 검정의 자의성과 위법성 여부, 셋째 1976년 4월1일부터 검정의 심사기준이 되는 고교학습지도요령이 전면 개정되었으므로 구 학습지도요령에 의한 검정을 거친 이 교과서의 부분개정검정은 불가능하므로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이익」은 없어졌다는 것이다.<sup>31)</sup>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는 셋째 「소송 이익」을 최대 논쟁점으로 하여 심리하였다. 판결문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이 전면 개정되어 본건 검정불합격처분 취소는 원칙적으로는 소송이익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부분 개정 검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이익」이 소실되지는 않는다고 문부성의 상고 이유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소송이익」에 관한 심리를 마치도록 하기 위해 原판결을 파기하여 東京高等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하였다. 문부성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었는데도, 6년을 끌다가 고등재판소로 환송한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었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일본 사법부의 보수화와 관련이 있다. 1960년대 진보적인 판결이 이어지자 1969년 자민당 정권은 사법부 통제 방침을 정하고, 점차 사법부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재판관을 배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을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소위 매파의 재판관으로 채워갔다. 자민당정권에 의해 최고재판관이 된 보수적인 사람들이 인사권을 중심으로 한 사법행정권을 악용하여 하급재판소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면서 점점 더 일본 사법부는 보수화되었다.<sup>32)</sup> 실제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杉本良吉의 좌배석이었던 岩井俊 재판관은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sup>33)</sup> 이렇게 사법권의 진정한 독립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웠다.

역사교육자협의회는 즉각 긴급성명을 내어 中村판결을 비난하였으며, 이날 밤 「4.8교과서재판 최고재판결항의, 교과서 반동화를 반격하는 국민대집회」가 열렸다. 그해 5월에 역사학연구회총회는 「교과서재판제2차소송 최고재판결에 항의한다」고 결의하였다.

31) 吉田武男, 위 논문, 37쪽.

32) 家永三郎「教科書裁判の今日」『歴史評論』487, 1990, 11, 新井章「司法の反動化と教科書裁判」『歴史評論』487, 1990, 11,

33) 宮崎章「現代史のなかの司法」『歴史學研究』616, 1991, 2, 16쪽.

## V.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과 「근린제국조항」

자민당 정권의 침략 전쟁 긍정 움직임은 표면화되어 1982년 4월13일 성립한 鈴木善幸 내각은 8월 15일을 「전몰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祈念하는 날」로 결정하였다. 중앙교육심의 회에서는 교과서채택에서 채택지구를 광역화하고 都道府縣 교육위원회의 개입을 강화하도록 하는 안을 만들어 교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자민당 우파의 압력은 문부성의 역사 교과서 검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일본 문부성은 「精選」이라는 이름 하에 검정을 강화하였다. 1982년 6월 26일 소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에서 「침략」이라는 용어를 비롯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서술을 수정하도록 일본 문부성이 권고하였다는 것이 일본 매스컴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자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국민들이 항의하였다. 6월 30일 중국의 『인민일보』는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침략전쟁을 미화하였다고 비판하였고 7월 14일에는 모스크바방송도 일본이 「역사위조의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7월 20일 『동아일보』가 교과서 검정 결과를 「한일관계의 적신호」라고 보도하였다.

『인민일보』는 7월23일 일본 교과서 검정은 중국인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대 캠페인을 개시하였는데 마침 이날 小川문부대신이 일교조 위원장과 회담 중에 교과서 검정은 내정문제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7월 24일 『인민일보』에서는 이에 대한 문부대신의 釋明을 요구하였고 한국의 매스컴에서도 이를 망언으로 보도하였다. 북한도 7월 25일 『노동신문』을 통해 일본이 역사를 위조하려 한다며 비판하였으며, 7월 27일에는 홍콩의 『明報』가 일본의 검정을 오래된 보수세력이 온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8월 4일에는 필리핀에서도 『타임즈 저널』등을 비롯한 신문에서 일본의 교과서 검정을 비판하였고, 8월 5일에는 싱가포르 영자지가 교과서 검정문제를 비판하였으며, 소련의 『프라우다』도 역사교과서 개찬을 비판하였다. 8월 6일에는 국영베트남 통신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동남아시아 인민의 명예를 상처주는 중대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8월 8일에는 미국의 CBS방송이 「역사를 바꿔 쓰는 일본」에 대해 보도하였고, 8월 9일에는 말레이시아의 『브리타 하리안』이 일본을 비판하는 사실을 썼다. 8월 12일에는 북한의 『노동신문』이 일본반동의 교과서 개찬이라는 논설을 썼으며, 타이의 華字신문 기자협회가 항의문을 일본정부에 전달하였다. 8월14일에는 타이의 네 종류 신문에서 침략의 역사 改竄을 비판하는 사실을 실었다. 8월 15일에는 필리핀의 『월드뉴스』에서 일본의 역사 개찬을 비판하였다.

아시아 각 지역의 국가들의 비판의 바탕에는 일본 정부, 문부성의 역사인식과 기본자세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sup>34)</sup> 이번 교과서 검정 문제를 계기로 아시아의 나라들은 일본정부가

과연 과거 침략사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를 확실히 청산하려는 자세가 있는지 의심하게 되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중국과 한국에서 나왔다.<sup>34)</sup> 중국 정부는 7월 26일에 교과서 改竄이 중일공동성명을 이반한다면서 유감이라고 정식으로 항의하였고, 8월1일에는 교과서 검정문제를 이유로 일본 문부대신의 訪中을 거부하여 문부대신의 방중이 연기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도 8월 3일 일본의 교과서 검정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하면서 기술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교과서 검정문제가 외교 문제가 되자 8월 4일 鈴木善幸 수상은 정부 자민당 연락 회의에서 교과서 검정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8월 5일 일본정부는 외무성 정보문화국장, 문부성 학술국제국장을 중국과 한국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우리나라 국회는 일본교과서 내용의 왜곡을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결의를 채택하였고, 중국은 「침략」이라는 용어는 원칙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교과서 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8월 6일 우리나라는 일본정부가 파견하는 외무성 정보문화국장, 문부성 학술국제국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국장은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중국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釋明하였다. 일본정부는 釋明을 위해 8월 21일 한국에 자민당 교과서 문제 대책 소위원장과 자민당 전 문교부장을 보냈다. 이들이 한국에 머물고 있던 8월 23일 鈴木善幸 수장은 교과서의 기술을 더 적절하게 수정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8월 23일 중국에 파견되었던 국장들과 8월25일 한국에 파견되었던 자민당 교과서 대책 담당이 돌아오고 난 직후, 8월 26일 일본정부는 宮澤喜一 내각관방장관의 담화를 발표하여, "아시아 제국과 우호친선을 중시하기 위해 교과서 내용의 비판을 충분히 경청하여 정부가 책임지고 수정하겠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교과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거쳐 검정 기준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다음 검정을 1년 빨리 하겠다고 補足설명하였다. 이 담화에 대해 한국정부는 다음날 즉각 일본정부의 견해를 받아들여 양국 외교 문제를 수습하겠다고 하면서도 3년 후에 시정하겠다는 것은 불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8월 28일 일본정부의 견해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8월 30일 중국의 『인민일보』는 일본정부가 잘못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앞서 표명한 일본정부의 견해의 틀 속에서 중국을 설득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8월 31일 중국의 谷 국무위원이 「진출」을 언제 「침략」으로 고칠 것인지 확실히 하도록 요구하였고, 우리나라 외무부의 아시아국장이 後藤 일본공사를 불러 시정 공약을 직시 실행하고 재검정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하였다.

34) 三上昭彦 「教科書改善の國際協力と日本の教育運動」 『教科書を日韓協力で考える』大月書店, 1993, 237쪽.

35) 북한은 7월 31일에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장 명의로 교과서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9월 1일에는 주중 일본대사관의 渡邊공사가 일시 귀국하여 외무성 수뇌와 중국을 설득할 방법에 관해 협의하였다. 9월 4일부터 9일까지 주한 後藤공사가 우리나라 외무부 아시아 국장과 만나고 중국에서는 鹿取 주중대사가 중국 외무차관을 만나 일본 정부의 견해에 대해 보족설명하였다. 한국정부와 중국정부는 9월 9일 불만은 있지만 보족설명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이번 교과서 문제를 더 이상 외교 문제로 삼지 않겠다고 하였다. 9월 27일 일본의 鈴木善幸수상이 조자양 중국수상과 회담하여 교과서 문제의 정치적 결착을 확인하였다. 같은 날 한국정부는 「일본교과서 한국관계 내용 검토 및 의견」(1982.9, 대한민국문교부)를 일본정부에 전하였다.

중국과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 때문에 일본 문부성은 새로운 검정 기준을 만들 수 밖에 없었다. 문부성은 교과서심의회 제2부회 역사소위원회에 다음 검정부터 적용할 새 검정 방침을 정하도록 하였다. 교과서심의회 제2부회는 10월 15일 「침략」등 11항목에 수정의견을 달지 않기로 하는 방침을 정하였고, 11월 16일에는 새 교과서 검정기준을 정하였다. 문부성은 11월 24일 새 검정기준을 고시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근린 아시아 제국과의 사이의 근현대 역사적 事象을 취급할 때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할 것”라는 「근린제국조항」<sup>36)</sup>이 추가되었다.

1982년 한국정부의 수정 요구에 대해 일본 문부성은 1983년과 1984년의 교과서 부분개정 검정 과정에서 교과서 검정 심의회 위원과 교과서 조사관의 재량권을 발휘하여<sup>37)</sup> 어느 정도 반영하였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보낸 「일본교과서 한국관계 내용 검토 및 의견」에서는 즉각 수정이 필요한 19개 항목과 조기 수정이 필요한 19개 항목,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7개항목이 들어 있었다. 즉각 수정이 필요한 19개 항목은 일본의 한국침략, 제2차 한일협약, 고종 퇴위, 한일신협약, 의병, 안중근 의사 의거, 한국병합, 무단통치, 토지약탈, 3.1독립운동, 관동대진재, 신사참배강요, 한국어 말살, 창씨개명, 징병, 징용, 정신대, 항일독립운동, 일제의 강점연장에 관한 것이었다.

일본 외무성 동북아시아과는 1983년 6월 30일 1984년도용 중,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공표된 직후 1982년과 비교하여 변화한 것을 정리하여 한국의 외무부와 중국의 외교부에 전하였고 양국 정부는 통보에 감사한다고 하였다. 이 때 한국정부가 요구한 19개 항목 중에서 7개 항목이 수정되었다.

1984년 6월 30일에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사례를 발표하였는데 출판노동자연맹과 사회과간담회는 통제가 강화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번에도 일본 외무성 동북아시아과는 1982년과 비교하여 새로 변화한 것을 중국과 한국 정부에 알렸다. 중국과 한국도 아직 불만이 있다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한국정부가 수정요구한 항목 중에 8개 항목이 추가수정되

36) 『義務教育諸學校教科用圖書檢定基準』第3章 各教科固有の條件, 社會科

37) 坂井俊樹 「一九八二年, 日本の歴史教科書問題と韓國の對應」 『現代韓國における歴史教育の成立と葛藤』 御茶の水書房, 2003, 279쪽.

였으나 4개 항목은 수정되지 않았다. 4개 항목은 안중근의사의 의거(피침략국의 애국 의거를 범죄시하는 시각에서 기술), 관동대진재(조선인 학살사건은 일본이 고의로 일으킨 사건인데 우발적 사건으로 표현하고 희생자 수를 일본정부기관의 발표에만 의거), 정신대(강제동원 사실을 약하게 표현), 항일독립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립을 무시)였다.

일본 외무성 동북 아시아과에서 보낸 검정 결과 보고를 한국 측에서는 일본 정부의 「是正通告」로 이해하였던 듯하다. 당시 문교부 장관은 이러한 시정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믿는다는 발언을 하고 있으며,<sup>38)</sup> 신문에서는 수정된 항목을 「시정통고」한 항목으로, 시정하지 않은 항목을 「보류」한 항목으로 발표하였다.<sup>39)</sup>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한국 정부의 시정 요구에 대해 일본 문부성이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은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미약했다는 지적이 일본의 역사교육 연구자에게서 나오고 있다.

1984년 9월 전두환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昭和천황은 궁중만찬회의 인사말에서 양국 사이의 불행한 과거에 대해 유감이라는 말을 하였다. 과거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며 한국인을 침략전쟁의 희생자로 만들었던 최고 책임자가 피해국에 한 최초이자 최후의 말이였다. 이 말을 한 것은 昭和천황이지만 이것은 일본 정부의 생각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말이였다.

## VI. 1982년 교과서 파동 후 일본의 역사교육

그러면 1982년 일본 교과서 검정에 대한 국제적인 반발은 일본의 교과서 검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일본의 교과서 검정에 대해 중국과 한국에서 비판이 시작된 7월 1일 문부성은 상근 조사관 2명을 증원하여 교과서 검정을 강화하였다. 검정 결과에 대한 일본 국내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중국과 한국의 반발이 일본 신문에 보도되던 7월 21일, 日教組 교육제도 검토위원회는 교과서 검정은 문부성이 아니라 독립 기관에서 담당하고 교과서 채택 권한을 교사 개인에게 갖도록 하자는 교과서제도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都道府縣 광역채택제와 교과서 검정 강화를 추구하던 문부성의 움직임과 반대되는 것이였다.

7월 29일에는 沖繩 주민 살해 서술 삭제와 관련하여 沖繩에서 삭제 부분 부활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일어났다. 7월 30일에는 일본 카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와 일본기독교단, 일본크리스토포교협의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역사학연구회도 「침략 역사를 개찬하는 교과서검정에 다시 항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는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sup>40)</sup> 즉 일본 정부와 문부성이 과거 역사에 대해 전혀 반성

38) 坂井俊樹, 위 논문, 279쪽.

39) 君島和彦, 위 논문, 46쪽.

하지 않으면서 검정제도를 이용하여 교과서 집필자에 영향을 끼쳐 역사사실을 왜곡하여 교육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7월 31일에는 「교과서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이 교과서를 수정하라고 여야 국회 의원에게 요구하였다. 終戰日인 8월 15일에는 「교과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집회가 열렸으며, 「민주교육을 추진하는 沖繩縣民회의」는 주민 학살 기술을 부활시키라는 1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8월 18일에는 사회과 간담회 준비회가 문부성에 검정 폐지를 포함한 교과서 개선을 요구하였다.

국제적인 반발 속에 8월 23일에 鈴木善幸수상은 교과서의 기술을 보다 적절하게 하겠다고 수정할 의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날 북해도 우타리협회는 문부성에 교과서 기술의 訂正을 요구하는 항의서를 전달하였다. 8월 29일에는 교과서문제를 생각하는 역사연구자, 교육자의 집회가 있었다. 9월 4일에는 沖繩縣의회가 일본군이 沖繩戰에서 주민을 학살하였다는 내용을 검정에서 삭제한 것을 다시 기술하도록 하라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날 사회과 간담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검정제도의 개선과 검정교과서의 「正誤訂正」을 하기로 확인하였다. 9월 7일에는 우파 신문 『산케이 신문』이 8월 30일 자사의 논설에서 침략문제에 대해 검정에서 사실을 말소한 예는 하나도 없었다고 쓴 것은 誤報라고 하면서 독자에게 사과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날 沖繩縣 교육진흥회 대표는 문부성에 주민 학

40) 『歴史學研究』508, 1982, 9, 14쪽.

〈聲明〉침략 역사를 개찬하는 교과서 검정에 다시 항의한다.

역사학연구회위원회

우리 역사학연구회는 전부터 많은 국민, 역사학 관계자와 함께 교과서 검정제도에 반대하고 그 위헌성, 위법성을 계속 비판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문부성은 우리들의 목소리에 일절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부당한 검정행정을 매년 강화해왔다. 그것에 의해 교과서는 역사 사실도 부정하는 부당한 내용으로 개편되어 온 것이다.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에게 침략당한 아시아의 나라들로부터 교과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것도 일본국민의 검정비판을 경청하려 하지 않아 온 정부, 문부성의 독선적 대응이 불러온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검정에서 일본의 「침략」은 모두 「진출」 「침공」 등으로 고쳐지고 남경대학살 기술에서는 중국군의 완강한 저항에 그 한 원인이 있는 것처럼 개찬하고 있다. 조선관계에서는 신사참배의 「강제」가 「장려」로, 노동자 일본 「강제연행」이 「징용령의 적용」으로 고쳐졌다. 이들은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억압 사실을 은폐하고 식민지 지배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군다나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침략 사실의 은폐가 마치 교과서 집필자의 자발성에 의한 것인 것처럼 문부성이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침략」을 「진출」 「침공」으로 수정한 것이 탄압적인 교과서 검정이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문부성에 대해 우리는 강한 분노를 느낀다.

외국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더군다나 과거 역사사실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정부, 문부성의 태도야말로 아시아 나라들의 민중과의 연대를 해치는 것이고 교과서 문제가 국제화한 진정한 원인이다. 단순히 외교질충으로 속이려 한다면 안된다.

우리들은 침략 역사를 개찬하려 하는 교과서 검정에 항의하고 여기에 위헌, 위법의 교과서 검정 제도의 폐지를 강하게 요구함과 더불어 교육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결의를 새롭게 한다.

1982년 7월 30일

살기술을 부활시키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의 움직임에 대해 문부성은 이번 검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9월 10일 문부성의 심의관과 검정과장, 교과서 관리과장이 교과서협회 회장과 만나 행정지도를 통해 그 해 검정에 잘못은 없었다고 강변하면서 「正誤訂正」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알렸다. 사회과 간담회는 9월 17일에 문부성에 「正誤訂正」을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9월 27일 교과서협회와 교과서회사에 「正誤訂正」수속을 밟아달라고 요청하였다. 10월 14일 清水書院의 『고등학교 세계사』가 처음으로 「正誤訂正」을 신청하였으나 문부성을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검정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문부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10월 16일 「교과서를 생각하는 교사, 학생, 시민모임」이 탄생하였고, 10월 20일에 일본학술회의 학문,사상의 자유위원회는 총회에서 「교과서 문제에 관한 견해」를 발표하였다.

교과서 집필자의 모임이 10월 30일 만들어져, 11월 1일에 교과서 심의회 제2부회에 「正誤訂正」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였다. 11월 12일에 自由書房의 『高校新日本史』가, 11월 25일에는 實教出版의 『高校日本史』 『高校世界史』 각 2종이, 12월 2일에는 家永三郎의 三省堂 『新日本史』 등 고교 일본사 교과서 2종과 세계사교과서 1책이 「正誤訂正」을 신청하였으나 문부성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월 3일 清水書院의 『고교 세계사』가 「正誤訂正」을 재신청한 것만은 왜일인지 조선토지문제를 제외하도록 하고 수리하였다. 사회과 간담회는 대부분의 교과서의 「正誤訂正」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되는 곳에 대해 교사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정정하도록 하라고 호소하였다.

「正誤訂正」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일본정부가 국제적인 압력 속에서 1982년 말에 마련된 검정 기준은 이후 교과서와 교과서 검정에 영향을 끼쳤다. 「침략」에 대해 수정의견을 달 수 없지만, 침략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 즉 「조선인강제연행」이나 3.1독립운동에서 탄압당한 사람 수, 관동대진재 때의 재일한 국인 학살자수 등은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새 검정 방침<sup>41)</sup>은 일본의 침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교육운동을 가져왔다. 그리고 “근린 아시아 제국과의 사이의 근현대 역사적 事象을 취급할 때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할 것”라는 「근린제국조항」은 일본의 침략사실을 더 많이 적게 하였다.

이후 일본 각지에 퍼져있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의 군수공장 등 전쟁유적을 조사하는 역사교육 실천운동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피해나 반전 저항 사실이나 과거한일 민중들의 우호관계에 관한 사실도 밝혀내었다. 전쟁 유적을 자료관으로 활용하여 견학자들이 역사를 바로 인식하게 하는 운동도 전개하여 시민들의 전쟁학습 운동으로 발전시켰다. <sup>42)</sup>한국, 북한과 연구자, 교육자의 교류도 진전되었다.

41) 徳武敏夫 『教科書裁判はいま』 あずみの書房, 1991. 君島和彦 「教科書検定と日本の教科書」 『教科書を日韓協力で考える』 大月書店, 1993, 45쪽.

## VII. 家永三郎의 제3차 소송과 교과서 재판종결

일본의 1980년대 이후의 역사교육의 변화에 家永三郎의 교과서 재판이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제1차소송의 제2심과 제2차소송 고등재판소 환송심이 진행 중이었던 1984년 1월 19일 家永三郎은 1980년도의 검정 처분 중 3항목과 1982년 12월 2일 「正誤訂正」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처분, 1983년도 부분 개정 검정신청에 대한 처분 중 3항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소하였다(제3차소송). 1979년부터 시작된 보수 우익의 교과서 공격과 문부성의 검정 강화에 대응한 것이었다. 제1차 소송의 경험을 통해 논점을 적게 하고 「교과서검정소송을 지원하는 역사학관계자의 모임」이 중심이 되어, 연구회를 조직하여 소송의 논점 부분을 연구하였다.<sup>43)</sup>

1986년 3월 19일 家永의 제1차소송에 대한 동경고등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鈴木판결). 제1심판결이 나온지 12년만에 나온 이심판결이었다. 鈴木판결은 검정제도는 합헌, 합법이라고 하면서, 제1심에서 인정한 재량권 남용까지 인정하지 않고 원고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물리쳤다.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었다. 교과서 재판사상 최저, 최악의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판결문은 1976년 5월 21일의 旭川학력테스트사건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결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고 문부대신에게 재량권을 더 주어 검정 행정을 전면적으로 추인하였다. 그런데 鈴木재판장 이하 3명의 담당재판관은 모두 최고재판소의 조사관 또는 사무총국 소속이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주임판사로 鈴木판결을 기안한 우배석 판사는 이 재판의 중반부에 최고재판소에서 전근한 사람이었다. 사회적, 정치적 성격이 강한 재판을 최고재판소 근무 경력이 있는 재판관이 담당하도록 인사배치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sup>44)</sup> 鈴木판결 이후 일련의 판결은 보수화된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고 있다.

1989년 6월 27일에는 제2차 소송 환송심의 판결이 동경고등재판소에서 나왔다(丹野판결). 원고에게 소송 이익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하였다. 그런데 丹野재판장과 우배석이 모두 최고재판소 조사관과 사무총국 소속이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앞의 鈴木판결과 마찬가지로 최고재판소의 영향이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89년 10월 3일 家永의 제3차 소송에 대해 5년만에 東京 지방재판소의 제1심 판결이 나왔다(加藤판결). 이 판결도 앞의 鈴木판결과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국가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국가의 교과서 검정제도와 그 운용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加藤재판장과 우배석이 최고재판소 조사관과 사무총국 소속이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sup>45)</sup>는 점에서 鈴木판결과 丹野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최고재판소의 영향을 추측할 수 있

42) 「地域に根ざし平和と民主主義をきづく歴史教育」 「歴史教育50年のあゆみと課題」 295-296쪽.

43) 君島和彦, 위 논문, 51쪽.

44) 新井章, 위 논문, 36-37쪽.

다. 그러나 문부성의 「草莽隊」에 대한 검정 의견이 「사회통념상 매우 타당성을 결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고 또 이를 남용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재량권의 남용을 일부 인정한 家永측의 일부 승소 판결이었다. 제1차소송, 제2차소송과는 달리 제3차소송에서 원고측은 재량권 남용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재판에 준비하였다. 「초망대」를 제외한 나머지 검정 의견은 「합리적 근거가 없고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家永은 항소하였다.

1993년 3월 家永교과서 제1차 소송에 대해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다(可部판결). 可部판결은 鈴木판결을 추인하여 검정제도는 합헌이라고 하였고, 국가가 검정 제도를 운용하면서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가 있었는가?」<sup>46)</sup>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재량권 남용도 인정하지 않아 이로써 제1차소송은 소송을 제기한지 28년만에 원고 측의 전면 패소로 끝났다.

1993년 8월 10일 細川護熙수상이 과거의 전쟁이 침략전쟁이었음을 표명하여, 전후 처음으로 일본정부가 침략전쟁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8월 23일에는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죄한다고 하였고, 그해 11월 7일에도 식민지 지배에 대해 가해자로서 반성한다고 발언하였다.

細川護熙 수상의 침략전쟁 인정 발언 후에 1993년 10월 20일 동경 고등재판소에서 제3차소송의 제2심 판결이 나왔다(川上판결). 이 판결에서는 제1심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草莽隊」 외에 「南京大虐殺」과 「일본군의 잔학행위(부녀폭행)」을 추가하여 모두 3개소의 검정 의견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원고측의 일부 승소였다. 細川내각의 문부대신은 상고하지 않아 1994년 5월 세 군데의 검정에 대해서는 위법임이 확정되었다. 家永은 나머지 부분 기술에 대한 검정의 위법성을 즉시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다.

1997년 제3차소송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다(大野판결). 이 판결은 4년 전의 제1차소송 최고재판소 판결과 마찬가지로 검정은 헌법 26조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여 검정합헌론을 취하였다. 검정에서 불합격되더라도 일반 도서로서 발행할 수 있어, 발표금지 목적이거나 발표 전의 심사 등의 특질이 없으므로 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 2항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sup>47)</sup>

그러나 문부성의 검정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제2심에서 위법 판결이 난 「초망대」와 「年功半減令, 남경대학살, (남경점령시)일본군의 부녀폭행」의 3건 이외에 새로 「731부대」에 대해 교과서 서술을 수정하도록 강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정하여, 국가가 모두 40만엔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명하였다.

45) 新井章, 위 논문, 37쪽.

46) “原稿의 기술 내용 또는 결함을 지적할 근거가 될 검정 당시의 학설상황, 교육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검정기준을 위반하였다는 평가 등에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가 있어, 문부대신의 판단이 이에 의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右 판단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47) 君島和彦, 위 논문, 45쪽.

이에 대해 역사학연구회는 제1차, 제2차 소송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여, 교과서 검정이 가진 위법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최고재판소 판결이라는 형태로 국민 앞에 제시한 의의를 일단 인정하였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검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可部판결에서 논점이 된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가 있었는가」하는 기준을 답습하여 「沖繩戰에서 일본군의 주민살해」 「화북에서 일본군의 부녀폭행」 「청일전쟁 중 조선인민의 반일투쟁」 「일본의 중국침략」 「親鸞의 조정에 대한 항의」 등 5건의 검정을 위법이라고 판정하지 않은 것과 제1차 소송 이래 일관해서 견지해온 교과서 검정의 위헌성 주장을 각하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하였다.<sup>48)</sup>

이상 32년간에 걸친 교과서 재판을 재판사적으로 본다면 국민의 교육권과 사상의 자유를 중시한 최초 판결인 衫本판결이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다. 그 후의 판결은 모두 국가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검정 제도를 합헌이라고 하고 검정 의견에서 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원래 교과서 소송에서 원고측이 추구했던 검정제도 위헌을 획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일본의 사법부가 정치권에서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문 보도 등을 통해 일본 국민들이 국가, 문부성, 법원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판결에서는 바라던 성과를 얻지 못 했지만, 국민들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면서 국민적인 사상, 문화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sup>49)</sup>

1997년 제3차 家永 교과서 검정 소송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해 역사학연구회는 성명을 발표하였다.<sup>50)</sup> 성명에서는 승소냐 패소냐 그 자체보다 교과서 재판 과정을 통해 역사학자들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하였던 것, 그리고 정부, 문부성의 교과서 공격에 대해 반격하면서 검정의 완화를 쟁취하여 전쟁 책임을 확실하게 기술하게 되었던 것을 성과로 들고 있다.

교과서 재판을 통해 검정에서 문부성의 재량권을 제한받게 되었다. 그리고 家永의 교과서 재판을 지원하였던 사람들 속에 대부분의 교과서 저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들은 재판 과정을 통해 나온 논점을 의식하여 교과서 집필을 통해 내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sup>51)</sup> 특히 전쟁 책임에 관한 논의는 1989년 1월 昭和천황의 죽음으로 昭和시대가 끝

48) 歴史學研究會委員會「第3次家永教科書檢定訴訟最高裁判決についての聲明」『歴史學研究』706, 1998, 1

49) 菊池克美「教科書訴訟とは何か」, 위 논문, 25쪽.

50) 「第3次家永教科書檢定訴訟最高裁判決についての聲明」『歴史學研究』, 706, 1998, 1, 3쪽

“이 소송에 촉발되어 국가, 여성, 전쟁 가해 등에 관한 많은 연구업적이 출현하여 종래의 연구의 공백이 극복되었다. 그리고 이 사이 제1차, 제2차 교과서 공격에 대해 유효한 반격을 하였다. 또 소송 진행과정과 함께 교과서 검정의 완화가 실현되었고, 전쟁의 진실을 기술할 수 있는 조건을 한발 한발 확보하여 전쟁책임을 애매하게 하려는 풍조를 개선하는 데 공헌하여 왔다.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기초로 문부성의 검정 행정을 앞으로 감시하고 자유주의사관 연구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서 공격에 반격을 가해 보다 좋은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다.”

51) 君島和彦, 위 논문, 54쪽.

나고 「중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제국주의 일본이 아시아에 끼친 가해를 인식하여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는 교육 실천이 이루어졌다. 소, 중, 고교의 교과서에서도 아시아에 대한 가해 사실,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 실태에 대해 지면이 늘어났다.

1993년 6월에 문부성이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모든 일본사 교과서에 「중군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들어갔다. 1996년 6월 문부성이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모든 역사교과서에 「중군위안부」를 기술하였다.

## Ⅷ. 보수 우익의 교과서 『新編日本史』와 문부성

1980년대는 보수 우익이 교과서를 만든 시기이기도 하였는데, 이 교과서에 대해 일본 문부성이 어떤 검정을 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1982년 10월 30일 보수 우익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sup>52)</sup>가 東京에서 교과서문제로 회의하여 역사교과서 제작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업을 좌익학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직접 교과서를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1984년 3월에 村尾次郎이 감수책임자가 되었다. 村尾次郎은 皇國史觀의 대표적인 학자 平泉澄의 제자로, 19년간 문부성의 일본사 주임교과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家永三郎 교과서를 불합격시켰던 사람이다. 1984년 4월 고교 일본사 교과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저작자 9명 중에 3명은 교과서 재판에서 국가측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이고, 3명은 교과서 검정관 또는 「교과서정상화국민회의」의 회원이었다. 그 밖에 일본 교사회 소속 교사가 있었고, 독어학자, 불문학자 등 역사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참가하였다.<sup>53)</sup>

이들이 고등학교 교과서로 『新編日本史』(原書房)를 써서 1985년 8월29일 문부성에 검정을 신청하였다. 이 교과서를 지원하기라도 하는 듯 그해 10월 森山欽司, 海部俊樹, 林健太郎 등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교과서문제를 생각하는 의원연맹」을 만들었다. 그 취지서에서는 “현재 교과서의 문제점을 빨리 시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올바른 교과서를 청소년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은 오늘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긴급 과제이고 우리들 국회의원의 책임으로 생각한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자민당 보수 우익의 움직임은 『新編日本史』의 검정 합격과정에 영향을 끼쳤다.<sup>54)</sup>

52) 元號법제화실현국민회의의 운동을 계승하여 1981년 10월에 발족하였다. 神社本廳 등의 종교 단체, 일본교사회(反日教組 교사단체)등의 교육단체, 경제단체 등 민간의 약 1000정도의 단체와 개인이 가입하였다. 전국 都道府縣에 지부가 있다. 헌법개정, 나라를 지키는 국민의식 고양, 교육의 정상화를 주제로 운동을 벌였다.

53) 山形洋 「『新編日本史』の基本的問題點」(『軍國教科書「新編日本史」を斬る(増補版)』福岡縣歴史教育者協議會, 1986, 11).

1986년 1월 31일 문부성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 제2부회는 초보적인 오류 등 기술 내용에 문제점이 많은 『신편일본사』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결국 많은 부분을 고쳐쓰도록 하여 다시 심의회에서 검토하기로 하는 조건부합격 결정을 내렸다. 3월 20일 문부성이 무려 420개소의 수정, 개선 의견을 집필자에게 통달하여 집필자들은 4월 11일 고친 内閣本을 제출하였다. 그후 문부성과 집필자 사이에 기술 내용 조정이 5월 19일까지 이어졌다. 5월 27일에 검정조사심의회 제2부회에서 内閣本에서 30개소를 더 수정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일단 합격시켰고, 이 날 저자들이 그 내용의 일부를 공표하자 각 신문에서는 이를 보도하였다.

5월 30일 우리나라의 신문에서 이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킨 일본 정부를 비난하였다. 6월 4일 중국 외교부국장이 기자회견에서 “역사사실을 왜곡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어떠한 언론, 행동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이 교과서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당시 선거 유세 중이었던 中曾根康弘수상은 이 문제가 1982년 교과서 파동 때처럼 파문을 일으킨다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6월 6일 海部俊樹 문부대신에게 1982년의 宮澤 관방장관의 담화의 취지를 살려 충분히 배려하도록 지시하였고, 13일에도 잘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6월 7일 한국외무부에서는 한국 관계 부분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하였다. 6월 8일부터 10일에 걸쳐 일본 문부성은 집필자에게 「壯士 안중근」을 「지도자 안중근」으로 고치고 남경사건에 「대학살」을 부활시키도록 하는 등 6군대를 수정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집필자에게는 이 수정이 5월30일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하고 비밀을 지키도록 요청하였다. 6월 10일 海部 문부대신은 기자회견에서 근제제국과의 우호관계에 입각하여 검정을 했다고 하였다. 6월 18일 中曾根康弘수상은 일부 나라가 약간 의견을 전하였을 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後藤田관방장관에게 대응을 지시하였다고 하였다. 6월 20일에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이 原書房사장에게 『신편일본사』출판을 단념하도록 요청하였다는 것이 보도되자 외무성 수뇌는 단지 일반적인 의견교환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6월 27일 문부성은 이례적으로 약 30항목 80개소에 걸쳐 구체적인 文例를 제시한 세 번째 수정요구를 집필자에게 보냈다. 6월 28일에 견본본 5000부 인쇄가 끝났다. 6월 29일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 간부와 집필자가 긴급회의하여 외압에 굴복하면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것을 참으면서라도 어쨌든 교과서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7월 1일 이 모임의 위원장이 7월 1일 선거 유세중이었던 海部문부대신과 연락하여 7월 3일에 만나 수정요구에 응하겠다고 하였다. 문부성은 7월 2일부터 교과서검정심의회 위원 20명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수정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승인을 얻었다. 7월 3일 문부성은 다시

54) 『軍國教科書「新編日本史」を斬る(増補版)』(위 책)에 실린 『朝日新聞』7月10日字 「復古調教科書」에 이 교과서 검정과정의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천황의 인간 선언에 관한 기술 등을 수정하라는 제4차 수정 요구를 하였다. 7월 4일 村尾次郎이 전권을 위임받고 문부성과 조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7월 7일 문부성은 교과서검정 심의회 제2부회와 총괄부회를 개최하여 수정내용과 경위를 보고하고 승낙을 얻어 이 교과서의 검정합격을 통지하였다.

7월 8일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의 위원장과 집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여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선거와 겹쳐 정부가 신경이 예민해졌던 것은 운이 나빴다. 자민당이 대승한 뒤였다면 정부가 대처하는 방법도 달랐을 것은 아닌가?” “우리들의 운동은 개혁을 궁극 목적으로 한다. 교과서 발행도 그 큰 흐름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많은 부분에 문부성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러번 수정을 거쳐 나온 교과서는 처음과 많이 달라 이 교과서는 문부성이 함께 쓴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인식에 초보적인 오류가 많고, 역사 의식에도 문제점이 많은 교과서를 한국과 중국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합격시키고 나서 이례적으로 여러 번 고쳐가면서까지 합격시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이 교과서가 보수, 우익이 쓴 교과서라는 점, 그리고 천황중심사관, 독선적인 자국중심사관, 전쟁 무책임론 등 기본적인 관점이 문부성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교과서를 검정하면서는 문부성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통설을 적지 않았다고 불합격처분을 내렸으나, 『신편일본사』는 통설에 기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상반되는 기술까지 있음에도 합격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문부성이 처음부터 이 교과서를 합격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확실해졌다. 『신편일본사』 검정은 다시 한번 문부성에 의해 검정제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의식의 저류에 어떤 것이 흐르고 있는지 짐작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식은 다시 1990년대 중반의 제3차 교과서 공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토 론 문

## 「전후 일본의 검정제 역사 교과서 문제」

현 명 철(경기고)

### ◎ 본 발표의 의미

-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교과서 검정제도를 둘러싼 일본 내의 상황을 분석, 家永 재판을 중심으로 일본 문부성의 검정과정의 구체적인 모습과 문제점을 확인  
→ 뒤늦은 감이 있지만 기본을 탄탄히 하는 본격적인 작업.

### ◎ 논지

- 선출직 교육위원회의 검정(임시로 문부대신이 담당)
- 1950년대 「역코스」의 흐름 속에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됨
- 1956년 교과서 조사관 제도가 발족
- 1957년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의 1/3이 탈락
- 1958년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으로 문부성의 통제 강화(애국심 교육 강화)  
상근 교과서 조사관 증원, 고교 세계사 교과서 무더기 탈락, 교원근무평정, 일제학력테스트 등 국가의 통제를 강화.
- 1963년 家永교과서 불합격판정→수정 제출→조건부 합격(323개 수정요구)
- 1965년 家永,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1차소송)  
“현행 검정이 교육행정의 정당한 틀을 벗어난 위법적인 권력 행사”임을 밝히고자 함.  
「교과서 검정 소송을 지원하는 전국연락회」창립  
↔ 문부성 및 우익단체 「교과서문제협의회」발족.  
“좌익혁명을 의도하는 혁명교육운동이며 반체제 활동”이라고 비판.
- 1967년 家永, 2차소송 제기  
(1966년에 개정판 교과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 1969년 「교과서문제협의회」는 「교과서를 지키는 모임」을 만들.
- 1970년 동경지방법재판소 : 2차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衫本판결).  
수정의견은 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21조 2항의 위헌이며 또한 교육기본법 10조를 위반한 위법이라고 판결. 그러나 교과서 검정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함.
- 1974년 제1차 소송에 대한 판결(高津판결)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지만, 교과서 검정 제도는 합헌, 합법이라고 함.

- 1975년 제2차 소송 2심판결(卍上판결)  
위헌, 위법 문제를 회피하고 검정행정의 자의성을 지적하여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령.
- 1977년 문부성은 검정을 강화. 「신학습지도요령」 「교과용도서검정규칙」 등 발표.
- 1979년 보수우익의 제2차 교과서 비판  
자민당 기관지에서는 국어와 사회과 교과서 비판 캠페인을 벌임.
- 1980년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교육을 통제하려는 경향도 강해짐.
- 1981년 교과서 회사로 구성된 교과서협회는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여 『공민』 교과서 전면개정 방침 결정.
- 1982년 2차소송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결(中村판결)  
고등법원으로 환송.
- 1982년 검정에서 침략이라는 용어를 비롯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서술을 수정하도록 문부성이 권고하였음이 일본 매스컴을 통해 알려짐.  
→ 교과서 파동. → 근린제국조항 추가.
- 1984년 家永, 제3차소송 제기
- 1985년 보수우익 『신평일본사(原書房)』 검정신청,  
자민당 국회의원 「교과서문제를 생각하는 의원연맹」 결성.
- 1986년 제1차 소송에 대한 고등재판소 판결(鈴木판결)  
교과서 검정제도는 합헌, 합법이며 재량권의 남용도 없었다고 원고 패소 판결  
『신평일본사』검정통과, 제2차 교과서 파동.
- 1989년 제2차 소송 환송심의 판결(丹野판결)  
원고에게 소송 이익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  
제3차 소송에 대한 1심판결(加藤판결)  
검정제도와 그 운용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 다만 草莽隊에 대한 검정의견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
- 1993년 제1차 소송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결(阿部판결)  
검정제도는 합헌. 재량권 남용도 인정하지 않음. 원고 전면 패소.
- 제3차소송의 2심판결(川上판결)  
1심의 草莽隊에 더하여 남경대학살과 잔학행위(부녀폭행)의 검정 의견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
- 1997년 제3차 소송의 최고재판소 판결(大野판결)  
검정합헌,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부성 검정의견에 대해서는 2심의 판결 외에도 731부대에 대해 수정을 강요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시.

◎ 교과서 검정의 위헌성 주장을 각하하였으나, 검정에서 문부성의 재량권이 제한됨.

◎ 보수 우익 교과서(『신편일본사』)의 등장.

자국중심사관, 전쟁무책임론, 천황중심사관 등을 확대시키려는 문부성의 의도.  
이러한 역사의식은 1990년대 중반의 제3차 교과서 공격으로 나타남.

◎ 질의

1. 1990년대 이후의 분석이 없어서 허전. 비록 家永재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이겠지만, 머리말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일본 교과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이르는 문제 즉 扶桑社, 自由社 교과서까지 시야에 넣고 언급해 주어야 될 것이라 생각.
2. 家永 교과서 재판이 교육을 할 권리와 받을 권리가 국가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의 교육권」을 지지하는가 혹은 국가의 교육관여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지지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3. 家永재판에서 반대측 증인으로 나선 사람들 중에는 전쟁 중의 「京都학파」(高山岩男, 天野貞祐)등 전시체제에 반발하였던 사람들이 눈에 띈다. 그들은 전쟁기의 「우익 전체주의」에서 자유를 박탈당하였던 경험에서 전후 「좌익 전체주의」를 경계하고 있는 발언을 종종 한다. 예컨대 우리 나라에서도 좌파가 북한의 독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박정희정권이나 현정권을 독재로 규정하는 부분에 반발하여 리베탈리스트들이 우경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4. 일본 문부성이나 한국의 교과부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절대적인 강자로 묘사가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부성이나 교과부는 결국 정당에 끌려다니는 약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공격의 목표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가끔 애매해 질 때가 있다. 교과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5. 「국가는 학설을 갖지 않는다」, 「교육권의 다원성」, 「국가는 다원적인 가치를 보장하는 후견인」(프랑스 법학자) 등의 논리를 앞으로 일본 문부성이 방패로 내세울 것이다. 그 논리를 핑계로 自由社의 교과서도 검정통과시키고 이웃나라의 비판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대응 논리를 가질수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



# ‘새역모’의 일본 古代史 구상의 특질과 문제점

## - 自由社 교과서 및 扶桑社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 -

이 재 석(동북아역사재단)

〈목 차〉

- I. 머리말
- II. 자유사관 교과서의 古代史 기술의 정리
- III. 扶桑社 ‘교사용 지도서’와 일본 고대사
- IV. ‘새역모’ 고대사 구상의 특질
- V. 맺음말

### I. 머리말

주지하는 것처럼 이른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은 내부 분열 끝에 ‘새역모’(후지오카 노부카츠(藤岡信勝) 회장)와 ‘교과서 개선의 모임’(야기 히데츠구(八木秀次) 회장. 이하 ‘교개모’로 약칭)으로 나뉘어졌다.<sup>1)</sup> ‘새역모’측은 기존의 파트너인 후소샤(扶桑社)와 결별하고 자유샤(自由社)와<sup>2)</sup> 새롭게 손을 잡았다.

‘새역모’는 2008년 4월 “신편 새로운 역사교과서(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의 검정을 신청한 바 있다.<sup>3)</sup> 그러나 이 1차 검정 신청 과정에서 많은 誤字가 발견되었으며 文部科学省은 516개의 검정의견을 제시하며 동년 12월 끝내 검정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그렇지만 검정

\* 이 논문은 현재 미완 상태입니다.

- 1) ‘새역모’의 분열 배경과 이후의 경과에 대해서는 연민수 「〈신편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역사관과 향후의 전망」(동북아역사재단 주최 학술회의 자료집 『2009년 ‘새역모’중학교 역사교과서 상세 분석』, 2009년 5월 12일, 10-11쪽), 타와라 요시후미(俵義文) 『〈つくる会〉分裂と歴史偽造の深層』(花傳社, 2008, 6-60쪽) 등을 참조 바란다.
- 2) 자유샤는 월간지 『自由』(1959년 11월 初刊 - 2009년 2월호로 廢刊)를 간행하였던 소규모 출판사(사장 石原萌記)로서 ‘새역모’의 니시오 간지(西尾幹二)가 『自由』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와라 요시후미는 니시오 간지와 自由社의 이러한 관련성을 근거로 ‘새역모’와 자유샤를 연계시킨 주역이 바로 니시오 간지가 아닐까 추정(타와라 요시후미, 주 1)의 전제서, 33쪽)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샤는 동일 입주 건물에 동일명칭의 자유샤(사장 加瀬英明; 『自由』의 편집위원회 대표였음)가 등록되어 있어 현재 이중 설립 상태에 있다.
- 3) ‘교개모’측은 후소샤의 자회사로서 ‘이쿠호샤(育鵬社)’를 설립하여 향후 2012년에 시행될 개정된 교육기본법 및 〈신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교과서 개정에 맞춰 새 교과서를 제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절차상 같은 연도 내에 다시 재신청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새역모’측은 곧 검정 재신청하였으며 그 결과 이번에는 총 136개의 검정 의견이 제시되었다.<sup>4)</sup>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쳐 드디어 올해 4월 9일 教科用図書檢定調査審議會에서 최종 검정 통과된 “신편 새로운 역사 교과서”이지만 정작 내용은 기존의 후소샤판 교과서와 별 다를 바가 없어(후술), ‘新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한편 ‘새역모’측은 이 검정 통과 교과서의 시판본 <日本人の歴史教科書>를 제작하여 배포할 방침임을 이미 검정 통과 이전부터 공공연히 시사해 왔는데 5월 이후 실제 시판에 들어갔다.<sup>5)</sup> 그런데 이 시판본에는 일본 왕족의 글이 특별기고 형식으로 게재되어 있어<sup>6)</sup> 주목된다. 이 왕족의 특별기고의 게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번에 검정 통과된 ‘새역모’측의 교과서는 2010년부터 2년간만 한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집필자가 기존의 후소샤판 교과서와 상당수 중복되기 때문에<sup>7)</sup> 저작권 문제를 포함, 표절 시비에 휘말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sup>8)</sup> 따라서 이런 한시적이며 법률적 문제가 남아 있는 교과서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채택될 수 있을지 사실 미지수다.<sup>9)</sup> 하

4) 1,2차 검정 신청과 검정 의견에 관해서는 연민수, 주 1)의 전개 논문, 13-16쪽을 참조 바란다.

5) 이번에 교과서 검정을 신청한 것은 石原萌記 社長の 지유사이지만 시판본 『日本人の歴史教科書』는 加瀬英明 社長の 지유사 발행으로 되어 있어 주의를 요한다.

6) 시판본의 말미에는 <일본을 파악하는 15가지 視座>가 있으며 그 앞에 특별기고문으로서 토모히토 신노(寛仁親王)의 <天皇と日本>이 게재되어 있다.

7) 2005년도와 2009년도의 집필자/감수자 중복 여부를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총 9명의 집필자 중 5명이 중복된다.

2005년도 후소샤판		2009년도 지유샤판		비고
구분	이름	구분	이름	
대표집필자	藤岡信勝	대표집필자	藤岡信勝	(*) 표시는 집필자 겸임
감수	伊藤隆	감수	井尻千男	
	岡崎久彦(*)		加瀬英明	
	芳賀徹		杉原誠四郎(*)	
	大石慎三郎(작고)		田久保忠衛	
	新田均		福地 惇(*)	
집필자	九里幾久雄	집필자	九里幾久雄	
	坂本多加雄(작고)		坂本多加雄(작고)	
	西尾幹二		西尾幹二	
	小林弘治		齋藤武夫	
	高森明勅		高森明勅	
	広田好信		松本謙一	

8) ‘새역모’는 후소샤판 교과서에 대해 2010년 3월 이후 출판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도쿄지방법원은 금년 3월 17일 이를 기각하였다. 산케이 신문 2009년 3월 17일자

9) 2001년과 2005년도의 교과서 채택률은 각각 0.039%, 0.39%로서 저조하였으며 이러한 채택률 저조가 ‘새역모’ 분열의 한 원인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지만 관점을 달리하여, 지유사판 역사교과서가 등장함으로써 소위 ‘새역모’계 교과서는 과거 후소사판 교과서에 더하여 결과적으로 2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은 가변이 볼 수 없는 사항이다. 또한 모든 교과서가 새롭게 제작되어 사용되는 2012년에는 교과서 문제가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대규모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생각하면 이번 교과서 문제를 더욱 소홀히 볼 수가 없다.

여기서 필자가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새역모’가 역사 교과서를 통해 구상한 일본 고대사의 설명 체계가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근현대사 부분 못지않게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역이 바로 고대사 부분이었다. 하지만 주지하듯이 기존 후소사판 교과서의 고대사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비판과 지적이 있다.<sup>10)</sup>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 유의하면서 그동안 거의 주목 받지 않았던 후소사의 <改訂版 新しい歴史教科書 -教師用指導書->(2006년 3월 간행. 이하 ‘교사용 지도서’<sup>11)</sup>)에도 눈을 돌려 검토의 대상으로 올리고자 한다. 이 ‘교사용 지도서’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의 검토를 통해 ‘새역모’가 자신들의 교과서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쳐지기를 바라는지 그 의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교사용 지도서’를 지유사판 교과서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기존의 후소사 교과서와 지유사 교과서의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두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소사의 ‘교사용 지도서’는 지유사판 교과서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sup>12)</sup> 이미 별도의 기회에 두 교과서의 동일성을 확인한 바 있지만<sup>13)</sup>, 서술의 편의를 위해 다음 장에서

10) 예를 들어 한국학중앙연구원『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변화분석 연구』(2005). 연민수「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古代史 서술과 歷史認識」(『한국사연구』129, 2005). 이근우「『新しい歴史教科書』의 역사인식과 선사·고대사 서술」(『일본역사연구』27, 2008). 李成市「古代史の問題點は何か」(『歴史教科書何が問題か』, 岩波書店, 2001). 原田敬一·水野直樹編『歴史教科書の可能性』(青木書店, 2002). 歴史學研究會編『歴史家が読む「つくる会」教科書』(青木書店, 2001). 勅使河原彰『歴史教科書は古代をどう描いてきたか』(新日本出版社, 2005). 歴史學研究會編『歴史教科書をめぐる日韓対話』(大月書店, 2004). ひらかれた歴史教育の会『『新しい歴史教科書』の「正しい」読み方』(青木書店, 2007) 등 외 다수.

11) 주지하는 것처럼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의 출판사가 교사들의 수업 진행을 위한 참고도서(지침서)로서 제각각 제작하여 교육 현장에 배포하는 것이며 그 내용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12) 다만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를 발행한 출판사가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출판사가 다른 이번 경우에는 기존의 ‘교사용 지도서’와는 별도로 지유사가 ‘교과서 지도서’를 간행할 지 여부와 그 경우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없는지 등의 제반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13) 이재석「09년 검정 ‘새역모’중학교 역사교과서(自由社版)의 일본고대사 기술 분석」(동북아역사재단 주최 학술회의 자료집『2009년 ‘새역모’중학교 역사교과서 상세 분석』, 2009년 5월 12일, 51-70쪽),

간략하게 이 사실을 정리한 후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많은 叱正을 바란다.

## II. 지류사관 교과서의 古代史 기술의 정리

후소사관 교과서와 지류사관 교과서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우선 그 기본 체재를 보여주는 목차에 확연히 드러난다. 아래의 참고자료를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자료-1. ‘새역모’ 교과서의 목차 비교〉<sup>14)</sup>

2001년도 검정본 〈新しい歴史教科書〉		2005년도 검정본 〈改訂版 新しい歴史教科書〉		2009년도 검정본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	
第1章 原始と古代の日本		第1章 原始と古代の日本		1章 古代日本の歴史 -石器・縄文・弥生・古墳・飛鳥・奈良・平安時代- この時代を歩んだ女性像1	
1 日本のあけぼの	1. 人類の出現と大陸の古代文明	第1節 日本のあけぼの	1. 日本人はどこから来たか	第1節 日本人のあけぼの	1 人類の進化と祖先の登場
	2. 縄文文明		2. 縄文文化		2 日本人はどこから来たか
	3. 中國の古代文明		課題学習 三内丸山遺跡		3 縄文文化の1万年 ■ 歴史ヘゴー! こんなに豊かな縄文時代
	4. 稲作の広まりと弥生文化		3. 文明の発生と中國の古代文明		4 世界四大文明の誕生
	日本語の起源と神話の発生		4. 稲作の広まりと弥生文化		5 稲作の広まりと弥生文化 ■ 歴史ヘゴー! 弥生のムラを訪ねよう
2 古代國家の形成	5. 東アジアの中の日本	第2節 古代國家の形成	5. 中國の歴史書に書かれた日本	第2節 古代國家の形成	6 中國の歴史書が語る古代の日本
	6. 古墳の広まりと大和朝廷		6. 大和朝廷と古墳の広まり		7 大和朝廷と古墳時代 ■ 歴史ヘゴー! 古墳はどうやって造ったの?
	7. 大和朝廷の外交政策		読み物コラム 神武天皇の東征伝承		■ ご先祖様のプレゼント 神武天皇の東征伝承
	出土品から歴史を探る		課題学習 古墳探訪		
	日本武尊と弟橘媛		7. 大和朝廷と東アジア		8 東アジアの国々と大和朝廷

14) 이 표는 이재석, 주 13)의 전개 논문에서 전재한 것임을 밝혀둔다.

2001년도 검정본 (新しい歴史教科書)		2005년도 검정본 (改訂版 新しい歴史教科書)		2009년도 검정본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		
3	8. 聖徳太子の新政	第3節	8. 聖徳太子の新政	第3節	9 聖徳太子と新しい政治	
	9. 大化の改新		9. 遣隋使と天皇号の始まり		10 遣隋使と「天皇」号の始まり	
	10. 日本という國号の成立		10. 大化の改新		11 遣唐使と大化の改新	
	11. 律令國家の出發		歴史の名場面一 蘇我氏の滅亡		■ その日, 歴史は 蘇我氏の滅亡	
	12. 日本語の確立		11. 日本という國号の成立		12 日本という國号の成立	
律令國家の成立	13. 日本の神話	律令國家の成立	12. 大寶律令と平城京	律令國家の成立	13 平城京の造営と奈良時代	
			13. 奈良時代の律令國家		■ ご先祖様のプレゼント 日本の神話	
			読み物コラム 日本の神話		14 律令国家と大仏建立	
			14. 飛鳥・天平の文化		15 飛鳥・白鳳・天平の文化	
14. 飛鳥・天平の文化			歴史の名場面一 大佛開眼供養		■ その日, 歴史は 東大寺の大仏開眼	
			■ 歴史へゴー! シルクロードと仏教美術			
4	15. 平安京と攝關政治	第4節	15. 平安京と攝關政治	第4節	16 平安京と摂関政治	
	16. 院政と武士の臺頭		16. 武士の登場と院政		17 密教の伝来と国風文化	
			17. 平安の文化		17. 平安の文化	■ 歴史へゴー! これぞ平安の美
			17. 平安の文化		人物コラム 空海	■ ご先祖様のプレゼント かな文字の發達
					読み物コラム かな文字の發達	■ 歴史のこの人 紫式部と源氏物語
最澄と空海	人物コラム 紫式部と女流文學	課題学習 奈良・京都の文化遺産 を調べてみよう	18 武士の登場と院政			
	第1章のまとめ		■ 歴史の豆辞典 1章の まとめ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목차상의 용어 선택 및 배치 문제 등을 단순 비교한 결과만 놓고 보면 약간의 변화가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고대사 전체를 총괄하는 1장의 제목이 기존의 〈原始と古代の日本〉에서 〈古代日本の歴史 - 石器・縄文・弥生・古墳・

飛鳥・奈良・平安時代→)로 바뀐 것이나 제1절의 〈1 人類の進化と祖先の登場〉이 새로 신설된 점 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군데군데 삽입되어 있는 보조 설명 코너의 명칭이 바뀌거나<sup>15)</sup> 설명 주제를 바꾼 것도<sup>16)</sup> 변화라고 하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각 소절은 대부분이 05년도의 소절에 일부 가필하거나 약간 표현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며 기본적인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다.

이러한 목차의 유사성은 그대로 내용의 유사성으로 이어진다. 과거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한반도 관계 기술은 별다른 변화 없이 거의 그대로 다시 실려 있다. 기존의 문제점과 이번 자유사관 교과서의 내용 검토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7)</sup>

〈자료-2. 자유사관 역사교과서의 한반도 관계 기술의 검토〉

농경문화의 전래	- 야요이 문화 성립에 관한 한반도 계통 사람의 역할에 대해 언급 없음 - 농경 전래 루트 표시에서 한반도→규슈 북부 루트는 여전히 부차적 루트로 표시
한사군의 위치	- 한사군과 대방군의 위치 오류
광개토왕 비문	- 비문의 왜를 야마토 조정으로 단정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는 기술임 - 비문의 신묘년조의 사실 여부에 대한 언급이 누락됨으로써 비문의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임나 및 소위 임나일본부 문제	- 내용은 임나일본부설을 기본적으로 충실히 따르고 있음 - 임나(가야)의 영역이 지나치게 비대하며 역사적 실태와 부합하지 않음
소위 도래인의 문화전수	- 중국문화의 전래만 강조할 뿐, 삼국의 문화 전래 사실을 무시하고 있음(모든 것을 중국의 선진문화라고 할 수는 없음) - 귀화인이란 표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음
백촌강 전투와 동아시아	- 당의 반도 지배 강화에 대한 방위론적 전쟁론은 자칫 왜의 출병으로 한반도 남부를 당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일본의 안정을 꾀한다는 제국주의 전쟁론으로 귀결될 우려 있음
아스카/ 덴포 문화와 한반도	- 7세기 후반의 하쿠호 문화 및 8세기 덴포 문화에서 신라문화와의 교류 사실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임
연호와 율령의 제정	- 중국과 다른 연호를 정한 것은 일본 만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도 사례가 있음 - 신라가 독자적 율령을 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의 오류임

15) 예컨대 05년도의 〈人物コラム〉(인물 칼럼)을 〈歴史のこの人〉(역사의 이 사람)로 바꾼다거나 〈読み物コラム〉(읽을거리 칼럼)을 〈ご先祖様のプレゼント〉로, 〈課題学習〉을 〈歴史へゴー!〉(역사로 go!) 등으로 바꾸었다

16) 예컨대 05년도의 〈人物コラム 空海〉 부분이 빠지고 〈歴史へゴー! シルクロードと仏教美術〉(역사로 go! 실크로드와 불교미술)이 새로 들어갔다.

17) 한반도 관계 기술의 실태 및 구체적 문제점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석, 주 13)의 전개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연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조선에 대한 표기가 아예 없음(낙랑군부터 표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li> <li>- 고구려를 ‘조선 북부’라고 영역 표시를 한 것은 고구려의 중심 영역이 한반도에 국한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게 할 수 있음</li> <li>- 발해 표시가 없음</li> </ul>
----	---

한편 일본 고대의 내정에 관한 기술은 엄밀하게 말해 우리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과는 분명 구별된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기술을 넘어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새역모’의 독특한 역사 인식이 -예를 들어 일본 신화와 성덕태자에 대한 과도한 강조 등- 잘 드러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소홀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자유사관 교과서의 일본 고대사 기술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2005년도 후소사관 교과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고대사 전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검토와 병행하여 언급해나가기로 하겠다.

### Ⅲ. 扶桑社 ‘교사용 지도서’와 일본 고대사

먼저 ‘교사용 지도서’가 05년도 <改訂版 新しい歴史教科書>의 특색으로서 내세우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교사용 지도서’는 새로운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평성 10년 12월 고시)에 준거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거론하며 다음과 같은 특색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최신 학문의 성과에 입각한 이야기(모노가타리)로서의 역사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종래의 역사 교과서는 거의가 역사 용어에 매번 해설을 다는 체재였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통독하여 역사의 커다란 흐름이 학생의 머리에 그려지도록 기술되어 있다.”

둘째,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둘러싼 국제 환경 속에서 일본이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 온 발자취가 다이나믹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어느 시대에서나 세계 선진 문명에 보조를 맞춰 이질적인 문명을 섭취하면서도 스스로 주체성을 잃지 않고 독자적인 발자취를 새겨왔다. 이러한 시점이 교과서의 기술 골격을 이룸으로써, 우리들 선조의 부단한 노력이 오늘날 일본이 발전하는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을 학생이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미술사를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사가 크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각 시대 별로 창출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조형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일본인 자신이 이어받게 하며 “풍부한 화보 사진으로 중학생에게 ‘일본의 미’를 재발견하게 하여 일본 문화의 역사에 종래에는 없던 시점에서 치고 들어간 것이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큰 특색 중 하나이다.”

넷째, “학생이 기초적, 기본적인 사항을 착실하게 익히게 함과 동시에 스스로 나아가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지향하여” 다양한 편집이 이루어져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상, 4쪽)

하지만 이런 자신감과는 달리 후술하는 것처럼 예컨대 학계의 연구 성과를 그다지 반영

하고 있지 못하다는 역설적인 평가가 있다. 넷째의 경우도 이 교과서가 학습지도요령에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이지 그다지 인상적이지는 못하다. 결국 최대의 특색은 일본의 독자성에 입각한 역사와 전통의 계승을 기본 시점으로 삼아, 이에 따라서 전체 골격이 짜여 있다는 점(‘일본의 미’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골격의 한 부분임)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언급하는 고대사의 특질 내용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한편 ‘교사용 지도서’는 <歷史的分野指導計劃表(案)>, <歷史的分野觀點別評價規準>, <授業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교과서는 모두 82시간 수업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sup>18)</sup> <歷史的分野指導計劃表(案)>과 <歷史的分野觀點別評價規準>은 각각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예시를 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3. 歷史的分野指導計劃表(案)>

제1장 원시와 고대 일본							
	A	B	누계 시간	학습 내용	학습 목표	지도상의 유의점	※
2 고대 국가의 형성			7	<b>7)야마토조정과 동아시아</b> 백제를 도와 고구려와 싸우다, 왜의 5왕에 의한 조공, 신라의 대두와 임나의 멸망, 귀화인과 불교의 전래	4세기의 동아시아 정세를 대국적으로 파악하고, 야마토 조정의 구조나 조선반도와의 교류에 대해 이해 시킨다.	중화질서 속에서 각국의 고민이 교차하는 당시의 힘의 균형의 이해를 탐구하고, 일본의 역사를 세계사의 궤도속에서 볼수 있는 눈을 기른다.	(2)의 1

참고) A : 역사만을 연간 학습하는 유형  
 B : 지리, 역사를 병행하여 학습하는 유형  
 ※ : 학습 지도 요령과의 관련성

<자료-4. 歷史的分野觀點別評價規準>

장	절	관점별 평가 기준
제1장 원시와 고대의 일본	제2절 고대 국가의 형성	<b>7 야마토조정과 동아시아</b> ① 귀화인이 우리나라에 가져온 여러 가지 문화, 기술, 업적에 대해 의욕적으로 추구하고 발표할 수 있다. ② 한나라의 멸망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진 결과, 주변 국가들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는지를 힘의 균형이라는 견지에서 해설할 수 있다. ③ 교과서의 사진이나 자료를 사용하여 5~6세기 일본이 어떤 국가 전략에 입각하여 행동하였는지 지적할 수 있다. ④ 5~6세기의 일본 역사를 세계사 구조 속에서 포착하고, 그 경위를 이해하고 있다.

참고) ①은 관심, 의욕, 태도 ②는 사고, 비판 ③은 기능, 표현, 자료 활용 능력 ④는 지식, 이해

18) ‘교사용 지도서’ <歷史的分野指導計劃表(案)>의 注記(8쪽)에 의하면 학습 지도 요령의 개정에 따라 2002(평성 14)년부터 도입교육, 과제학습에 배당되는 시간수의 비율이 약 20시간 전후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것을 중학교 1, 2학년에 역사, 지리를 학습하던 종래의 형식에 맞춰 보면 전체 105시간 중에 약 85시간이 교과서 내용을 학습하는데 배당되는 셈이 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것이 82시간 수업안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歷史的分野指導計劃表(案)〉과 〈歷史的分野觀點別評價規準〉보다 구체적으로 수업의 내용과 학생들에 대한 내용 전수 방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수업안〉이다. 우선 〈수업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5. 수업안〉

진도	주제	학습 목표
제1시	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인에서 현생인류에 이르기까지의 인류 진화 과정을 통관시켜, 인류가 가진 특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li> <li>* 일본인의 먼 조상이 어떻게 해서 일본 열도에 정착하게 되는가를 생각하게 한다.</li> <li>*石器를 기준으로한 시대구분에 대해 이해시킨다.</li> </ul>
제2시	조몬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빙하시대가 끝나면 일본에 난류가 흘러들어 열도는 풍부한 삼림에 덮이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 정착생활이 퍼져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li> <li>* 조몬시대의 특징을 조몬토기, 견혈주거, 패총, 토우등을 바탕으로 이해하게 한다.</li> <li>* 三内丸 유적이 왜 1000년에 걸쳐 집락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li> </ul>
제3시	문명의 발생과 중국의 고대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경, 목축의 개시와 함께 마제석기가 사용되어 시대는 신석기시대의 단계로 들어갔음을 이해시킨다.</li> <li>* 문명이 발생한 원인을 국가 성립의 전개와 관련지어 생각하게 한다.</li> <li>* 은나라에서 한나라에 걸쳐 중국 고대문명을 구체적인 유물을 바탕으로 이해하게 한다.</li> </ul>
제4시	벼농사의 확대와 야요이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요이시대가 되면 북큐슈에서 수전 벼농사가 시작되고, 이와 더불어 사람들의 생활도 평지로 옮기게 됨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li> <li>* 야요이문화의 특징을 청동기, 철기, 야요이 토기 등의 유물을 바탕으로 생각하게 한다.</li> <li>* 벼농사로 식료가 풍부하게 됨과 동시에 마을이 모여 국가가 형성된 것을 이해시킨다.</li> </ul>
제5시	중국의 역사서에 쓰여 있는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륙측의 문헌에 고대일본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것을 채택하여 당시 중국인이 일본 및 일본인을 어떻게 포착하고 있었는지 생각하게 한다.</li> <li>* [위지왜인전]에 기재된 야마타이국에 대해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과 관련지어 가면서 그 실체를 추측하게 한다.</li> <li>* 중국 황제가 내린 [금인]을 실마리로 삼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 국제관계(중화질서)에 대해 이해시킨다.</li> </ul>

진도	주제	학습 목표
제6시	야마토 조정과 고분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기 경부터 조영이 시작된 고분의 분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력호족의 연합 정권인 야마토 조정이 성립하고 통일국가 성립의 기운이 높았음에 관심을 가진다.</li> <li>* 대선고분(인덕천황릉)등 전방후원분의 거대함에 대해 시각적으로 실감하게 하고, 하나와나 부장품등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한다.</li> <li>* 정권의 정점에 선 것은 대왕이며, 이것이 나중에 천황이 된 것을 이해시킨다.</li> </ul>
제7시	야마토 조정과 동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이 멸망함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그 주변국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는지 힘의 균형이라는 견지에서 생각하게 한다.</li> <li>*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5-6세기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 전략에 기초하여 행동했는지 생각하게 한다.</li> <li>* 귀화인이 우리나라에 가져온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게 한다.</li> </ul>
제8시	성덕태자의 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덕태자가 살아간 시대의 국내외 정세를 호족의 다툼과 수나라의 성립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게 한다.</li> <li>* 성덕태자의 업적을 통해 성덕태자에 대해 흥미, 관심을 가지게 한다.</li> <li>* 수나라의 성립, 조선반도의 격동 속에서 일본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성덕태자의 대표적인 정책을 통해 알아본다.</li> </ul>
제9시	견당사와 [천황]호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세기 전반에 일본이 격동하는 아시아 정세 속에서 얼마나 스스로의 진로를 개간해갔는가를 당시 국제 환경을 배경으로 생각하게 한다.</li> <li>* 당시의 일본이 책봉체제를 떠나 수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지향한 것을 [천황]호의 사용과 관련지어 이해하게 한다.</li> <li>* 성덕태자가 불교, 신도 모두 다 보호한 것에서 그 후의 일본인의 문화적 전통이 만들어진 것을 현재의 다양한 습관과의 관계에서 이해하게 한다.</li> </ul>
제10시	다이카 개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세기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수, 당의 제도면의 충실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게 한다.</li> <li>* 당시의 국제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형성의 기운이 만들어졌음에 관심을 갖게 한다.</li> <li>* 다이카의 개신 후에 우리나라가 내세운 정치 방침에 대해, 그것이 중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어떤 독자성을 가진 것인가를 이해하게 한다.</li> </ul>
제11시	일본이라는 국호의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시의 동아시아 정세를 힘의 균형이라는 시점에서 해독하여 국제관계를 떠받치는 원리에 대해 이해하게 한다.</li> <li>* 백촌강 전투가 일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후의 국내 정치와의 관계에서 생각하게 한다.</li> <li>* [일본]이라는 국명이 언제 정해졌는지 그 대략의 시기를 기억하게 한다.</li> </ul>

진도	주제	학습 목표
제12시	대보울령과 평성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1년에 대보울령이 반포되어 우리나라는 울령국가로서 제도적으로 정비된 나라가 되었음을 이해하게 한다.</li> <li>* 우리나라의 고대 울령제의 구조에 대해 호적, 토지제도, 세제등 구체적으로 다루어, 중국의 구조와 상이함을 알게 한다.</li> <li>* 710년에 건설된 평성경의 모습에 대해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한다.</li> </ul>
제13시	나라시대의 울령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가 살고있는 지방의 나라시대의 국명을 빈 지도에 기입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인 &lt;고사기&gt;&lt;일본서기&gt;와 지리서인 &lt;풍토기&gt;에 흥미를 가지고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태도를 기른다.</li> <li>* 구분전의 부족으로 토지제도 개혁이 행해지고,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 반면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 점을 대불 건립과 관련지어 다룬다.</li> </ul>
제14시	비조, 천평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고조부터 성무조에 걸친 문화를 전축, 조각, 문학 등으로 나누어 개관하고, 그 특성을 이해하게 한다.</li> <li>* 불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착안점이 있다는 것을 안다.</li> <li>* &lt;만엽집&gt;의 노래를 암기시켜 고대인의 것을 느끼는 방법을 접하게 한다.</li> </ul>
제15시	평안경과 섭관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무천황이 어떤 이유로 헤이안(平安) 천도를 행하였으며, 또 그 후 어떤 정치개혁에 몰두했는지 이해하게 한다.</li> <li>* 후지와라씨가 그 후 어떻게 해서 세력을 확장했는가를 섭관정치의 구조를 통해 생각하게 하고, 후지와라시의 변영하는 모습에 대해 이미지화 한다.</li> <li>* 반전수수법의 종말과 함께 국사가 지방에서 힘을 가지게 되고, 유력농민이 지방의 유력호족으로 성장해 간 것을 이해시킨다.</li> </ul>
제16시	무사의 등장과 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사가 일어나고 그 대두의 배경에 대해 시대상황을 바탕으로 생각하게 한다.</li> <li>* 고산조천황 무렵부터 후지와라씨와 외척관계를 가지지 않은 천황이 즉위하고, 원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정치체제가 개시된 것을 이해하게 한다.</li> <li>* 무사가 그 후의 활약으로 사회적인 신분을 인정받게 되는 과정을 당시의 지방의 각종 전략을 바탕으로 이해하게 한다.</li> </ul>
제17시	헤이안의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이안시대에 &lt;국풍문화&gt;라고 불리는 대륙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일본 독자의 문화가 발달한 이유를 생각하게 한다.</li> <li>* 우리나라에서의 가나문자 성립 배경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동시에 가나문자를 사용한 당시의 문학작품에 대해 이해시킨다.</li> <li>* 당시 불교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헤이안(平安)불교, 정토교, 정토교예술 등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게 한다.</li> </ul>

〈수업안〉 부분에서는 각 단위 시수의 학습 요점이 도표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제시되어 있고 또 〈授業展開例〉를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항 해설〉과 〈관련 자료〉, 〈참고 문헌〉도 아울러 제시되어 있다. 〈수업안〉을 살펴보면 한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 보인다.

첫째 임나에 관해서이다. 제6시에 전방후원분에 대한 〈사항 해설〉에서 ‘전방후원분은 일본보다 늦게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 무렵 한반도 남부에도 축조되었다. 현재 12기 확인되고 있다. 5세기 무렵의 일본(왜국)의 한반도에서의 활동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55쪽).’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제7시의 임나일본부에 대한 〈사항 해설〉에서 ‘일본부의 존재는 〈書紀〉가 의거하고 있는 〈百濟本記〉의 사료적 가치에 의문이 있는 점, 당시 아직 일본이라는 국호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미 광개토왕비에 임나라는 말이 보이고 또 〈송서〉, 〈삼국사기〉에도 도이기 때문에 그 존재는 확실하고 대화정귀년의 군사적 거점이었다고 하는 것이 통설(59쪽)’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전개례〉에서는 중국의 한이 멸망한 후 나라가 분열하고 주변국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지자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서는 각각의 민족이 나라의 건설을 지향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왜국이 광개토왕의 고구려와 싸운 배경에는 백제의 도움 요청도 있었지만 한반도 남부의 철 자원에 눈독을 들였기 때문이란 점을 소개하며 임나에 왜국이 거점을 설치하였음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도를 제시하면서, 임나의 멸망으로 대화조정(대조정의) 한반도 거점이 사라진 것과 수의 중국 통일 후 삼국이 모두 일본에 접근해 온 것을 두고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란 관점에서 이해시킬 것을 예시하고 있다(56-58쪽). 이상의 설명에서 분명한 것은 임나일본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수의 통일 이후에는 힘의 균형 논리로서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를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소위 천황호의 성립 및 대중국 대등외교 주장에 관해서이다. 특히 견수사에 대한 〈사항 해설〉에서 견수사의 파견은 대등외교를 지향하고 불교 등 문화 도입을 도모하면서 562년 신라에 빼앗긴 임나의 회복과 자국의 강국화를 위해 대국 수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고구려, 백제와 파워 밸런스의 구축에 전념하였다(66쪽)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 백촌강 패전 이후에 관한 설명에서 백촌강 전투에서 패한 일본은 패전 자체의 심각한 쇼크는 크지 않았으며 당은 고구려 및 그 이후의 신라와의 전쟁 때문에 일본에 사절을 보내는 등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시의 일본은 패전국이라기 보다는 동아시아의 파워(power)로서 인식되고 있었다고 생각해도 좋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촌강 이후의 국방체제의 강화는 오히려 당에 대한 군사적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도 부연 설명하고 있다(75쪽).

한편 성덕태자와 문화 융합에 관해서는 〈수업전개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성덕태자와 불교와 古來의 神들〉 부분에서 “성덕태자는 한편으로 불교를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신들을 부정하지 않았다. 즉 어떤 종교라도 좋은 점만을 취한다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이것을 「습합사상」이라고 한다. 이런 태도는 이후의 일본과 일본인의 방식을 결정지었다. 그 증거로 初詣는 신사로 가고, 장례식은 불교로 하며,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는 것을 일본인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외국 문화나 기술을 점점 받아들여 아시아에 앞서 나라를 근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덕태자는 일본의 설계도를 그린 인물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66쪽).”고 평가하고 있다. 실로 과대한 평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외에도 중국을 향한 일본의 독자성 강조는 7세기 후반 8세기 부분에 여기 저기 보인다. 예를 들어 견당사에 대한 〈사항 해설〉에서 “618년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건국되었으므로, 그때까지 파견되어 있던 견당사와 교체하여 당 왕조에 파견한 사절. 견수사와 마찬가지로 해외 정세와 중국의 선진적인 기술이나 불교의 경전 등의 수집이 목적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외교 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이 있었다(단, 조공사절은 아니었다). (87쪽)”고 하여 특별히 조공사절이 아니었음을 애써 강조하는 문구를 삽입해 넣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견당사가 당에 대한 조공사였음은 역사적 사실이였음이 드러나고 있다.<sup>19)</sup>

또한 고대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7시 〈헤이안의 문화〉에서는 ‘〈국풍문화〉라고 불리는 대륙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일본 독자의 문화가 발달한 이유를 생각하게 한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 독자의 문화는 실로 대륙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문화라는 매우 국수주의적인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

#### IV. ‘새역모’ 고대사 구상의 특질

새역모가 그들의 교과서를 통해 일본 사회에 호소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고대사에는 어떻게 투영되어 있을까? 새역모의 메시지는 교과서의 서두 부분과 말미 부분에 각각 배치되어 있는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과 〈역사를 배워서〉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후지오카 노부카츠가 집필한 자유샤의 시판본 〈일본인의 역사교과서〉 서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이 메시지를 소재로 하여 그 특질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고대사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먼저 세 메시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 예를 들어 森公章 논문

## 〈자료-6. 출전- 01년도 후소샤판 교과서〉

##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 과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였는가를 배우는 것이다.(중략)

왕의 거대 분묘 건설에 다수의 인간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던 고대의 사실에 현대의 선악이라는 척도를 적용하는 것은 역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반드시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는데 과거의 사실을 엄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누가 죽었다던가 하는 사실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지구상의 어디에서도 타당한 객관적 사실로서 확정할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을 아무리 정확하게 두루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연대기이며 아직 역사가 아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누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였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역사적인 마인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사고방식이나 느끼는 방식이 각각 전혀 다르므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간단하게 하나의 사실을 선명하게

그러낸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1775~1783)으로 독립을 쟁취할 때 총사령관이었으며 미 합중국 초대 대통령이였다. 미국에서는 건국의 위인이다. 그러나 전쟁에 패하여 아메리카라는 식민지를 상실한 영국 으로서는 반드시 위인이 아니다. 영국의 역사 교과서에는 지금도 워싱턴이라는 이름이 실려 있지 않으며 독립군이 반란군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역사는 민족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이 당연할지 모른다. 나라의 수만큼 역사가 있다고 해도 조금도 불가사의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 개인에 따라서도 시대에 따라서도 역사는 움직이며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를 고정적이며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역사에 선악을 적용하고, 현재의 도덕으로 판단하는 재판의 장으로 만드는 일도 그만두자. 역사를 자유롭게 구속되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견해에서 분명한 사실을 확정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저절로 역사의 재미가 마음에 전해지게 될 것이다.

〈자료-7. 출전- 05년도 후소샤 및 지유샤판 교과서〉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선조가 살아온 역사

역사를 배운다는 것을 과거의 사건을 아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반드시 적절하지 않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 가운데에서 과거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 즉 과거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살고 있었는가를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낫다.

지금부터 배우는 역사는 일본의 역사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여러분과 피를 나눈 선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선조는 당신의 양친이며 양친의 위에는 4명의 조부모가 있다. 이처럼 세대를 거슬러가다보면 당신의 선조는 한없이 많아진다. 일본열도에 살아 왔던 사람들은 지금 교실에서 나란히 책상에 앉아있는 바로 당신들의 공통의 선조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일본의 역사는 어느 시대를 자르더라도 모두 우리들의 공통된 선조가 살아온 역사인 것이다.

일본 문명의 전통

세계 모든 나라가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도 고유의 역사가 있다. 일본 국토는 옛날부터 문명을 키우고 독자적인 전통을 육성하였다. 고대에 일본은 중국에

서 출현한 문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의 전통을 잃지 않고, 독립된 국가를 완성하여 착실히 역사를 걸어왔다. 그것은 지금 전해지는 문화유산, 역사유산을 관찰해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구미 열강 제국의 동아시아를 집어삼키려 했던 근대에 일본은 전통을 살리고 서구문명과 융화의 길을 모색하여, 근대국가의 건설과 독립 유지에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 나라와의 긴장과 마찰을 수반하는 치열한 역사이기도 했다.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오늘날의 일본을 만들 수 있었다.

자신의 것으로 상상한다

역사를 배울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대의 선조들이 직면했던 문제를 알고, 우리도 그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상상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은 단순한 암기사항이 아니라, 배후 사람들의 희망과 동기, 사실과 사실의 상관관계로서 보일 것이다. 역사를 깊이 탐구해 감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발견이나 다양한 견해와도 마주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과거 사람들과의 대화인 것이다.

〈자료-8. 출전- 05년도 후소샤 및 지유샤판 교과서<sup>20)</sup>〉

## 역사를 배워서

## 외국의 문화를 배우면서 독자성을 유지

일본의 역사공부를 마친 지금 여러분은 일본인이 외국의 문화에서 배우는 것에 얼마나 열심이며, 겸허한 민족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일본인은 외국의 발전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기울인 민족이었다.

옛날에는 견수사나 견당사가 목선으로 거치파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유학생을 보냈다. 유학생은 중국에서 오랜 기간을 학습에 매진하였다. 귀국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자, 어렵사리 귀국길에 오르던 도중 폭풍우를 만나 조난된 자도 적지 않았다. 메이지 시절에는 유학생들이 서양문화를 배우는 사명을 띠고 유럽과 미국으로 건너갔다. 당시는 아직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1개월 이상 걸려 배로 건너갔다.

이와 같이 일본인은 외국으로부터 깊이 배우려고 했으나, 그로인해 자국의 문화적인 독자성을 잃는 일은 없었다. 이는 각 시대의 문화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아스카 문화에서도 문화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이나 일본다운 독특한 개성을 갖추면서 세계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매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2가지 이유

그런데 최근 반세기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은 왜일까?

일본인이 외국 문명을 따라가고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에는 목표가 분명하여 불안함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구미각국을 따라잡겠다는 근대 일본이 기치로 내건 목표

를 달성하였으며, 일본은 어느 국가도 목표로 삼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이 일본인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의 이유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다.

일본은 오랜 역사를 통해 외국의 군대에 국토를 유린당한 적이 없는 나라였다. 그런데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이래 이 점이 변했다.

전 국토에서 약 5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차별 폭격을 받았으며,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그 후의 점령으로 국가의 제도는 대폭 변경되어졌다. 전후 일본인은 노력을 통해 경제 부흥을 이룩하였으며,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 지위를 구축하였으나, 아직 어딘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전쟁에 패배한 상흔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 자국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는 의미

일본인이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겸허하게 배우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깊이 생각지도 않고 외국을 기준으로 하거나, 모델로 여기거나 함으로써 독립심을 잃은 믿음직스럽지 못한 국민이 될 우려가 나온 것은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가지는 것이다. 자신을 확실하게 가지지 않으면 외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것도 실은 할 수 없다. 그 때문에 더욱 깊게 자국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기 바란다. 이것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배운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이다.

20) 2001년도 후소샤판 교과서의 〈역사를 배워서〉는 기본적으로 05년도의 그것과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자료-9. 출전- 자유사의 시판본 〈일본인의 역사교과서〉〉

서문

역사의 지혜에 배운다

(전략) 일본인은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잃고 자신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 일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에 의지하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여 거의 공통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일본인이 자신을 회복하기에는 모델을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좋은 문화와 전통으로 돌아가 오랜 역사의 지혜에 배우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역사 속에는 일본민족의 방대한 경험과 지혜가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자학사관」의 역사교과서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교과서에 눈을 돌리면 거기에는 특이한 이야기(story)를 말하고 있다.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중국이 가장 상위의 나라이며 한국·조선이 그 다음이며 가장 하위의 일본은 상위의 나라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문화적 은혜를 받아 왔다고 한다.

그 일본은 韓中에 대한 배은망덕한 무리들이며 근대에 이르러 아시아 나라들을 잔혹하게도 침략하고 가지가지의 범죄행위를 해 온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소위 「자학사관」으로 불리는 왜곡된 일면적인 역사가 위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후략)

일본이 자랑해야 할 역사와 전통

일본 역사의 참다운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일본의 국토는 옛날부터 문명을 육성하며 독자적인 전통을 키웠다. 풍성한 자연의 혜택 속에서 1만 수천 년이나 지속된 조몬시대에 일본인의 온화한 성격이 형성되었다.

고대에서도 근대에서도 일본은 외래의 우수한 문화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로의 전통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다. 천황을 중심으로 나라가 통합되고 일관되게 자립한 국가이려고 하였다. 오랜 독자적 전통과 우리들 조상의 노력 위에 지금의 우리들의 생활이 있는 것이다.

주옥같은 명강의와 표준적 교과서 (생략)

〈일본인의 역사교과서〉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후지오카 노부카츠

먼저 〈자료-6〉는 이후의 〈자료-7·9〉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자료-6〉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 가자.

〈자료-6〉의 가장 핵심은 1)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 과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였는가를 배우는 것, 2) 역사에 선악을 적용시키거나 현재의 도덕으로 재판하는 장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며 과거에는 과거 나름의 선악과 특유의 도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것 등으로 요약되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다. 그렇지만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 시점과 관련한 문제로서 과거를 기준으로 삼아 ‘현재’라는 시점을 사상하고 있는 점이라든가<sup>21)</sup> 실제 교과서 기술에서는 과거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처에 현재적인 관심이나 해석이 露呈되고 있다는 지적이<sup>22)</sup> 제시되어 있다. 이 두 비판은 서로 모순되는 지적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시된 관점과 실제 서술 사이의 모순을 각각 별도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이 모순은 새역모의 모순이지 비판자의 모순은 아니다.

한편 <자료-7·8·9>의 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그 소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비교적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 나름의 이해를 전제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7>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선 학습대상인 일본사가 다름 아닌 우리 일본인의 조상들의 역사이며 역사를 배우는 행위가 우리들의 조상들과 교감하며 그 지혜를 배우는 것임을 강조한다. 둘째 이러한 조상의 역사를 침략, 범죄 운운하며 왜곡하는 교과서는 소위 「자학사관」에 빠진 교과서로서 배격되어야 한다(<자료-9>). 셋째 일본인의 조상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그 자랑스러움의 근거는 외래의 우수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독자적인 전통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넷째 여기서 말하는 독자적 전통이란 구체적으로 일본 열도의 문화의 독자성과 국가의 자립이라는 정치적 독자성을 말한다. 다섯째 이러한 조상들의 역사에 대한 긍지는 곧 현재 일본이 처한 방향성 상실(근대 이후 추구해 온 이상적 모델의 상실, 패전 이후의 후유증으로서 자신감 상실)에 대한 처방전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현재 일본의 문제점은 목표로 삼을 모델(이상적 국가)이 없어졌고 역사상 미증유의 패전 경험(=후유증)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이며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의 이상적 국가를 모델로 삼아 열심히 따라가고자 문화를 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 고유의 독자성을 잃지 않았던 과거의 역사를 자긍심을 가지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일본이야말로 그 자체 하나의 이상적 모델임을<sup>23)</sup> 역설하고 있는 데에서 일본 역사를 보는 새역모의 기본자세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관이 역사(엄밀히 말하면 국사)의 목적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음은 누구라도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1) ひらかれた歴史教育の会, 주 10)의 전개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는 이러한 <현재>라는 시점이 전혀 없다. 그것보다 <과거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민했는가>를 묻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역사의 사료는 지배자에 관한 사료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 많으므로 이러한 질문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정도 지배자, 영웅의 <생각, 고민>이 되어버려, 거기에서 도출되는 것은 <앞선 사람들의 고생과 교훈>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자신의 일로 여겨 상상하자>고 말하는 것이므로 이 책의 노림수는 역사를 <수신>이나 <덕도>로 하려는 점에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22) 이근우, 주 10)의 전개 논문

23) <자료-9>에 ‘일본인이 자신을 회복하기에는 모델을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좋은 문화와 전통으로 돌아가 오랜 역사의 지혜에 배우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 공통의 결론이라는 점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관이 구체적으로 고대사 서술에는 어떻게 투영되어 있을까? 위의 새역모의 메시지 중에 고대사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항목은 셋째와 넷째 즉 외래문화의 수용 및 전통의 고수와 관련된 문화적 독자성과 정치적 자립성이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눈여겨보면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겠다. 하나는 외래문화의 수용 및 국가의 정치적 자립과 관련하여 고대와 근대가 자주 대비되면서 언급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통’이 끊임없이 외래문화와 대비되는 요소이자 독자성의 상징어로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일본의 ‘전통’은 고수되었다고 할 때의 이 ‘전통’은 과연 어떠한 역사적 실체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점이라고 생각된다. 과연 ‘전통’이란 非외래적인 혹은 純토착적인 요소인가 하는 점도 문제지만 소위 ‘전통’의 형성 과정이란 그 역사성을 무시한 채 일관되게 전통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것이 원가 변해서는 안 될, 고정불변의 어떤 성질의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일 것이다.

예를 들어 <자료-9>에 ‘고대에서도 근대에서도 일본은 외래의 우수한 문화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의 전통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다. 천황을 중심으로 나라가 통합되고 일관되게 자립한 국가이려고 하였다. 오랜 독자적 전통과 우리들 조상의 노력 위에 지금의 우리들의 생활이 있는 것이다.’라고 나온다. 여기서의 마치 천황제 국가라는 나라의 지배 형태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 전통이며 상실해서는 안 될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만약 천황제가 독자적 전통이라면 여기서의 전통은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고대와 근대의 대비 문제와 독자성·전통의 문제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성덕태자에 관한 서술 부분이다. 앞서 필자는 별도의 기회에 지유샤관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기술을 분석할 기회가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거기서 필자는 성덕태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sup>24)</sup> 즉 성덕태자를 강조하는 요점은 ‘성덕태자는 내정에서도 외교에서도 일본의 고대국가의 설계도를 그린 지도자였다.’(37쪽)는 기술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일본 고대 국가의 형성과 관련된 기술에서 도처에 성덕태자와의 관련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위 대화개신의 과정을 성덕태자의 이상 내지 성덕태자 이래의 국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단행된 것이었다든가,<sup>25)</sup> 7세기 말 천무·지통천황 시대의 정치에 관해 성덕태자의 신정 이후 국가 조성이 완성에 가까워졌다고<sup>26)</sup> 한 것 등은 좋은 예이다. 아울러 성덕태자는 일본 국가형성 과

24) 이하 성덕태자에 관한 기술은 일정 부분 이재석, 주 13)의 전개 논문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25) 지유샤관 교과서, 38-39쪽. 그러나 성덕태자가 죽은 후 소아씨 일족이 황포를 부리게 되었다. ... 이윽고 성덕태자의 이상을 이어받아 소아씨를 누르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조성을 요구하는 기운이 생겼다. ... 다이카의 개신은 성덕태자 이래의 국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천황과 신하의 구별을 분명히 해서 일본의 독자적인 국가 질서를 세우려고 한 것이었다.

정에서 다음과 같은 업적을 남긴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 ㄱ) 17조 헌법을 제정하여 화(和)를 중시하는 일본사회의 전통을 창출함<sup>27)</sup>
- ㄴ) 독립된 국가로서의 발전을 위해 제도를 정비함<sup>28)</sup>
- ㄷ) 遣隋使를 파견하여 수나라에 대등함을 표방하며 결코 중국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음<sup>29)</sup>
- ㄹ) 중국에 대해 일본의 자립 의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현재의 군주호이기도 한 천황 호칭을 처음 사용하였음<sup>30)</sup>
- ㅁ) 불교뿐만 아니라 토착 신앙도 아울러 존중하여 외국의 뛰어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국의 문화를 버리지 않는 일본의 전통 형성에 기여하였음<sup>31)</sup>

26) 지유사관 교과서, 41쪽

27) 지유사관 교과서, 35쪽. ‘604년 태자는 17조의 헌법을 정했다. 그 내용은 호족이 싸움을 멈추고 사람들이 화(和)의 정신을 가지고 천황을 중심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 등을 구한 것으로, 관리의 각오와 국가의 이상이 나타났다. 화(和)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은 그 후의 일본사회의 전통이 되었다.’

28) 지유사관 교과서, 34-35쪽. ‘600년 성덕태자는 수에 사자(견수사)를 보냈다. ... 수의 강대함을 알고 있던 태자는 일본이 독립된 국가로서 발전하기 위해 대륙에서 뛰어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 603년, 태자는 유력한 호족이 직무를 맡던 지금까지의 구조를 고쳐 태생이나 집안에 상관없이 국가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한 인물을 관리로 채용하는 관위12계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관위 12계 제도는 조정에 출사하는 관인들의 일종의 신분 표식이지 관리 채용 제도 자체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위의 본문에 관리 채용 제도의 인상을 주는 서술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9) 지유사관 교과서, 36쪽. ‘국내 개혁에 성공한 성덕태자는 607년, 두 번 견수사를 파견했다. ... 이때 수의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는 [해가 뜨는 나라의 천자가 해가 지는 나라의 천자에게 편지를 보낸다. 안녕하십니까]라고 쓰여 있었다. 태자는 편지의 문장에서 대등한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수에 결코 복속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었다.’

30) 지유사관 교과서, 36-37쪽. ‘608년, 세 번째 견수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그 때 편지의 문장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였다. 중국의 천제를 화나게 한 이상, 중국의 군주와 같은 호칭을 쓸 수는 없었다. 그러나 다시 왜왕이라는 호칭으로 돌아가 중국에 자국의 지배권을 인정하게 하는 길을 택하고 싶지 않았다. 일본이 대륙의 문명에 흡수되어 고유의 문화를 잃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때의 편지에는 [동쪽의 천황, 삼가 서쪽의 황제에게 아뢴다]라고 쓰였다. 황제라는 문자를 피함으로써 수의 입장에 배려하면서도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양국이 대등한 것을 표명한 것이다. 이것이 천황이라는 칭호가 사용된 시초로 여겨진다. 일본의 자립 의지를 나타낸 천황이라는 칭호는 그 후에도 계속 사용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31) 지유사관 교과서, 37쪽. ‘성덕태자는 607년에 호류지를 세우는 등 소아씨와 함께 불교를 깊게 믿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태자는 일본 전통의 신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같은 해에는 추고천황이 전통의 신들을 계속 제사할 것을 서약했다. 이러한 성덕태자의 태도는 외국의 뛰어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국의 문화를 버리지 않는 일본의 전통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천황 중심의 국가 체제 확립의<sup>32)</sup> 토대를 구축하고 일본 전통 문화의 창달 및 중국에 대한 일본의 독자성 주장을 주도한 참다운 지도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자료-7·8·9>에서 새역모가 제시하고 싶어 하였던 전근대 일본 사회의 특질로서의 제요소가 여기에 빠짐없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고대국가의 형성을 묘사하는 단락에서, 그것도 성덕태자라는 걸출하면서도 이상적인 천황가의 왕족에게 지도되면서 고대 일본의 특질이 형성되어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왜 새역모가 유별나리만큼 성덕태자를 강조하는 이유의 일단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sup>33)</sup>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덕태자 관련 기술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학습지도요령과의 관련성 문제이다. 중학교 학습지도요령(1998(平成 10)년 12월 告示, 2003(동15)년 12월 일부 改正)의 <歷史的分野>의 <2 内容>의 <(2) 古代までの日本>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ウ 대륙의 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국가의 짜임새가 정비되고 그 후 천황·귀족의 정치가 전개된 것을 성덕태자의 정치와 대화개신, 율령국가의 확립, 섭관정치를 통해 이해시킨다.

위에 관해서는 율령국가의 형성 이후 그것을 변질시키면서 나라(奈良)의 도읍과 平安京에서 천황·귀족의 정치가 행해진 것을 파악하게 하는 관점에서 다루도록 할 것. 이때 율령제의 변질과 율령정치의 실태 등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성덕태자는 학습지도요령에서도 일정 부분 강조되어 기술되도록 설정되어 있다.<sup>34)</sup> 따라서 새역모의 성덕태자 강조는 새역모만의 독특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sup>35)</sup> 오히려 학습지도요령의 지도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36)</sup> 그렇지만 아무리 성덕태자에 대한 강조가 권장 사항이라고 해도 위의 새역모의 경우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상적인 인물상으로 미화, 묘사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새역모의 성덕태자 미화는 유별나다고 할 수 있겠다.

32) 지류사관 교과서, 35쪽. ‘태자는 소가노우마코와 협력하면서 정치를 진행했지만 태자의 정치의 진정한 목표는 호족의 힘을 누르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었다.’  
 33) 당시 추고조의 정치를 과연 성덕태자 중심의 정치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상기 성덕태자의 특징들에 대한 비판은 이재석, 주 13)의 전계 논문 참조  
 34) 일본 고대국가의 형성 과정을 6세기 말 7세기 초 推古朝 성덕태자의 정치에서부터 시발점을 잡아 7세기 중반 대화개신을 거쳐 7세기 말 8세기 초 정어원령 내지 대보율령의 성립에 이르러 일단락된 것으로 파악하는 이해는 사카모토 타로(坂本太郎)에 의해 확립되어 오늘날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35) 사실 현행 일본 역사교과서는 중-고교 교과서 여부를 불문하고 대부분 7세기 아스카 조정의 정치로서 성덕태자의 정치(혹은 新政)를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컨대 이재석 논문을 참조.  
 36) 이점은 연민수 주 1)의 전계 논문, 19쪽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고대와 근대의 대비는 위의 <자료-7·8·9>에서 나타나 있듯이 바로 견수사, 견당사의 파견과 국가의 자립성 유지 측면에서 상호 대비되어 나타나는데 비단 성덕태자만의 문제는 물론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왜 고대가 자주 근대와 대비되면서 묘사되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견수사, 견당사에 대비되는 근대의 그것은 메이지 시기의 구미 유학생들이며 양 시기 모두 국가의 자립(독립)성이 당대의 문제의식으로 부각되어 있는 것도 공통적이다.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서는 일본 고대사가 일본의 근대 경험에 의해 발견되거나 만들어졌다는 이성시의 지적이<sup>37)</sup> 일단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를 이상적 모델로 하여 구미 문화를 섭취하여 근대국가로의 탈바꿈을 꾀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의 독립성 확보(대등외교의 추구)가 관건이었던 당대의 대외적 긴장감이 고대사에도 투영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중국을 이상적 모델로 하여 당의 문화를 섭취하여 율령 국가로 변모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등외교를 추구하였다는 고대사 인식 구도의 성립 배경에는 의외로 근대 이후 서양과의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추고조 對隋외교의 대등외교 추구라든지 견당사를 통한 당 문물 도입에 대한 집착은 비단 새역모 교과서만의 역사 인식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sup>38)</sup> 하지만 대등외교와 견당사에 관한 인식의 형성이 비록 근대 이후의 소산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새역모의 성덕태자 기술의 경우처럼 과도하게 對중국 관계를 의식하는 것은 근대 이후의 소산으로만 돌릴 수는 없으며 역시 현재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자는 그 현재의 문제의식이란 바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앞으로 어떻게 일본이 자립을 유지, 달성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이 그대로 교과서에 투영되어 나타났다고 보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편 상기 성덕태자 관련 기술 이외에도 필자는 별도의 지류샤판 교과서 분석에서 일본 고대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첫째는 조상(祖先) 표현의 사용 빈도수가 후소샤판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는 점, 둘째 일본인의 기원에 관한 문제로서 구석기 시대의 사람을 일본인의 기원으로 상정하고 있는 점, 셋째 문화 형성 과정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조몬 문화를 곧바로 일본인과 일본문화의 특징(부드러움, 다양함, 유연함)으로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는 점, 넷째 야요이인의 형성에 대한 기술이 없으며 남방계와 북방계의 혼혈 가능성을 조몬시대에 설정하여 그 형성 시기를 대폭 올려 잡고 있는 점, 다섯째 조공에 대한 인식 문제로서 조공-책봉 관계를 의무가 수반되는 군신 관계로서 도식적으로 파악하며 외교 당사자의 자율적 입장을 무시하고 있는 점, 여섯째 일본의 신화와 전승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도 위의 <자료>의 내용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모두 나름의 연

37) 이성시 「고대사에 나타난 국민국가 이야기」(『만들어진 고대』, 삼인, 2001)

38) 이점에 관해서는 이재석 논문을 참조

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상’ 표현의 증가 및 일본인 조상의 기원과 형성에 관한 제문제는 모두 일본사를 조상의 역사로 명쾌(?)하게 규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조상’이란 말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지침에<sup>39)</sup> 입각하여 일본 역사에 대한 ‘애정’을 심화시키는 고의적 장치로서 선택되어 강조되고 있는 용어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조공에 대한 도식적 이해는 중국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식적으로 대서특필하려는 새역모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일본의 입장을 강조하고 나아가 조공-책봉 관계에 있었던 한반도의 국가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을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일본 신화 전승에 대한 강조는 기타 교과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새역모 교과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황·천황제 국가에 대한 고대인의 눈을 부각시켜 궁극적으로는 천황·천황제 국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면 大過는 없을 것이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는 새역모의 교과서가 추구하는 역사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민수는 1) 천황 중심사관, 2) 침략주의 사관, 3) 독선적 문화 우월 사관을 들고 있으며<sup>40)</sup> 이성시는 01년도의 후소샤 교과서에 대해 1) 일본의 신화 전승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점, 2) 철저히 근대적 가치 기준에 의거해 고대사의 사건과 고대 문화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 3) 고대의 정치 사회 문화에서 한국 중국과의 차이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는 점, 4) 전후의 역사학 연구 성과를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특징으로 들었다.<sup>41)</sup> 그리고 첫째 신화의 취급이 보다 교묘해졌다는 점, 둘째 일본의 전통, 고유문화를 강조하여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셋째 성덕태자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점, 넷째 국가나 천황 중심의 서술이며 일반 민중에 대한 시점은 보이지 않아 <새로운>역사관에는 걸맞지 않는 점 등을 거론하는 연구 성과도 있다.<sup>42)</sup>

이러한 지적 사항들은 서로 중복되는 지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당하다는 점과 아울러 09년 자유사관 교과서에도 그대로 해당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둔다.

## V. 맺음말

39) ‘교과서 지도서’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1998년 고시)에 중학교 사회의 <歷史的分野> 학습 목표의 첫 번째 항목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애정을 깊게 하고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기른다.」고 指示하고 있는 점에 대해 ‘종래에는 없었던 「애정」이라는 단어가 <歷史的分野>의 목표로 새롭게 첨부된 것은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4쪽)고 평가하고 있다.

40) 연민수, 주 1)의 전개 논문

41) 이성시 「日韓歷史教科書の古代史叙述をめぐって」(歴史學研究會編 『歴史教科書をめぐる日韓対話』, 大月書店, 2004)

42) ひらかれた歴史教育の会, 주 10)의 전개서

## 토론문

## ‘새역모’의 일본 고대사 기술에 대한 의문

이근우(부경대)

‘새역모의 일본 고대사 구상의 특질과 문제점’이라고 제한 본 논문은 종래 일본 우익의 입장을 대변하는, 특히 ‘새역모’의 중학교 일본사 교과서에 대하여 서술상의 특징이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과서 본문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교사용지도서>까지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기 쉽지 않은 교과서 검정과정의 문제 등에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해주고 있어서 연구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 토론자도 본논문의 논점과 취지에 전반적으로 수긍하고 동의하는 바여서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본논문의 완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여 몇 마디 사족을 덧붙이고자 한다.

## I. 원시 고대에서 고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내용에서 2005년의 개정판 『新しい歴史教科書』(2005)와 신편 『新しい歴史教科書』(2009)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본문의 기술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章節의 제목을 보면 큰 변화를 간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자료1>에 의하면 2001년과 2005년의 교과서에서는 ‘第1章 原始と古代の日本’로 변하가 없는데, 2009년판에서는 ‘1章 古代日本の歴史 -石器・縄文・弥生・古墳・飛鳥・奈良・平安時代-’라고 하여 原始라는 시대설정은 없어지고, 古代 속에 石器・縄文・弥生時代가 포함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역사학의 시대구분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기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石器・縄文은 先史 내지 原始로 분류되어야 하고, 고대는 문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로 한정해서 써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다면 2009년 교과서의 고대사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시라는 시대설정이 없이 전체 고대로 파악한 것이 될 것이다.

## II. 日本人에서 祖先 先祖로

2009년 교과서의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은 日本人이라고 하는 그나마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용어가 사라지고 祖先 혹은 先祖와 같은 용어가 등장하였다는 사실이다.

日本人はどこから来たか(2005년)	→ 人類の進化と祖先の登場(2009년)
縄文文化	→ 日本人はどこから来たか
読み物コラム 神武天皇の東征伝承	→ ご先祖様のプレゼント 神武天皇の東征伝承
読み物コラム 日本の神話	→ ご先祖様のプレゼント
読み物コラム かな文字の發達	→ ご先祖様のプレゼント かな文字の發達

우선 이러한 말들의 뉘앙스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자.

祖先은 “[1] 一族・一家の初代にあたる人。また、初代以来、先代までの人々。先祖。〈補説〉「先祖」よりも客観的な立場でいう語 [2] 現在のものに發達してきた、もとのもの。人類の一” 祖上은 “家系の初代。また、その血統に連なる先代までの人々。祖先。” 이상 『大辭林』(<http://www.yahoo.co.jp> 辭書에서 검색)

이를 통해서 보면 祖先은 인류의 조상과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말이다. 그렇지만 日本人은 용어에 비해서는 혈연적인 연계를 강조하는 용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祖上은 가계의 초대 즉 始祖라는 뜻과 혈통적으로 연결되는 前時代の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2009년 교과서는 종래의 교과서와는 다르게 縄文 彌生 특히 縄文時代人들과 현재 일본인의 혈연적 혈통적인 연관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그러한 의도는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들 선조의 부단한 노력이 오늘날 일본이 발전하는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을 학생이 이해할 수 있다.”(논문 7쪽)

### Ⅲ. 縄文時代に 이어지는 세계 4대문명의 탄생

또 한 가지 2001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는 인류의 기원이나 문명을 먼저 배치하였던 것이 ‘縄文文化の1万年’다음에 ‘世界四大文明の誕生’이라는 순서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술 순서는 마치 縄文時代가 세계 4대 문명보다 앞서 이루어진 것처럼 읽혀질 가능성이 있다.

### Ⅳ. 國風文化

논문에서도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국풍문화〉라고 불리는 대륙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일본 독자의 문화가 발달한 이유를 생각하게 한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 독자의 문화는 실로 대륙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문화라는 매우 국수주의적인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國風文化에 대해서 일찍이 家永三郎은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가 아니라, 중국

唐 문화를 수용한 결과 국풍문화 자체가 국제성을 띤 문화라고 지적한 바 있다.

## V. 교사용 지도서의 문제

〈교사용지도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대 율령제의 구조에 대해 호적, 토지제도, 세제 등 구체적으로 다루어, 중국의 구조와 상이함을 알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호적, 토지제도, 세제 등이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은 대학교재에서도 결코 용이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외형적인 틀에서는 중국의 율령과 일본의 율령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새역모’ 집필진들의 무모하고도 과도한 의욕때문이 아닐까?

그밖에도 교사용 지도서 속에서도 잘못된 인식들이 노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성덕태자는 한편으로 불교를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신들을 부정하지 않았다. 즉 어떤 종교라도 좋은 점만을 취한다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이것을 「습합사상」이라고 한다. 이런 태도는 이후의 일본과 일본인의 방식을 결정지었다. 그 증거로 初詣는 신사로 가고, 장례식은 불교로 하며,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는 것을 일본인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외국 문화나 기술을 점점 받아들여 아시아에 앞서 나라를 근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덕태자는 일본의 설계도를 그린 인물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논문 11쪽) 그런데 習合이란 서로 다른 종교의 교의 등이 절충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습합을 대표하는 것이 本地垂迹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습합은 한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이 신도, 불교, 기독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서로 다른 종교의 의례에 참여하는 것은 習合이라고 할 수 없다.

# 《일본인의 역사교과서》(自由社)의 근세 한국사 관련서술과 日本近世史像

손 승 철(강원대학교)

〈목 차〉

I. 머리말	III. 〈自由社〉판의 近世史像
II. 일본교과서의 서술경향	1. 목차와 내용비교
1. 東京書籍 교과서	2. 近世觀의 문제점
2. 扶桑社, 自由社 교과서	IV. 맺음말
3. 쟁점주제의 비판	

## I. 머리말

1982년 소위 일본역사교과서의 왜곡과동을 전후한 시기부터 근 30년간 일본역사교과서의 왜곡서술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근린제국에 대한 이해와 협조에 대한 배려조항’이나 양심적인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식민지 지배의 실태나 침략전쟁의 진실 등이 모든 교과서에 서술될 정도로 상당히 개선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본내의 우익활동이 고조되면서 그동안의 개선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교과서 갈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에 있었던 후소사(扶桑社)의 《새로운 역사교과서》(《新しい歴史教科書》)이며, 그 채택율이 저조하자 2009년 5월에 발행된 自由社의 또 다른 우익교과서 《일본인의 역사교과서》(《日本人の歴史教科書》)출현이다.

2009년 현재, 일본에서는 총 8종의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사용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自由社〉판이 추가될 것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8종 교과서의 채택율은 아래표와 같다.

이 글에서는 1980년대 이후, 일본중학교 교과서 가운데 채택율이 가장 높은 〈東京書籍〉판과 2000년 이후 새로 출현한 극우파교과서 〈扶桑社〉와 〈自由社〉판의 근세부분 한국사관련 서술을 비교한 후, 이들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 近世史像을 분석하려고 한다.

그동안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한국사관련 서술에 대한 분석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본교과서에 나타난 近世史像이 한국사관련 서술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나아가 그것이 어떻게 한국사관련 서술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가 된 적이 없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근세관이 역사서술 및 한국사관련 서술과 어떤 관계가 있는 가를 시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하고자 한다.

## 〈중학교 역사교과서 채택율〉

(단위 %)

순위	출판사	교과서명, 저자	1982	1990	2002	2006년
①	東京書籍	《新しい 社會 歴史》 田邊裕 외 37명	32.1	35.0	51.2	51.2
②	大阪書籍	《中學社會》 熱田公 외 12명	16.9	16.3	14.0	15.4
③	教育出版	《中學社會 歴史》 笹山晴生 외 41명	11.6	16.0	13.0	11.8
④	帝國書院	《中學生の歴史》 黒田目出男 외 7명	-	1.4	10.9	14.2
⑤	日本書籍	《中學社會「歴史的分野」》 兒玉幸多 외 15명	16.01	16.05	5.9	3.1
⑥	清水書院	《新 中學校 歴史》 大口勇次郎 외 12명	8.0	3.7	2.5	2.4
⑦	日本文教出版	《中學生の社會科・歴史》 大濱徹也 외 11명	-	-	2.3	1.4
⑧	扶桑社	《新しい 歴史教科書》 西尾幹二 외 13명	-	-	0.04	0.4

## II. 일본교과서의 서술경향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근세 한일관계 내지 한국사관련 기사 중 문제가 되는 서술은 주로 왜구, 조선국호와 통교문제, 임진왜란, 조선통신사 및 왜관 등이다. 이 글에서는 채택율이 가장 높은 〈東京書籍〉판 및 극우파 출판의 교과서로 지목되는 〈扶桑社〉 및 〈自由社〉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sup>1)</sup>

1) 1983년부터 2001년까지의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내용: 1983-2001」, 연구자료 RM2002-48를 참조.

1. 東京書籍 교과서

① 왜구

1983년	1992년	2002년	2006년
<p><b>倭寇와 日明貿易</b> 九州와 瀨戶內海 연안의 무사와 어민중에는 집단을 이루어 조선과 중국으로 건너가 무역을 강요한다든지 해적질을 한다든지 하는자가 나타났다. 중국과 조선에서는 이들을 왜구라 부르며 두려워했다.(92쪽)</p>	<p><b>倭寇와 日明貿易</b> 元寇이후 西國武士와 상인·어민 중에는 집단으로 조선과 중국에 건너가 해적으로 활동하는 자가 나타났다(*1). 중국과 조선에서는 그들을 왜구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1 : 명대 후반이 되자 중국인이 왜구라고 칭하는 일이 많아졌다) (94쪽)</p>	<p><b>동아시아의 변동</b> 명은 대륙연안을 습격하는 왜구의 단속을 일본에 요구해 왔다.(*2) 西國武士나 상인·어민 가운데에 집단을 만들어 무역을 강요하거나, 해적으로 나서는 자가 있어서, 왜구라고 불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왜구가운데는 일본인 이외의 사람도 많이 있었다.(59쪽)</p>	<p><b>동아시아의 변동</b> 명은 대륙연안을 습격하는 왜구의 단속을 일본에 요구해 왔다.(*2) 이즈음 西國武士나 상인·어민 가운데에 집단을 만들어 무역을 강요하거나, 해적으로 나서는 자가 있어서, 왜구라고 불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왜구가운데는 일본인 이외의 사람도 많이 있었다.(65쪽)</p>

왜구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1982년에는九州와 瀨戶內海 연안의 武士와 어민이라고 하다가, 1992년에는 西國의 武士와 상인·어민으로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 2002년 이후에는 여기에 다시 주를 달아서 <왜구가운데는 일본인 이외의 사람도 많이 있었다>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서술했다.

② 조선국호와 통교

1983년	1992년	2002년	2006년
<p><b>명과 조선</b> 이성계가 14세기 말에 고려를 멸망시키고 朝鮮國을 세웠다. 李氏朝鮮에서는 불교를 억압하고 주자학을 장려하며... 일본과의 무역도 열려, 면포 등이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93쪽)</p>	<p><b>동아시아의 정세</b> 이성계가 14세기 말에 고려를 멸망시키고 朝鮮國을 세웠다. 李氏朝鮮에서는 불교를 억압하고 주자학을 장려하며..... 일본과의 무역도 열려, 면포 등이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96쪽)</p>	<p><b>동아시아의 변동</b> 조선반도에는 고려가 멸망하고, 대신에 朝鮮國이 세워졌다. 조선말을 써서 나타난 한글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고, 일본과의 무역도 열렸다.(59쪽)</p>	<p><b>동아시아의 변동</b> 조선반도에는 고려가 멸망하고, 대신에 朝鮮國이 세워졌다. 조선말을 써서 나타난 한글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고, 일본과의 무역도 열렸다.(65쪽)</p>

1983년과 1992년에는 朝鮮國을 세웠다고 하면서도, 李氏朝鮮을 병기해서 서술했으나, 2002년부터는 조선국만을 썼다. 그러나 通交가 열리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다만 무역이 시작된 사실만을 서술함으로써 일본측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는 조일무역의 실상을 밝히지 않고 있다.

### ③ 임진왜란

1983년	1992년	2002년	2006년
<p><b>秀吉의 대외정책</b>  <u>秀吉은 또한 국내의 통일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명으로도 진출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통로에 해당하는 조선에 두차례에 걸쳐 대군을 보내, 명과 조선의 군대와 싸웠다.</u>                      ... 이 두 번에 걸친 싸움으로 조선은 큰 손해를 입고... (130-131쪽)</p>	<p><b>조선침략</b>  <u>秀吉은 또한 국내의 통일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명으로도 진출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통로에 해당하는 조선에 두차례에 걸쳐 대군을 보내, 명과 조선의 군대와 싸웠다.</u>                      ... 이 두 번에 걸친 싸움으로 조선은 큰 손해를 입고... (131-132쪽)</p>	<p><b>조선침략</b>                      秀吉은 명(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1592년 조선에 병을 보냈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수도 한성(현재의 서울)을 점령하고 평양까지 진격했다. ... 이 7년에 걸친 싸움으로 조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었고, 일본에 연행되어 전 국토는 황폐하게 되었다. (79쪽)</p>	<p><b>조선침략</b>                      秀吉은 국내통일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조선, 인도, 루손(필리핀), 고산국(대만) 등에 편지를 보내, 복속을 요구했다. 1592(文祿元)년에는 명(중국)의 정복을 목표로 조선에 대군을 파견했다. ... 이 7년에 걸친 싸움으로 조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었고, 일본에 연행되어 전 국토는 황폐하게 되었다. (87쪽)</p>

임진왜란 관련 항목의 명칭을 보면, 1983년에는 <秀吉의 대외정책>이라고 했으나, 1992년부터는 <조선침략>으로 표기했다. 또한 1983년과 1992년에는 국내통일로 만족하지 못한 秀吉이 명으로 진출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그 통로에 해당되는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다. 2002년에는 명을 공격하기 위해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다고 서술했고, 2006년에는 秀吉이 국내통일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조선, 인도, 루손(필리핀), 고산국(대만) 등에 편지를 보내, 복속을 요구했으며, 1592(文祿元)년에는 명(중국)의 정복을 목표로 조선에 대군을 파견했다고 서술했다. 결국 조선침략의 원인은 명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었지, 처음부터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애매한 서술을 하고 있다. 임진왜란의 경과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1983년판에 비해 2006년판에는 자세히 서술하고 있고, 陶工으로 九州 有田에 끌려가서 도자기 시조가 된 李參平을 陶祖로 상세히 서술했다. 또 임진왜란에 의해 조선의 활자 인쇄술이 일본에 전해졌음을 소개했다.

④ 조선통신사와 왜관

1983년	1992년	2002년	2006년
<p><b>쇄국이후의 외교와 무역</b> 조선과는 家康 때 국교를 회복하고부터 장군이 바뀔 때마다 경하사절이 오는 관례가 생겼다. (141쪽)</p>	<p><b>쇄국이후의 외교와 무역</b> 조선과는 家康 때에 국교를 회복하고부터 장군이 바뀔 때마다 경하사절(通信使)이 오는 관례가 생겼다. 그 연락을 맡은 대마번은 무역을 하는 것도 허락되어, 조선의 산물과 중국의 견 등을 수입하였다. (144쪽)</p>	<p><b>조선과 琉球</b> 조선과는 家康시대에 조선과 강화가 맺어져, 장군의 대가 바뀔 때 마다 400-500인의 사절(通信使)가 오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대마번은 국교의 실무를 담당하는 것과 함께 무역이 허가되어, 조선부산에 商館을 두고, 목면이나 조선인삼, 비단 등을 수입했다. (88쪽)</p>	<p><b>조선과 琉球</b> 家康의 시대에 조선과 강화가 맺어져, 장군의 대가 바뀔 때 마다 400-500인의 사절(通信使)가 오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대마번은 국교의 실무를 담당하는 것과 함께 무역이 허가되어, 조선 부산에 세운 倭館에서는 동 등을 수출하고, 목면이나 조선인삼, 비단 등을 수입했다. (97쪽)</p>

조선통신사에 관해서는 통신사에 대한 명칭, 통신사의 재개과정, 통신사의 파견목적 등이 관심의 주제이다. 통신사의 명칭에 대해 1983년판에는 단순한 경하사절로 했다가 1992년에는 경하사절(通信使)라 했고, 2002년부터는 경하를 빼고 사절(通信使)로 표기했다. 경하라는 표현이 일본 우위의 입장이라는 한국측의 수정요구를 의식한 듯하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일본 우위의 입장이 계속견지되고 있다.

한편 2002년판 부터는 부산 왜관을 <대마번에서 부산에 설치한 商館> 또는 <對馬藩이 부산에 세운 倭館>으로 서술함으로써, 조선에서 설치한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일본의 在外公館인 것 같은 인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의해 일본근대사에서는 1872년 일본 군함에 의한 부산왜관의 武力占領을 명치정부에 의한 倭館接受로 표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무비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扶桑社, 自由社 교과서

① 왜구

扶桑社(2002년)	扶桑社(2006년)	自由社(2009년)
<p><b>일명무역</b> 14세기 후반, 중국에 건국한 명은 일본에 왜구의 단속을 요구했다. 왜구란 이 당시 조선반도나 중국대륙의 연안에 출몰하던 해적집단을 말한다. 그들은 일본인외에 조선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97쪽)</p>	<p><b>勘合貿易과 왜구</b> 14세기 후반, 중국에서는 한민족의 반란에 의해서 원이 북방으로 쫓겨가고, 명이 건국되었다. 명은 일본의 왜구의 단속을 요구하였다. 왜구란 이 당시 조선반도와 중국대륙의 연안에 출몰하던 해적집단을 말한다. 그들은 일본인 외에 조선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79쪽)</p>	<p><b>勘合貿易과 왜구</b> 14세기 후반, 중국에서는 한민족의 반란에 의해서 원이 북방으로 쫓겨가고, 명이 건국되었다. 명은 일본의 왜구의 단속을 요구하였다. 왜구란 이 당시 조선반도와 중국대륙의 연안에 출몰하던 해적집단을 말한다. 그들은 일본인 외에 조선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79쪽)</p>

扶桑社版은 2002년에는 일명무역의 항목에서 왜구를 서술했으나, 2006년판에는 <감합무역과 왜구> 항목으로 바꾸었다. 왜구에 관한 서술에서는 왜구구성에 <일본인외에 조선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 서술은 두책이 모두 같다.

② 조선국호와 통교

扶桑社(2002년)	扶桑社(2006년)	自由社(2009년)
<p><b>조선과 琉球</b> 조선반도에서는 14세기에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u>조선국(李氏朝鮮)</u>을 건국하였다. 조선도 명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왜구의 금지와 통교를 요구해왔다. 막부가 이에 응한 결과, <u>日朝무역이 시작되었다.</u> ...그러나 16세기초 조선항구에 정박해 있던 일본인이 관리들의 처우에 반발하여 폭동을 일으켰다가 진압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뒤에 조선과의 무역은 부진하게 되었다. (107쪽)</p>	<p><b>조선과 琉球</b> 조선반도에서는 14세기에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u>조선국(李氏朝鮮)</u>을 건국하였다. 조선도 명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왜구의 금지와 통교를 요구해왔다. 막부가 이에 응한 결과, <u>日朝무역이 시작되었다.</u> 그러나 16세기에 들어가면 <u>日朝간</u>에 마찰이 일어나, 조선과의 무역은 부진하게 되었다. (87쪽)</p>	<p><b>조선과 琉球</b> 조선반도에서는 14세기에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u>조선국(李氏朝鮮)</u>을 건국하였다. 조선도 명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왜구의 금지와 통교를 요구해왔다. 막부가 이에 응한 결과, <u>日朝무역이 시작되었다.</u> 그러나 16세기에 들어가면 <u>日朝간</u>에 마찰이 일어나, 조선과의 무역은 부진하게 되었다. (87쪽)</p>

조선국호와 통교에 관한 서술이 두책 모두 <朝鮮와 琉球> 항목에서 서술했다. 두 책 모두 서술 내용이 같으며, 朝鮮國(李氏朝鮮)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朝·日通交의 시작을 조선이 일본에 통교를 요구해 왔고, 幕府가 이를 수용한 결과로 서술했다. 이 부분은 통교에 관한 역사사실을 완전히 전반대로 왜곡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③ 임진왜란

扶桑社(2002년)	扶桑社(2006년)	自由社(2009년)
<p><b>조선에의 出兵</b> 약 100년만에 전국 통일을 완성한 <u>秀吉의 의기는 충천하였다.</u> <u>秀吉은 중국의 명나라를 정복하고, 天황과 함께 자신도 대륙에 옮겨 살면서, 동아시아에서 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하려는 거대한 꿈을 가졌다.</u> 1592(文祿元)년, <u>秀吉은 15만의 대군을 조선에 보내었다.</u> (121쪽)</p>	<p><b>조선에의 出兵</b> 약 100년만에 전국 통일을 완성한 <u>秀吉의 의기는 충천하였다.</u> <u>秀吉은 중국의 명나라를 정복하고, 天황과 함께 자신도 대륙에 옮겨 살면서, 동아시아에서 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하려는 거대한 꿈을 가졌다.</u> 1592(文祿元)년, <u>秀吉은 15만의 대군을 조선에 보내었다.</u> (97쪽)</p>	<p><b>조선에의 出兵</b> 약 100년만에 전국 통일을 완성한 <u>秀吉의 의기는 충천하였다.</u> <u>秀吉은 중국의 명나라를 정복하고, 天황과 함께 자신도 대륙에 옮겨 살면서, 동아시아에서 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하려는 거대한 꿈을 가졌다.</u> 1592(文祿元)년, <u>秀吉은 15만의 대군을 조선에 보내었다.</u> (97쪽)</p>

임진왜란에 관한 두 출판사의 서술 내용이 똑같다. 임진왜란을 〈朝鮮侵略〉이라는 용어 대신에 〈조선에의 出兵〉이라고 표기했으며, 임진왜란의 원인을 〈豊臣秀吉이 명을 정복하고, 인도까지 점령하여 동아시아에서 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하려는 거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로 미화하여 서술했다.

#### ④ 조선통신사와 왜관

扶桑社(2002년)	扶桑社(2006년)	自由社(2009년)
<p><b>조선·유구·蝦夷地</b> 막부는 家康때 對馬의 宗氏를 통하여 秀吉의 出兵으로 단절된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했다. 양국은 대등한 관계를 맺고, 조선에서는 將軍의 대가 바뀔 때마다 通信使라고 불리는 사절이 江戸를 방문하여 각지에서 환영을 받았다. 또 조선의 부산에 宗氏의 倭館이 설치되어 약 500인의 일본인이 살면서 무역과 정보수집에 종사했다. (130쪽)</p>	<p><b>조선·유구·蝦夷地</b> 막부는 家康때 對馬의 宗氏를 통하여 秀吉의 出兵으로 단절된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했다. 양국은 대등한 관계를 맺고, 조선에서는 將軍의 대가 바뀔 때마다 朝鮮通信使라고 불리는 사절이 江戸를 방문하여 각지에서 환영을 받았다. 또 조선의 부산에 宗氏의 倭館이 설치되어 약 500인의 일본인이 살면서 무역과 정보수집에 종사했다. (106쪽)</p>	<p><b>조선·유구·蝦夷地</b> 막부는 家康때 對馬의 宗氏를 통하여 秀吉의 出兵으로 단절된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했다. 양국은 대등한 관계를 맺고, 조선에서는 將軍의 대가 바뀔 때마다 朝鮮通信使라고 불리는 사절이 江戸를 방문하여 각지에서 환영을 받았다. 또 조선의 부산에 宗氏의 倭館이 설치되어 약 500인의 일본인이 살면서 무역과 정보수집에 종사했다. (106쪽)</p>

임란이후의 국교회복과정을 막부와 對馬 宗氏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강화를 위한 조선측의 노력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通信使를 단순히 장군 습격 축하 사절단으로 서술하여 일본 우위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부산왜관을 〈宗氏의 왜관〉으로 표기하여 조선에서 설치해준 사실을 은폐하고, 宗氏 소유의 商館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이상에서 서술한 것처럼, 2002년 이후 출판되기 시작하는 극우파 교과서인 〈扶桑社〉판과 〈自由社〉판의 근세부분 한국사 관련 서술은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페이지까지 같다. 이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검정을 통과했는지, 또 교과서로 채택될이지 주목해볼 일이다.

### 3. 쟁점주제의 비판

다음으로 이상에서 언급한 쟁점주제들이 〈東京書籍〉판과 〈扶桑社〉, 〈自由社〉판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비교하면서, 쟁점주제에 대한 최근 학계의 연구성과를 소개하면서 비판을 해보자.<sup>2)</sup>

### ① 왜구구성문제

왜구구성에 관해, 〈東京書籍〉판은 西國武士나 商人·漁民들이 만든 해적집단으로 서술하면서 주에서 〈왜구 가운데 일본인 이외의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했고, 〈扶桑社〉·〈自由社〉판은 일본인외에 조선인도 많이 포함된 해적집단으로 서술했다.

왜구구성에 조선인을 포함시킨 서술은 학설사적으로 볼 때, 田中健夫와 高橋公明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田中健夫는 ‘14·15 세기의 왜구’에 대해서, 1350년 이후의 습격 회수와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 시기의 왜구를 일본인만의 해적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한 다음, 『高麗史節要』의 禾尺·才人에 관한 기사를 들어, 고려 측의 천민과 일반 농민을 왜구 주력으로 지목하고, 이것을 보강하는 논거로서 고려의 토지제도와 신분 질서의 혼란을 들었다. 나아가 『朝鮮王朝實錄』의 「李順蒙上書」를 예로 들어 “왜구의 주체는 왜인의 복장을 한 고려인으로 일본인은 10-20%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소위 ‘왜구=고려·조선인 주체설’을 주장했다.<sup>3)</sup> 또한 高橋公明은 水賊, 구체적으로는 濟州道海民에 대한 『朝鮮王朝實錄』를 근거로 그들이 왜인과 밀접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제주도 에 대량의 말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여 왜구와 제주도해민의 관련성을 제기했다.<sup>4)</sup>

이러한 주장은 예를 들면 90년대 이후 발행된 사전과 개론서에 반영이 되었고<sup>5)</sup>, 이것이 그대로 〈扶桑社〉나 〈自由社〉판에 서술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본에서는 村井章介, 橋本 雄, 佐伯弘次 등과 한국에서는 이영, 남기학, 김보한 등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sup>6)</sup>

2) 최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행한 《한일 역사현안관련 일본역사교과서 연구논저목록》(2009)에 수록된 논저와 손승철, 《중근세 한일관계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2권, 2005) 참조.

3) 田中健夫, 「倭寇と東アジア交流圏」(朝尾·網野 외編, 『日本の社会史1 列島内外の交通と国家』, 岩波書店), 1987.

4) 高橋公明,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 『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史学33, 1987.

5) 『日本史辞典』(岩波書店, 1999)에는,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에 걸쳤는데, 그 성원은 尙馬·峽岐·北部九州의 일본인을 중심으로 했고, 禾尺·才人이라고 불리는 조선반도의 천민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근년에는 제주도민까지도 주목하고 있다. 활동한 지역은 조선반도·산동반도 등을 중심으로 했고, 식료의 약탈과 인간을 포획했다.〉고 기술되었고, 그러나 『概論 日本歴史』(길천홍 문관, 2001)에는, 〈왜구란 중국의 해금정책에서 형성된 동아시아의 私貿易, 海賊集團으로 민족, 국경을 초월하여 연합하고 있었다. 14세기 후반 이래 이들 집단이 사람과 물건과 기술 교류의 주역이 되어갔다. 1350년 이후 조선반도에서 활발화 한 왜구는 對馬·壹岐나 北部九州를 거점으로 한 日本人이나 朝鮮人을 주력으로 했다. 그 후 15세기 초에 걸쳐서 조선반도, 산동반도 등을 중심으로 사무역이나 약탈행위들을 행하고 있었다. (前期 倭寇)〉 서술되어 있다.

6) 李頌, 《倭寇と日朝關係史》제4장, 5장, 東京大學出版會, 1999. 동, 〈왜구의 주체〉《왜구·위사 문제와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4, 景仁文化社, 2005.

南基鶴, 〈중세 고려, 일본 관계의 쟁점-몽골의 일본 침략과 왜구〉《일본역사연구》17(일본사학회), 2003.

金普漢, 〈중세 려·일 관계와 왜구의 발생원인〉《왜구·위사 문제와 한일 관계》한일관계사연구논집 4, 景仁文化社, 2005.

浜中昇 「高麗末期倭寇集團の民族構成 -近年の倭寇研究に寄せて-」, 『歴史学研究』 685, 1996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고려사》에는 682건, 《고려사절요》에는 583건, 총 1,265건의 왜구 및 일본관련 사료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고려인설〉의 근거로 제시하는 고려 천민에 관계되는 사료는 단 3건이다. 그 예를 보면,

**사료1** (1382년 4월)<sup>7)</sup>

「楊水尺의 무리들이 때를 지어 왜적 행세를 하며 영월군을 침범하여 관사와 민가를 불태우니, 판밀직 林成味 등을 보내어 쫓아 잡아서 남녀 50여명과 말 2백여 필을 노획하였다.」

**사료2** (1383년 6월)<sup>8)</sup>

「교주·강릉도 水尺·才人이 가짜 왜적이 되어 평창·원주·영주·순흥 등지를 약탈하니, 원수 金立堅과 체찰사 崔公哲이 50여 명을 잡아 죽이고, 그 처자를 각 고을에 나누어 귀양보냈다.」

**사료3** (1388년 8월)<sup>9)</sup>

「… 水尺과 才人은 발갈고 씨뿌리는 것을 일삼지 않고, 앉아서 백성의 곡식을 먹으며, 일정한 산업도 없고, 일정한 마음도 없으므로 서로 산골에 모여서 왜적이라 사칭하는데, 그 형세가 무시할 수 없으니 일찍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료 중 고려천민이 왜구가 되어 약탈한 것은 사료 1과 사료2이며, 1382년과 83년 기사이며, 그 지역도 강원도 영월을 중심으로 한 깊은 산속이다. 고려에서는 이들이 출몰한 직후 모두 토벌을 감행했다. 물론 사료 3의 기사가 1388년이므로 천민의 假倭活動이 계속되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1383년 6월 이후 假倭의 출현 기사는 없다. 이들 사료 때문에 고려천민의 假倭活動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다시피 가왜활동이 아주 일시적이고, 강원도 영월지역 근처에 한정되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 假倭를 일반화시켜 왜구의 주체나 구성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朝鮮人說〉도 1443년 癸亥約條이후 조·일 간에 각종의 통교체제가 정비된 이후인 1446년에 판중추부사였던 李順蒙의 상소문에 근거한 주장으로서 그 事實性이 의심되는 사료이다. 이순몽은 상소문에서,

村井章介 「倭寇の他民族性をめぐって」, 大隅和雄·村井章介編 『中世後期における東アジアの国際關係』 山川出版社, 1997.

7) 《高麗史節要》권 31, 辛禡 8년 4월, 孫承喆編, 《韓日關係史料集成》권2, 사료 464번.

8) 《高麗史節要》권 32, 辛禡 9년 6월, 孫承喆編, 《韓日關係史料集成》권2, 사료 475번.

9) 《高麗史節要》권 33, 辛禡 14년 8월, 孫承喆編, 《韓日關係史料集成》권2, 사료 552번.

“...신이 듣자옵건대, 고려 왕조의 말기에 倭寇가 興行하여 백성들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倭人들은 1, 2명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본국의 백성들이 거 짓으로 왜인의 의복을 입고서 黨을 만들어 난을 일으켰으니, 이것도 또한 鑑戒되는 일입니다. ....”<sup>10)</sup>

라고 했다. 즉 군역을 증가시키기 위한 상소문 중의 왜구에 대한 언급이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朝鮮人說〉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1392년 7월 조선왕조 건국 후부터 이순몽의 상소문이 있는 1446년 10월까지 왜구 및 일본관련 기사는 2,897건인데, 조선인의 왜구활동기사는 단 1건뿐이다. 이 한건의 기사를 가지고, 그것도 傳聞에 의한 내용을 근거로 조선인을 왜구의 주력으로 기술하는 것은 역시 합리적이지 못하다.<sup>11)</sup>

한편 〈濟州道海民說〉의 핵심내용은, ①제주도가 고려본토에 대한 ‘이질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 ②왜구가 동원한 대량의 馬匹에 제주목의 말이 많이 섞여 있을 것이라는 설, ③ 1439년 前濟州道安撫使 韓承舜의 전문내용에 〈旌義縣 동쪽의 牛峰, 大靜縣 서쪽의 竹島에 옛날부터 왜선이 몰래 정박한다〉는 기록, ④ 《成宗實錄》13년(1482) 윤 8월 12일의, 〈濟州의 백성들이 연해 여러 고을에 流移하여 寓居하고 있으나, 이미 호적에 올려 있지 아니하고 또 금방함이 없어서 출입을 자유로이 하여 간혹 왜인의 말을 배우고 왜인의 의복을 입고서 해도를 왕래하며 몰래 표절을 자행하니, 그 조짐이 염려된다.〉는 기록이 근거가 된다.

이 내용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무엇보다도 이들 설의 근거가 한국사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검증되지 않은 추상적인 가설을 내세운 것이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①제주도의 고려본토에 대한 ‘이질성과 독립성’은 제주도 역사에 대한 역사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제주도는 여러 연구에 의해 12세기까지는 고려로부터 반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1105년 耽羅郡이 설치되어 직접 지배영토가 되었고, 13세기 중엽이후 원의 직할지가 되었다가 元의 지배를 벗어나는 공민왕 초기에 여러차례 반란이 있었지만, 1374년 완전히 토벌되어 고려의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했다. 그리고 1392년에 성립한 조선도 제주도에 대해 토착세력의 회유나 국가기구에의 편입 및 지배제도의 관철을 유지되었다.

② 〈왜구집단이 동원한 대량의 馬匹에는 濟州牧의 말이 많이 섞여 있을 것이라는 설〉도 가설에 불과한 하나의 상상이다. 만약 상상하는 것처럼 왜구가 제주도의 많은 말을 동원했

10) 《世宗實錄》권114, 28년 10월 임술, 孫承喆編, 《韓日關係史料集成》권5, 사료 2023번.

11) 이 설에 대해서 李頴은 〈고려말기의 왜구구성원에 관한 고찰〉《한일관계사연구》제5집, 1996.에서 ① 상소문의 주 내용이 호패법에 관한 것이며, 왜구에 관해서는 단지 傳聞을 인용했다는 점. ② 倭服의 주체는 새로운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점. ③ 이순몽이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부정했다.

다고 할 경우, 제주도인의 조직적인 참여나 왜구와의 연합이 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다. 한 일양국의 어디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료는 등장하지 않았다.

③의 사료도 마을의 古老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이며, 또 내용도 <옛날에 왜선이 와서 몰래 정박했다(倭船隱泊)했다는 것이다. 왜구의 근거지라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나 <濟州道海民說>에서는 이 기사를 가지고 제주도에 왜구의 근거지가 있었으며, 왜구와 제주도민이 협력관계에 있었다고 추정했다.

④의 기사는 <제주도인에 의한 해적행위>에 관련된 사료로, <제주도인이 왜인의 언어, 의복을 입고 해도를 왕래하며 몰래 약탈을 행한다>는 내용이다.

《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전남의 순천 일대에서의 해적행위는 1471년(성종 2)의 기사에 처음 등장한다.<sup>12)</sup> 그러나 이들의 소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조정에서는 院相會議를 하여 대대적인 토벌을 계획하고 경상도·전라도의 감사·병사·수사로 하여금 같이 의논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계책을 설정하여 끝까지 찾아서 잡도록 했다.<sup>13)</sup> 그 결과 이들이 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밝혀졌다.<sup>14)</sup> 그러나 이들이 제주도인이라는 지적은 나와 있지 않다.

그 후 1477년에 이르면, 경남 사천 고성 진주지방에 豆禿也라고 칭하는 濟州人이 등장한 기사가 있고, 1482년의 기사에, “濟州의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旴州와 泗川 지방에 많이 우거하면서 호적에 <이름을> 등재하지 아니하고, 해중에 출몰하며 왜인의 말을 배우고 의복을 입고서, 해물을 채취하는 백성들을 침략하니, 청컨대 추쇄하여 본고장으로 돌려보내소서.”<sup>15)</sup>라고 한 사료를 보면, 1470년대에서 80년대에 제주도 流民이 경상도 연해에서 倭服을 입고, 倭語를 써 가면서 연해민들을 상대로 약탈행위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색과 포획을 경상도와 전라도 관찰사에게 명령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470년대 이후 148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일부 제주도인이 경상 전라해안에서 연해민을 상대로 약탈행위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만 가지고 왜구의 구성에 제주도해민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수궁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우선 이들의 활동시기가 이미 소위 전기왜구의 활동기를 벗어나고 있고, 이 기사에 한정되어 있

12) 《成宗實錄》성종 2년, 12월 임오. 孫承喆編, 《韓日關係史料集成》권7, 83쪽, 사료 139번.  
 「(왕이) 전라도수군절도사 李惇仁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듣건대, 順天·興陽·樂安의 謫道 海島 가운데에 8, 9인의 무리를 지어, 밤이면 왜복을 입고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 사람을 검탈한다든가 혹은 하륙하여 도둑질을 하되, 낮이면 그 옷을 숨기고 평민의 것처럼 한다고 하며, ... 또 들으니, 樂安將校 金倍와 順天에 거주하는 사노 裴永達·玉山·朴長命 등 30여 인이 작당하여 네 척의 배를 타고 궁시를 가지고서 혹은 倭人이라 속이고, 혹은 濟州人이라 하며, 여러 섬에 정박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검탈하고, 또 번방 고을에서 방화하여 도둑질을 한다 하니, 경 등은 힘써 기묘한 계책을 내어 포획하여 아뢰되, 너무 번거롭고 떠들썩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힘써 비밀로 하라.”」

13) 《成宗實錄》성종 4년, 10월 신사. 孫承喆編, 《韓日關係史料集成》권7, 133쪽, 사료 255번.  
 14) 《成宗實錄》성종 4년, 10월 신사. 孫承喆編, 《韓日關係史料集成》권7, 134쪽, 사료 256번.  
 15) 《成宗實錄》성종 13년, 윤8월 무인. 孫承喆編, 《韓日關係史料集成》권8, 66쪽, 사료 955번.

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이들을 〈水賊〉이라고 불렀고, 왜구와는 전혀 별도로 인식했던 일시적으로 남해안 지역에 출몰했던 단순한 해적집단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근거하여 제주도해민을 왜구세력 내지는 구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재고해 볼 사항이다.

## ② 조선국호와 통교문제

〈東京書籍版〉에는 2002년판부터 조선국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조선과의 통교에 관해서는 단순히 〈일본과의 무역도 열렸다〉라고만 서술했다. 이에 반해 〈扶桑社〉·〈自由社〉판에는 朝鮮國(李氏朝鮮)이라고 표기했고, 조일통교는 〈조선이 일본에 요청했고, 막부가 이에 응한 결과 시작되었다〉고 서술했다.

이성계가 새로 건국한 나라의 국호는 〈조선〉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朝鮮〉이라는 국호는 과거 일본측의 사료(『古事類苑』, 『善隣國寶記』 등 室町時代나 德川時代史料集)에도 모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李氏朝鮮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폄하하기 위해 쓰기 시작한 용어이다. 구태어 ‘李氏朝鮮’이라는 용어를 쓸 이유가 없다.

통교문제에 관해서는, 1392년 조선에서는 건국직후 막부장군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왜구 금지를 요청했던 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막부에서는 足利將軍 명의가 아니라 승려인 絶海中津의 명의로 조선국왕에게 답서를 보내왔다. 그 서한의 내용은 막부장군이 조선측의 왜구금압과 피로인 송환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양국의 隣好를 지킬 것을 약속한다는 것, 그리고 막부장군이 조선과의 통교를 적극 원하고 있지만 장군이 직접 외국에 通問한 일이 없으므로 승려를 통해서 답서를 보낸다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볼 때, 당시 室町幕府도 조선과의 통교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통교는 조선과 교섭능력이 있었던 대마도와 구주세력들이 주도했고, 대마도주를 중간매체로 통교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室町幕府시대의 조일관계를 볼 때, 조선사절(回禮使·報聘使·通信使) 파견이 17회인데 반하여, 막부로부터의 日本國王使 파견은 70여회에 달했다. 당시 사절파견의 목적만 보더라도 조선은 왜구금지와 피로인 송환에 대한 回禮와 答禮가 주목적이었음에 비해, 日本國王使는 대부분이 통교요청과 大藏經請求였다. 또한 日本國王使의 파견이 조선에 비해 많았던 이유도 조선측으로부터 답례가 후하자, 위장된 사신이 僞使가 많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室町시대 조·일 간의 통교현황을 보면, 막부장군 외에도 각지역의 지방세력가들이 사절을 보내 통교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室町시대의 조·일간의 통교는 조선보다는 오히려 일본쪽에서 더 절실하게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이들의 무질서한 왕래를 통제하기 위해 포소를 三浦로 제한 했으며, 또 이들을 상경시켜 조선국왕을 알현케 하는 上京制度를 두었고, 대마도주에게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文引發行權)를 주어 일본으로부터의 모든 통교자를 조선의 통제규정(『海東諸國紀』)을 설정하여 무역을 허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443년의 癸亥約條는 이러한 조일통교의 성격을 잘 알려주고 있다. 약조의 내용 중에는 ‘대마도주에게는 매년 200석의 쌀과 콩을 하사한다.’ ‘대마도주는 매년 50척의 歲遣船을 보낼 수 있고, 부득이하게 보고할 일이 있을 경우 정해진 숫자 외에 特送船을 보낼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 약조의 내용은 두 개 항목만 알려져 있지만, 도주에 대한 세견선, 특송선, 세사미두를 정한 것이다. 세견선에는 일본사절과 함께 무역품이 실려있었다. 따라서 세견선수는 조·일 무역량과 양국의 무역수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선에서는 이 수를 제한 함으로써 무역량을 통제했다. 이렇게 파견된 세견선이 15세기 후반기에 이르면 연간 400척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조선에서 통교를 요구했다는 내용과 幕府가 이에 응했다는 기술은 사실이 전도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은 일본이 명에 파견한 遣唐使에 의해 日·明무역이 전개된다는 점에 있어 중국부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이다.

### ③ 임진왜란문제

〈東京書籍〉판은 1992년부터 〈조선침략〉의 항목명을 쓰고 있고, 전쟁의 원인에 대해 〈秀吉이 국내통일로 만족하지 않고, 조선에 복속을 요구했고, 명을 정복하기 위해 조선에 대군을 파견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扶桑社〉·〈自由社〉판에는 침략이란 용어는 쓰지 않고, 대신에 〈조선에의 出兵〉이라는 항목명을 썼고, 〈秀吉이 중국을 정복하고 동아시아에서 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하려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조선에 대군을 보냈다〉고 서술했다.

양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전쟁의 참상을 소개하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전쟁의 역사적 교훈 보다는 전쟁의 의도를 〈조선이 복속을 거부한 것에 대한 응징〉이거나 〈명을 목표로 한 전쟁이지 조선에 침략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궤변 또는 秀吉의 영웅심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조선사연구회〉의 분석을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즉 豊臣秀吉이 처음에는 명의 침략을 기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豊臣秀吉은 조선이 이미 일본에 복속하고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조선측이 假道入明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비로소 조선이 일본에 복속하고 있지 않았던 현실을 알게 되었고, 이 단계에서 조선에 침략한 것은 이미 조선침략자체가 목적이 되었다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명을 침략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고, 그 통로에 있던 조선이 피해를 보았다는 논리는 궤변에 불과하다. 또한 조선측의 피해에 관해서 이삼평을 일본의 陶祖로 소개하면서 조선도공의 연행이나 유학자의 납치가 일본문화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반대로 각 분야에서 조선측이 받은 피해를 서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선침략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어렵다. 뿐만아니라 〈朝鮮出兵〉이나 〈文祿·慶長の役〉이라는 용어도 일본 중심적인 사고이며, 이 전쟁이 조선에게 어떠한가 하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전쟁 중에 빚어진 일본군에 의한 침공, 학살, 약탈, 납치, 점령, 지배 등 생각한다면, 당연히 〈조

선침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고, 전쟁에 대한 반성이 공유되어야 바람직한 한일 관계의 未來像이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 ④ 조선통신사와 왜관문제

〈東京書籍〉판에는 慶賀使節(通信使)로 표기하다가 通信使라고만 표기했고, 부산왜관을 對馬藩이 부산에 세운 商館에서 倭館으로 서술했다. 〈扶桑社〉와 〈自由社〉판에는 장군의 代가 바뀔 때마다 朝鮮通信使가 축하사절로 江戸를 방문하고, 부산왜관을 〈宗氏의 倭館〉으로 표기했다.

통신사는 막부장군에 대한 축하나 조문, 기타 두 나라의 긴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 국왕이 막부장군에게 공식적으로 파견한 외교사절이다. 막부에서는 대마도주를 통해 통신사파견을 먼저 조선에 요청했고, 몇 개월 전부터 통신사접대를 준비했다.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되면 각 지역마다 수많은 문인들이 통신사의 숙소에 모여들어 異國 선진문화에 대한 동경과 흥미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통신사행의 역사적 자취는 아직도 일본 곳곳에 남아 있어, 두나라의 성숙된 우호관계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1970년대 이후 선린외교와 문화교류의 통신사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지만, 제자리를 찾은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통신사를 조공사절로 간주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막부장군이 바뀔 때 조선국왕이 국서를 바치기 위해 통신사를 보냈다는 것과 통신사와 비견되는 日本國王使가 파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통신사의 파견과정과 일본의 접대방식 및 외교의례 등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은 통신사파견에 앞서 절차상 먼저 조선 측에 통신사파견을 요청했으며(通信使請來差倭), 조선통신사가 부산을 출항하여 江戸에 이를 때까지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하여 통신사를 안내하였고, 각번의 大名들을 동원하여 접대를 준비하는 등, ‘장군 일대의 성대한 의식’으로 통신사를 맞이하였다. 한 자료에 의하면 통신사의 접대에 막부의 1년 예산을 지출했다는 기록도 있다.<sup>16)</sup> 결국 통신사의 왕래를 더욱더 필요로 한 것은 조선이 아닌 일본이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국왕사의 파견도 조선후기에는 〈大差倭〉가 대신하였으며, 조선전기 일본인의 상경로가 임진왜란 때에 일본군의 진격로로 활용되어, 조선후기에는 일본인의 상경을 금지하고, 왜관에서 모든 통교업무를 처리했다. 따라서 일본의 최고 통치자인 장군의 즉위를 축하했다는 표면적인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통신사가 마치 저자세로 일본을 방문한 인상을 주는 것 보다는 우호교린의 상징으로 양국의 대등관계의 상징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한편 조선에서는 임진왜란 때, 일본인 상경로가 일본군의 진격로로 이용된 이후, 조선후

16) 李元植, 『朝鮮通信使の研究』 思文閣出版, 1997. 仲尾宏, 『朝鮮通信使と徳川幕府』, 明石書店, 1997. 손승철, 《조선통신사 - 일본과 통하다》, 동아시아, 2006 참조.

기에는 일체의 일본인 상경을 금지했고, 그 대신 부산 초량왜관을 새로 지어 외교와 무역 업무를 해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왜관을 ‘宗氏의 왜관’으로 표기하여 마치 근대적인 의미의 영사관과 같은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倭館’이란 조선에 있었던 일본인의 거류지역으로, 일본에서 건너온 사자들을 응접하는 使館이자 客館이며, 조일 양국간의 商館을 말한다. 왜관이 창설될 당시인 15세기 초 무렵에 조선은 무역상의 이익을 구하기 위하여 쇄도하는 일본인 도항자를 통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국가 기밀의 누설과 밀무역의 횡행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조선에서는 일본인의 도항장과 체류를 위해 별도의 시설을 만들었다. 그 결과 1426년부터 三浦에 왜관을 설치했고, 상경하는 일본 사자들을 위해 수도 한양에 별도로 東平館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浦所에 위치한 왜관은 1510년 삼포왜란, 1544년 사랑진왜변 등 조일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였다.

그후 임진왜란으로 왜관을 폐쇄한 조선은 강화교섭을 위하여 쇄도하는 일본 사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1601년에는 絶影島(지금의 影島)에 임시 왜관을 설치하였고, 국고가 재개되면서 무역과 외교 교섭을 위한 장소로서 왜관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자, 1607년 豆毛浦에 1만여 평 규모의 왜관을 설치하고, 1609년에는 서울에 있던 東平館을 폐지하였다.

두모포 왜관(지금의 수정 2동) 성립 이후 부산에 위치한 왜관이 대일외교와 무역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포소 왜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선 전기와는 달리 크게 강화되었고, 접대처로서, 무역처로서, 숙박처로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豆毛浦 왜관은 설치 당시부터 수심이 얇고,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선창이 남풍을 직접 받는 위치에 있어서 배를 정박시키기에 부적절하였다. 그래서 대마도측은 8차례에 걸쳐 왜관을 부산성 안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드디어 조선에서는 1673년에 초량으로 이관을 결정하고, 1678년에 초량 왜관으로 옮김으로써 조일교섭은 초량 왜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부산 초량 왜관이 낙성된 것은 1678년 4월이며, 기록에 의하면 이전하는 날(23일) 두모포왜관으로부터 관수 이하 450여 명의 대마도 사람들이 新館에 들어갔다고 한다. 초량 왜관은 1678년부터 1872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위무성에 침탈되기까지 약 200년간 조일외교와 무역의 장이 되었다.<sup>17)</sup>

이와 같이 부산 초량왜관은 조선에서 대일교섭을 위해 설치해 준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宗氏의 倭館’으로 기술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상의 오류이며, 시정되어야 한다. ‘宗氏의 倭館’이라는 표현은 마치 對馬島主 宗氏が 사적으로 ‘倭館’을 설치했다는 표현이며, 이러한 인식은 1872년 9월, 明治政府의 外務大丞 花房義實이 군함 春日丸과 기선 有功丸에 보병 1개소대를 승선시켜 왜관에 무단 상륙하여 점령한 사실을 명치정부의 <倭館接

17)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제5장, 경인문화사, 2005 개정판 참조.

受)라는 표현으로 둔갑하여 다시 등장한다. 마치 일본의 대외공관을 새로운 명치정부가 인수한 듯이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 Ⅲ. 〈自由社〉판의 近世史像

#### 1. 목차와 내용비교

일본사에서 근세사는 대체적으로 16세기 후반부터 江戸時代를 거쳐 明治維新까지를 말하는데, 이 글에서는 조선의 중·근세에 해당되는 시기를 다루고 있으므로, 편의상 중·근세의 목차와 내용을 비교하도록 한다. 우선 東京書籍과 〈扶桑社〉·〈自由社〉판의 목차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중세의 목차 비교〉

東京書籍	扶桑社	自由社
<b>제3장 중세의 일본</b> <b>1. 무사의 대두와 鎌倉幕府</b> 1. 무사의 성장 2. 무가정권의 성립 3. 무사와 민중의 움직임 4. 鎌倉시대의 종교와 문화 <b>2. 동아시아세계와의 관계와 사회변동</b> 1. 몽골襲來와 일본 2. 남북조동란과 동아시아의 변동 3. 室町막부와 경제발전 4. 민중의 성장과 全國大名 5. 室町문화와 확산	<b>제2장 중세의 일본</b> <b>제1절 武家政治의 시작</b> 18. 平氏의 번영과 멸망 19. 鎌倉幕府 20. 元寇 21. 鎌倉文化 <b>제2절 무가정치의 움직임</b> 22. 建武정치와 남북조동란 23. 室町막부 24. 중세도시와 농촌변화 25. 室町문화 26. 応仁의 난과 全國大名 <b>제2장의 정리</b>	<b>제2장 중세일본의 역사</b> ~ 鎌倉·室町시대 <b>제1절 武家정치의 시작</b> 19. 平氏의 번영과 멸망 20. 鎌倉막부의 무가정치 21. 대중과 무가의 불교와 鎌倉문화 22. 원의 습래와 그후의 鎌倉幕府 <b>제2절 武家정치의 움직임</b> 23. 建武新政과 남북조시대 24. 室町幕府와 守護大名 25. 중세의 도시, 농촌의 변화 26. 和風을 완성한 室町文化 27. 応仁 난이 만든 全國大名 제2장의 정리

우선 東京書籍판은 제3장을 중세일본으로 했고, 扶桑社와 自由社판은 제2장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東京書籍의 경우 제1장을 역사의 흐름, 제2장을 원시, 고대의 일본으로 서술했기 때문이며, 扶桑社와 自由社판은 제1장을 고대일본의 역사로 하여 석기시대이후를 전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東京書籍판과 扶桑社·自由社판의 목차를 보면, 東京書籍판이 제2절을 〈동아시아세계와의

관계와 사회변동)이라고 한데 대해, 扶桑社·自由社판은 〈무가정치의 움직임〉으로 표기하여 무가정치의 동향과 大名의 등장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상에서는 〈扶桑社〉판의 〈20. 元寇〉와 〈21. 鎌倉文化〉가 〈自由社〉판에는 〈21. 대중과 무가의 불교와 鎌倉문화〉와 〈22. 원의 습래와 그 후의 鎌倉幕府〉로 순서가 바뀌었고, 내용은 〈元寇〉는 항목명만 바뀌었고, 문학과 미술이 사원건축과 조각, 문학과 회화로 항목을 세분화 했을 뿐,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음 근세사 부분을 보면,

〈근세의 목차 비교〉

東京書籍	扶桑社	自由社
<b>제4장 근세의 일본</b> <b>1. 유럽인과의 만남과 전국통일</b> 1. 유럽인의 세계진출 2. 유럽인과의 만남 3. 織田信長·豊臣秀吉에 의한 통일사업 4. 병농분리와 朝鮮侵略 5. 桃山문화 <b>2. 江戸막부의 성립과 쇄국</b> 1. 강호막부의 성립과 지배 구조 2. 여러신분들의 생활 3. 무역의 진흥에서 쇄국으로 4. 쇄국하의 대외관계 <b>3. 산업의 발달과 막부정치의 움직임</b> 1. 농업과 제산업의 발달 2. 도시의 번영과 元祿문화 3. 享保개혁과 사회변화 4. 막부정치의 개혁 5. 새로운 학문과 化政문화 6. 외국선의 출현과 天保개혁	<b>제3장 근세의 일본</b> <b>제1절 전국시대서 천하통일로</b> 27. 유럽인의 세계진출 28. 유럽인의 내항 29. 織田信長과 豊臣秀吉 30. 秀吉의 정치 31. 桃山문화 <b>제2절 江戸막부의 정치</b> 32. 江戸막부의 성립 33. 江戸막부의 대외정책 34. 쇄국하의 대외정책 35. 평화적으로 안정된 江戸 시대의 사회 <b>제3절 산업의 발전과 三都의 번영</b> 36. 농업·산업·교통의 발달 37. 綱吉의 문화정치와 元祿 문화 <b>제4절 막부정치의 전개</b> 38. 享保개혁과 田沼정치 39. 寬政개혁과 天保개혁 40. 歐米精進國의 접근 41. 化政문화 42. 새로운 학문과 사상의 동향 <b>제3장의 정리</b>	<b>제3장 근세일본의 역사</b> ~安土桃山·江戸시대 <b>제1절 전국시대서 천하통일로</b> 28. 유럽인의 세계진출개시 29. 유럽인의 일본내항 30. 信長과 秀吉의 全國統一 31. 豊臣秀吉의 정치와 朝鮮出兵 32. 黄金과 「한가로우」의 桃山문화 <b>제2절 江戸막부의 정치</b> 33. 江戸막부의 성립과 통치 구조 34. 朱印船무역에서 쇄국으로 35. 鎖國下의 일본의 네 窓口 36. 江戸사회의 평화와 안정 <b>제3절 산업의 발전과 三都의 번영</b> 37. 농업·산업·교통의 발달 38. 綱吉정치와 元祿의 町人 문화 <b>제4절 막부정치의 전개</b> 39. 享保개혁에서 田沼정치로 40. 寬政개혁과 天保개혁 41. 江戸의 町人과 化政문화 42. 새로운 학문·사상의 동향 <b>제3장의 정리</b>

〈東京書籍〉판이 3절임에 비해, 〈扶桑社〉·〈自由社〉판은 4절로 편성했고, 절의 명칭을 볼 때, 유럽문화와의 접촉을 항목명에 집어 넣었으며, 산업의 발달과 함께 도시의 발달을 강조했고, 막부정치의 전개를 따로 항목으로 독립했다. 이로 보아 〈扶桑社〉·〈自由社〉판이 〈東京書籍〉판에 비해 대외관계보다는 국내 정치의 변화를 더 강조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쇄국하의 일본의 네창구〉의 항목명을 설정한 것을 보면, 최근의 연구를 수용했다는 인상

을 주려는 노력도 의도적으로 드러내었다.

〈扶桑社〉판과 〈自由社〉판의 내용에서는, 제1절은 〈扶桑社〉판의 〈31. 桃山文化〉가 〈自由社〉판의 〈32. 황금과 한가로움의 桃山문화〉로 바뀌면서, 〈大名과 大商人의 문화〉와 〈서민의 생활과 문화〉가 〈天守閣과 襖繪〉, 〈茶道의 大成〉, 〈가부끼〉 등으로 바뀌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분량은 같다. 중세에서 문화가 강조된 것과 같은 분위기이다. 또한 〈自由社〉판에서 항목명에 〈朝鮮出兵〉을 표기한 것도 주목된다.

제2절은 4개의 항목명이 조금씩 바뀌었으나 내용은 완전히 일치한다. 제3절은 〈東京書籍〉판의 〈37. 綱吉의 문치정치와 元祿문화〉의 〈학문의 발달〉의 유학과 자연과학에 대한 서술이 없어지고, 〈元祿文化〉의 절목에서 浮世繪와 가부끼에 대한 서술이 늘어났다. 유학에 대한 서술이 왜 없어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위에서처럼 그림과 회화 등 문화부분에 대한 설명이 늘어났다.

제4절에서는 〈扶桑社〉판의 〈40. 구미제국의 접근〉이 〈自由社〉판에서는 근대사 부분에서 서술되었고, 〈41. 化政文化〉가 〈41. 江戸의 町人과 化政문화〉로 항목명이 바뀌고, 江戸시대의 町人の 생활이 부유해지면서 江戸를 중심으로 町人문화 즉 化政문화의 발달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부끼와 浮世繪, 狂歌 등을 상세히 서술했다. 역시 문화부분에 대한 강조이지만 중학교 과정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의심이 간다.

## 2. 近世觀의 문제점

〈自由社〉판의 近世史像의 특징은 첫째, 천황이 강조된 고대사의 서술에 비해 근세사 서술이 상대적으로 적게 서술되었다는 사실이다.<sup>18)</sup> 그 예로 이 책의 맨 앞에 서술된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에서 단적으로 표현된다. 그 가운데 〈일본문화의 전통〉에서 〈세계의 어떤 국민도 각각 고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도 스스로 고유의 역사가 있다. 일본의 국토는 옛날부터 문명을 키우고, 독자의 전통을 키웠다. 고대 일본은, 중국에 출현한 문명에서 겸허하게 배우면서도 스스로의 전통을 잃지 않고, 자립한 국가를 세워 착실하게 역사를 발전시켰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하는 문화유산·역사유산을 관찰하면 잘 알 수 있다. 구미제국의 힘이 동아시아를 삼켜버린 근대에 있어서, 일본은 자국의 전통을 지키면서 서구문명과 조화의 길을 탐색했고, 근대국가의 건설과 독립유지에 노력했다.〉고 서술하면서도 중세와 근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전통적인 중세·근세관과 연관이 있다. 즉 중·근세는 가치가 없는 시대, 가능하면 언급하고 싶지 않은 시대라고 하는 역사인식과 관계가 있다.

일본인의 경우 중세의 이미지를 나타 내는 키워드로 武士시대·一揆시대·하극상·농민의 성장 등이 있고, 근세를 생각하면 막번체제·쇄국·百姓一揆·유교 등이 있다고 한다.

18) 子どもと教科書全國ホット21, 『つくる會教科書』, 대월서점, 2005, 24-26쪽.

그리고 이 두 시대는 봉건제·무사의 지배시대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 시대의 주역은 武士인 것이다. 따라서 바꾸어 말하면 朝廷이나 天皇의 존재는 뒤로 밀려난다. 또 두 시대는 국가라고 하는 틀 속에서 시대상을 그리기 보다는 지방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다. 중세는 율령국가해체에서 지방의 무사세력이 대두되었고, 근세는 막번체제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체제하에 안정한 시대였지만, 지방의 지배는 藩이라고 하는 단위로 나뉘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天皇과 朝廷의 존재도 중세전체를 통해 권력의 기반이 약했고, 근세에는 幕末까지 거의 잊혀진 존재였다. 즉 중세와 근세는 국가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기가 힘든 시대였다. <扶桑社>와 <自由社>판이 천황의 존재를 과대평가하고, 일본국가 지상주의를 지향하는 의도를 가진 이상 중·근세의 취급을 단연히 소홀히 할 것이며, 고대의 비중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 증거의 하나가 기존의 교과서들에 비해 중·근세 서술이 상대적으로 적다.

〈각시대의 분량과 비율〉

	自由社(2009)	扶桑社(2006)	東京書籍(2006)
원시·고대	54 (24.8%)	50 (23.7%)	36 (17.3%)
중세	<b>24 (11.0%)</b>	<b>24 (11.3%)</b>	<b>30 (14.4%)</b>
근세	<b>40 (18.4%)</b>	<b>42 (19.8%)</b>	<b>44 (21.2%)</b>
근대	50 (22.9%)	48 (22.6%)	46 (22.1%)
현대	50 (22.9%)	48 (22.6%)	52 (25.0%)
본문쪽수	218 (100%)	212 (100%)	208 (100%)

둘째, 막부의 정치구조를 분석하면, 幕府가 전국을 통치한 것은 아니고, 將軍과 大名이 통치권을 나누어 갖고, 대명이 藩内の 통치를 위임받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근세의 정치제도는 해체되고 있던 장원제도=봉건제도를 영주계급의 통일과 토지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무사·백성·町人 등에 의한 분배, 분권사회의 건설에 의해 생긴 것이고, 이것은 信長·秀吉·家康 등 천하인 들의 통일과정을 통해 가능해 졌다. 그리고 무사는 통치권을 독점했지만, 사회평화를 지켜줌으로써 여러 신분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근세신분제도는 제신분간에 이동이 가능했고, 여러 신분은 각각 자치를 행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막번체제는 막부와 諸大名이 분립하여 연합한 「聯邦制」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sup>19)</sup>

또한 근세의 농민은 秀吉의 檢地에 의해서 田畠의 소유권을 인정받아 자립한 농민이었고, 江戸幕府의 年貢率은 생산력이 발전하는데 따라서 檢地高의 3할~1.5할 정도까지 저하

19) 이하는 川瀬健一, 『新しい歴史教科書』同時代社, 2007, 제3권 근세편의 서론 부분을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되었으며, 年貢率이 떨어지는 가운데 농민은 많은 상품작물을 재배하고, 점차 풍요롭게 되었다. 또한 근세초기의 대개발에 의해서 막대한 농산물 수요가 생겼고, 이에 따라 여러 산업이 발전하여, 江戸시대에는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으며, 그 결과 근세의 경제제도는 이미 前期 資本主義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의 상태가 되었고, 중세이래 진전된 상품경제가 사회 전체에 스며들어 토지가 이미 資本財로서 기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을 배경으로 자본주의적 대토지 경영자나 기업경영자도 생겨,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금융자본가도 생겨나고, 근세는 점점 높은 상품경제에 기초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당초에는 해외에서 수입했던 생사, 견직물, 목면도 자급하게 되었다. 국제상품인 견·면직물이나 담배 등을 근세를 통해 자급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은 서유럽이 産業革命에 의해 면직물을 자급·수출하게 되었다는 것에 필적할 만한 일이고, 이것이 기반이 되어 幕末의 開國·明治維新을 통해 일본이 자본주의국으로 발전하여, 서유럽에 대항하여 세계를 분할하는 帝國에까지 발전한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일본의 근세는 근대로 들어가는 문,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준비한 시대였는데, 바꾸어 말하면, 근세는 「암흑」의 봉건사회가 아니라, 고도로 발전한 상품경제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적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세운 근대지향적인 사회이며, 그것을 통제 내지 기반으로 하면서, 봉건적 영주계급이 영주적인 조세징수권을 가진 근대적인 사회, 즉 서유럽이라면 절대왕정이라고 불리는 정치형태를 취한, 국민국가형성의 초기국가에 상당한다고 했다.

거기에서 근세사회는 서로 다른 종류의 공동체에 의한 자치를 그 기초에 두고, 여러 개인이 각각의 권리를 행사하는 시대이며, 일본적인 형태를 취하면서도 근대시민사회의 형성이 준비되었던 시대라는 것이다. 그리고 「막부정치의 개혁」이란, 발전하는 자본주의적 경제제도와 재편성된 봉건제도와 모순이 나타나면서, 사회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치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행착오의 시대였다는 것이다. 검증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서구 유럽사에 자대를 맞춘 왜곡의 역사로 일관하고 있다.

셋째, 고대 중세와 같이 중국·조선의 정치적·문화적 영향을 아주 과소평가하고 있다. 특히 쇄국론에 대해 쇄국은 나라를 폐쇄하는 정책이 아니고, 정보와 무역을 관리하면서 해외와의 교류를 유지하는 정책이라고 서술하면서, 동아시아에 대한 시각을 결여한 쇄국론을 설명한다.

〈自由社〉판은 쇄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즉 「1639(寬永16)년, 막부은 포르투갈선의 내항을 금지했다. 영국은 이미 철퇴했기 때문에, 무역이 허가된 유럽인은 오란다인밖에 없었다. 오한다인은 그 후, 平戸에서 長崎의 出島에 상관을 옮겨 활동했다. 무역과 출입국을 엄하게 제한한 이 제도는 후에 쇄국이라고 불렸다. 쇄국의 최대의 목표는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위험을 방지와 국내질서의 안정 때문에 기독교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쇄국이라해도 완전히 나라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막부가 무역과 해외정보를 독점하는 체제로, 해외와의 교류는 계속되었다.」

이어서 <쇄국하의 네 개의 창구>에서, 「이렇게 하여 쇄국하에서 江戸시대에는 長崎, 對馬, 薩摩, 松前の 네 개의 창구가 외국에 열려져 있었다. 이들 창구를 통하여 타국과의 무역도 행했고, 세계의 정보도 들어왔다. 막부는 무역을 통제하고, 이익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유럽으로부터는 새로운 학문이나 문화도 일본에 들어왔고, 일본의 국내에서도 차츰 받아들여지고 있었다.」고 했다.

이러한 서술에 대해, <네 개의 窓口論>을 제창한 荒野泰典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비판해 보자. 荒野泰典은 두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sup>20)</sup> 첫째, 아시아 특히 일본이 직접 위치한 동아시아에 대한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앞에서 동아시아나 그 지역과의 관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서구이외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가 그려져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중국·조선·琉球·북해도 등의 관계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自由社>판의 관심은 여전히 서구와의 관계에 머물러 있다.

둘째, 일본 역사를 밝고 긍정적으로만 읽는 사람의 구미에 맞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는 집필자의 서술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발전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된 서술에 의해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때, 자꾸 왜곡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왜곡된 역사서가 출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에 새로 시판되고 있는 <自由社>판 『일본인의 역사교과서』 중근세 부분의 한국사관련 서술도 종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나 내용면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중근세의 경우 쟁점주제는 왜구, 조선국호와 통교문제, 임진왜란, 조선 통신사 및 왜관 등인데, 그 내용은 2006년에 발행된 <扶桑社>판의 내용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왜구구성에 있어서는 <일본인외에 조선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었고, 조선의 국호도 李氏朝鮮을 병기하고 있으며, 조일통교가 조선의 요청을 막부가 허가하여 시작된 것으로 왜곡했다. 임진왜란은 여전히 朝鮮出兵으로 표기했고, 豊臣秀吉의 원대한 꿈만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 또한 조선통신사도 단순히 장군습직을 축하하는 사절단으로 서술하여 일본우위의 입장을 고수했고, 부산왜관을 대마도주가 설치한 宗氏의 倭館으로 사실을 전도하여 서술했다.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왜곡된 서술임이 분명하다.

한편 2006년 <부상사>판과 2009년 <자유사>판의 근세부분의 목차와 내용을 비교해보면, 근세의 제1절에서는 <도산문화>를 <황금과 한가로움의 도산문화>로 바꾸고, 제4절에서는 <화정문화>를 <강호의 정인과 화정문화>로 바꾸면서, 건축, 다도, 가부끼, 부세회, 광가

20) ‘교과서에 진실과 자유를’ 연학회 엮음, 김석근 옮김, 『철저비판, 일본우익의 역사관과 이데올로기』바다출판사, 2001, 203-217 참조.

등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많아졌다. 아마 종전의 부정적인 비판을 의식하여 문화부분의 서술을 늘린 것 같으나, 중학교 과정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의심스럽다.

끝으로 <자유사>판의 근세사 서술과 근세관이 한국관련 서술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기, 한일관계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술이 너무 빈약하다. 나아가 조선의 정치적·문화적·경제적 영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쇄국과 네 개의 창구> 서술에서도, 유럽과의 관계만을 강조하여 서술할 뿐, 중국이나 조선, 심지어는 유구나 아이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일본인들 스스로 인정하듯 구미에 대한 콤플렉스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역사인식이 결국은 한국관련 서술을 소략하게 했을 것이고, 무시·편파하고 왜곡하게 되는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현단계에서 좀더 명쾌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지만, 집필자에 대한 추적도 정밀하게 이루어진다면 보다 설득력있는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본다.(끝)

토 론 문

## 《일본인의 역사교과서》(自由社)의 근세 한국사 관련서술과 日本近世史像

민 덕 기(청주대학교)

### ○ 본 발표논문의 의미

손교수에게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는 장기간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런만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편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그간의 관심과 연구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은 일본 중학교의 역사교과서 중에서 최근 30년 동안 “채택률이 가장 높았던 『東京書籍』 판과 2000년 이후 새로 출현한 극우파교과서 『扶桑社』와 『自由社』 판의 근세부분 한국사관련 서술을 비교한 후, 이들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 近世史像을 분석” 하려고 한 것으로, 특히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近世史像이 한국사관련 서술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나아가 그것이 어떻게 한국사관련 서술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론적인 분석이라고 한다.

그런 발표자의 의도가 잘 반영되어 『쟁점주제의 비판』에서는 우선, 일본측의 왜구구성문제를 『高麗史節要』를 직접 3건 발췌하여 반론하고 있다. 즉 사료로 보는 한 ‘假倭’활동은 극히 일시적이며 강원도 영월지역 근처에 한정된 것이므로 왜구의 주체나 구성에 ‘假倭’가 포함될 수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다음은 高橋교수의 『濟州道海民說』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한국사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검증되지 않은 추상적인 가설”에 의한 것이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반박하고 있다.

또한 조선이 통교를 요구해 일본(막부)이 이에 응하여 양국간의 무역이 시작되었다는 이른바 「조선 요청—일본 수용」이란 記述에 대해서도, 조선 초 양국 교섭의 실상을 규명하여 「일본 요청—조선 수용」이라 밝히고 있다.

특히 해당 교과서의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의도를 “〈조선이 복속을 거부한 것에 대한 응징〉이거나 〈명을 목표로 한 전쟁이지 조선을 침략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궤변 또는 秀吉의 영웅심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고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 왜관이 메이지 정부에 의해 〈倭館接受〉화 된 것은 에도시대 〈宗氏의 倭館〉으로 착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일본측 교과서가 그런 착오를 계승하고 있다고 설파

하고 있다.

손교수는 해당 3개 교과서가 중·근세의 自國史를 어떤 분야를 어떻게 차등 있게 묘사하여 어떤 의도를 나타내려 하였는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적절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더구나 우익적 교과서의 경우, 그 때문에 근세사회를 근대로 이행하는 역동적인 준비기로 적극 평가하고 있다는 관찰도 매우 예리한 분석이라 하겠다.

본 발표는 발표자가 스스로 서론부에서 “일본교과서에 나타난 近世史像이 한국사관련 서술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나아가 그것이 어떻게 한국사 관련 서술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론적인 분석”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근세관의 문제점」에서, 또는 「맺음말」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조선·중국의 정치·문화적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든가, 다양하게 전개된 한일관계에 대한 서술이 빈약하다든가, 유럽과의 관계 중심적 대외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평가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이전의 모든 일본 역사교과서를 통해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나 여겨진다.

#### ○ 보충설명 요망 개소

- (1) 「②조선국호와 통교」의 「扶桑社」판 2002년과 2006년 것의 서술 차이, 즉 前者가 “그러나 16세기초 조선항구에 정박해 있던 일본인이 관리들의 처우에 반발하여 폭동을 일으켰다가 진압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뒤에 조선과의 무역은 부진하게 되었다”라고 삼포왜란을 묘사한 것에 비하여 후자는, “그러나 16세기에 들어가면 日朝간에 마찰이 일어나, 조선과의 무역은 부진하게 되었다.”라고 단순표현을 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 (2) 「④조선통신사와 왜관」의 설명에서 “임란이후의 국교회복과정을 막부와 對馬 宗氏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강화를 위한 조선측의 노력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란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망. 강화과정이 기본적으로 막부와 대마도는 강화를 열망하는 입장이었고, 조선은 이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전개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
- (3) 「3」쟁점주제의 비판 —①왜구구성문제」에서, 田中健夫와 高橋公明의 주장을 일본에서는 村井章介, 橋本 雄, 佐伯弘次 등이 부정하고 있다고 표현. 어떤 否定 논리인지 보충 설명 요망. 특히 村井교수의 경우 ‘境界人’ 논리로 조선·고려인의 왜구 참여를 주장하고 있을 것이므로 궁금.
- (4) 「②조선국호와 통교문제」의 끝부분에서 “조선에서 통교를 요구했다는 내용과 幕府가 이에 응했다는 기술은 사실이 전도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은 일본이 명에 파견한 遣唐使에 의해 日·明무역이 전개된다는 점에 있어 중국부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이다.” 여기서 후반부의 표현은 이른바 일본의 해당 교과

서가 「明 요청—일본 수용」이란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인지? ‘遣唐使’는 ‘遣明使’가 적절할 듯.

- (5) 일본 역사교과서는 누군가에 의해 제기된 학설에 근거하여 기술될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 왜관을 〈宗氏의 倭館〉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언제, 누구의 학설에 근거한 표현인가?

○ 궁금한 점

(1) ‘李氏朝鮮’

- a) 사실 ; 「東京書籍」판에선 1983년이나 1992년엔 있었으나 2002년엔 ‘李氏’를 삭제. 그러나 「扶桑社」 「自由社」판에선 여전히 사용.
- b) 평가 ; 「②조선국호와 통교문제」에서 “〈朝鮮〉이라는 국호는 과거 일본측의 사료(『古事類苑』, 『善隣國寶記』 등 室町時代나 德川時代 史料集)에도 모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李氏朝鮮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폄하하기 위해 쓰기 시작한 용어이다.”
- c) 의견 ; 일제가 폄하하기 위해 썼음을 입증할 자료는 있는지? 혹 源氏 막부, 足利氏 막부, 德川氏 막부처럼 姓氏와 정권을 합칭하는 일본식 慣用에서 단순 유래한 것은 아닌지? 사용 초기는 그렇다 하고 혹 ‘北朝鮮’과 구분하기 위해 현재도 사용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2) ‘慶賀使節’

- a) 사실 ; 「東京書籍」판에서 2002년부터 ‘慶賀使節(通信使)’을 ‘使節(通信使)’로 표현
- b) 평가 ; “경하라는 표현이 일본 우위의 입장이라는 한국측의 수정요구를 의식한 듯하다.”
- c) 의견 ; ‘경하사절’의 수정은 琉球가 에도막부의 소군 취임에 파견하는 ‘慶賀使’과 혼동할 염려 때문은 아닐까?

(3) 15세기 후반의 ‘假倭’의 해적행위

- a) 사실 ; 발표문 註 12~15의 사료 속에 등장하고 있는 倭語·倭服의 조선인 沿岸島嶼 해적집단
- b) 평가 ; 남해안에 출몰한 일시적인 해적집단, 前期왜구 발생기간 이후이므로 왜구구성원 논의에서 제외 된다
- c) 의견 ; 왜 ‘假倭’의 행위를 할까? 왜구=극악무도배란 공포를 조장해 약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朝廷의 수사혼란 획책? 소수의 사료라 해도 천민집단이나 해적적 집단이 영월이나 남해안에서, 왜 ‘假中國人’이나 ‘假胡’가 아닌 ‘假倭’로서 활동하고 있는가, 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듯

- (4) 「2)近世觀의 문제점」에서, 〈自由社〉 〈扶桑社〉판이 천황과 국가가 강조되어질 수 있는 고대와 근대와는 달리, 그러지 못하는 중·근세는 소홀히 다루었다며 표로 〈각 시대의 분량과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중세가 상대적으로 그 %가 적은 것은 ‘중세’라는 시기, 짧은 기간(12세기 말~16세기 중반) 때문은 아닐까? 고대 또한 〈원시·고대〉로서 〈원시〉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 커진 것은 아닐까?

○ 토론자의 제안

- (1) 왜관을 〈宗氏의 倭館〉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선, 중국 북경의 會同館, 중국 泉州의 琉球館, 한성의 태평관, 나가사키 오란다 商館 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

(2) 임진왜란 원인에 대한 기존 교과서와 우익 교과서의 철저한 비교 필요

a) 기존 교과서의 한 유형의 예

『高等学校日本史』(清水書院 1991), 109쪽 : “(秀吉は)明との国交を開こうとして失敗すると、朝鮮に征明の先驅をつとめることを要求した。朝鮮は、これに応じなかったのので、1592(文祿元)年秀吉は朝鮮に出兵した” ;일종의 조선 책임론

b) 「扶桑社」와 「自由社」판의 경우

“秀吉은 중국의 명나라를 정복하고, 天皇과 함께 자신도 대륙에 옮겨 살면서, 동아시아에서 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하려는 거대한 꿈을 가졌다. 1592(文祿元)년, 秀吉은 15만의 대군을 조선에 보내었다”

c) 위의 우익 역사교과서 내용 비판

히데요시는 일본군이 서울과 평양을 함락한, 이른바 승승장구한 상황에서 대제국을 꿈꾸기에 이른 것이지, 대제국을 꿈꾸어 조선을 침략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하 참고)

\* 北島万次, 『豊臣政権の対外認識と朝鮮侵略』(校倉書房1990)

95쪽 ; “조선에 주둔 중인 장수들에게 보낸 (히데요시의) ‘征明’에의 檄文은, 히데요시가 제1차 조선 침략의 緒戰의 승리 소식을 접한 단계에서 내어진 것이다. 히데요시는 後陽成천황을 북경에 옮기고, 스스로는 寧波에 거소를 정하여 동아시아에 일대 帝國을 만드는 구상을 세웠으니”

97쪽 註 13 ; 히데요시가 외국침략을 최초로 밝힌 것은 1585년 部將에게 私적으로 “秀吉日本国者不及申、唐国迄被仰付候心ニ候歟” 1587년 규슈의 농민 저항(一揆)의 진압과 관련하여 “九州之儀者五畿内同前”이라 하고, 규슈를 확실히 장악하면 “唐、南蛮迄も” 경략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있다.

# 검정통과 중학교 교과서의 아시아침략에 대한 서술의 특징

최 덕 수(고려대)

〈목 차〉

- I. 머리말
- II. 교과서를 통한 근대 일본의 전쟁 관련 이미지의 형상화
- III. 아시아 침략 전쟁에 대한 기술/배치의 변화양상
- IV. 맺음말

## I. 머리말

지난 4월 9일 일본정부는 자유사(自由社)판 『신편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공식 발표하였다. 『신편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집필하였던 2001년과 2005년의 후소사(扶桑社)판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개정판이다. 여기에서는 자유사판 검정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그간 교과서문제의 발생과 분쟁의 전개과정(2001년/2005년/2009년)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양상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하여 잠깐 짚어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국제적인 분쟁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이였다. 1982년 이후 현재까지 교과서문제는 검정 기준에 ‘근린조항’(1982)의 설치와 ‘전후 오십년 종전 기념일담화(무라야마 담화)’(1994) 등을 통해서 해결을 위한 진전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양국 간 사회 문화 교류에 걸쳐 여전히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이번 검정의 직전 시기인 2005년, 검정 결과 발표와 함께 양국 관계는 교육 문화의 차원을 넘어 정치와 외교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분쟁으로 이어졌다. 때마침 2005년은 소위 ‘한일 우정의 해’로 양국 정부가 설정했던 시기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2005년은 한국에게 있어 해방 60주년이 되는 시기였고, 시대를 거슬러 보면 ‘보호조약’과 러일전쟁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런데 일본에서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서울주재 일본대사가 외신기자와 영어로 진행된 회견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발언하였다. 그리하여 2005년은 한일 양국이 우정을 나누는 해가 아니라 오히려 파탄을 맞이하는 해가 되고 말았다. 서민들은 아파트 입구에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펼침막으로 대응하였고 정부와 국회

에서도 국내 정치 문제를 제쳐놓고 격렬한 정치적 공방을 펼쳤다.

2005년 4월 5일 오후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검정 발표가 있었던 그 날로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정부의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독도 문제는 교과서문제와 분리 대응한다. 둘째, 정부차원의 교과서 수정요구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셋째,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 지원을 통해 교과서채택 저지운동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대응방침은 1982년 이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과정을 되돌아 볼 때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한국정부가 천명한 대응방침 가운데 특별히 “정부 차원의 수정요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정부의 대응방침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되었던 것이 수정 요구 조항이었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정부 차원의 수정요구는 하지 않는다”라는 대응책이야말로 1982년 이래 우리가 겪었던 “극일운동” 등 역사 왜곡 시정 방안의 거듭된 시행착오로부터 얻은 소중한 성과였다고 판단한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한 세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심화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사교과서 문제의 해결을 교육과 역사인식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협상과 외교적인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던 데 있었다고 할 것이다. 2005년에 이르러서야 역사인식의 문제는 역사인식의 논리로, 외교적 분쟁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시민차원의 노력은 시민 간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물길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역사 연구와 교육의 현장에서 선각적인 세력들의 연대와 공동 연구, 그리고 교과서 비판 활동 등에 힘입어 8월 31로 후쇼샤판 역사교과서 채택율이 0.39%로 나타났다. 일본 우익들의 목표가 10%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의 시민단체와 언론이 벌인 교과서운동의 결과는 적극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당시의 그와 같은 희망적인 자세를 여전히 그대로 수용해도 좋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이 있을 때마다 새역모와 같은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를 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2009년 검정을 통과한 새역모의 자유사판 중학교 교과서는 알려진 바와 같이 제1차 검정시 516개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불합격되었으며, 재신청시에도 136개소에 이르는 수정 의견이 나와 그것을 전부 수정한 다음에야 검정에 합격했다고 한다.<sup>1)</sup> 그리고 2001년과 2005년, 그리고 2009년의 새역모 교과서에 대한 검정 과정을 검토한 남상구의 연구에 의하면 2009년판 새역모의 출현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sup>2)</sup> 2001년에는 ‘일면적인 견

1) 이원우, 2009, 「막말·명치전기 서술의 특징과 문제점」, 『2009년 ‘새역모’ 중학교 역사교과서 상세 분석』, 일본 ‘자유사(自由社)판 역사교과서 관련 동북아역사재단 학술대회 자료집, 127쪽.

2) 남상구, 2009, 「‘새역모’ 발간 교과서의 검정실태에 나타난 일본 교과서 검정제도의 문제점」, 『2009

해를 충분한 배려 없이 기술' 등 기술 내용에 대한 지적이 80%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에는 73%, 2009년에는 50%로 점차 감소하였고, 특히 2009년에는 기술 내용에 대한 지적보다는 고유명사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sup>3)</sup> 결과적으로 새역모 교과서는 세 차례의 검정을 거치는 동안 내용과 표현 등에 있어 정치해졌다고 할 것이다.

지유사판과 후소사판의 본문 서술을 비교한 최근 연구와 기존 관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문의 기술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다.<sup>4)</sup> 기존과 달라진 부분은 본문보다는 학습 보조 자료로 제시된 삽화와 사진 등을 교체하거나 자료 설명을 시도한 점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교과서의 내용 가운데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학습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즉, 지유사판의 학습자료와 후소판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sup>5)</sup>

## II. 교과서를 통한 근대 일본의 전쟁 관련 이미지의 형상화

지금까지 새역모 교과서의 근대사 서술에서 아시아침략과 관련하여 주로 쟁점이 되었던 논제들은 다음과 같다. '명치유신 이후 조선과의 외교교착(서계문제)'와 '정한론', '조선반도와 일본'(일본의 독립과 조선반도 '팔뚝론', 조선의 근대화와 일본, 조선을 둘러싼 일청의 대립) 그리고 '일청전쟁과 삼국간섭', '러일전쟁', '한국병합', '대동아회의' 등이었다. 이와 같은 주제와 관련하여 교과서에서 제시된 학습자료는 주로 인물과 도표, 현장 사진 등이었다. 본 발표는 이와 같은 자료를 내용면에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첫째, 일본제국주의의 형성과정 곧 아시아에 대한 침략 전쟁에 관련한 자료 전부를 개관하며, 전체적으로 역사상과 성격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다음으로는 일본제국주의가 아시아 각국에서 벌였던 침략 전쟁에 대한 개별전쟁 자체에 대한 검토이다. 분석 대상으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그리고 태평양전쟁을 검토하였다.

지유사판 교과서는 교과서의 목차에 들어가기 전 처음 부분에 '그곳에 잠들어 있는 역사'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는 4가지 사례를 들어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에도 구석기가시대가 있었다 -젊은 아마추어 연구자에 의한 역사적 대발견-', '도굴한

년 '새역모' 중학교 역사교과서 상세 분석』, 일본 '지유사(自由社)판 역사교과서 관련 동북아역사재단 학술대회 자료집.

3) 남상구, 2009, 위의 발표자료집, 35쪽.

4) 연민수, 2009, 「『신편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역사관과 향후의 전망」, 『2009년 '새역모' 중학교 역사교과서 상세 분석』, 일본 '지유사(自由社)판 역사교과서 관련 동북아역사재단 학술대회 자료집.

5) 기존 연구 가운데 학습자료의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는 박삼현의 연구가 있다. 박삼현, 2008, 「일본중학교 후소사(扶桑社)판 역사교과서의 삽화분석 -근대화에 대한 역사인식을 중심으로-」, 『日本歴史研究』 27, 일본사학회.

구멍으로부터 1300년 전의 별자리 발견-다카마쓰고분과 키도라고분-, ‘이즈모다이저-거대한 공중 신전의 수수께끼-’, 끝으로 ‘동지나해에 침몰한 야마토 전함’을 제시하고 있다. 제목을 통해서 한눈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중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소재와 내용 설명이라 하겠다. 근현대사 부분에 해당하는 전함 야마토[大和]에 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전함 야마토는 일본이 낳았다. 역사상 세계 최대의 전함이었다. 1941년(昭和16) 12월, 일본이 미국 영국과 전쟁을 시작하였던 그 다음 주에 완성하였다. 전체길이 263미터, 폭 39미터, 전함 바닥부터 높이 약 60미터, 군함의 크기를 말해주는 滿載排水量 72,800톤, 최고시속 48킬로미터로, 당시 세계의 군함 가운데 다른 군함에서는 볼 수 없는 구경 46센티미터, 길이 21미터의 대포 9문은 포탄을 40킬로미터 전방까지 맞출 수 있었다. 그러나 야마토가 만들어지고 있던 약 4년 사이에 전쟁은 비행기가 주역을 맡는 시대로 바뀌었다.

일본이 점차 전쟁에서 패하는 가운데 야마토는 결국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1945년(昭和20) 4월 6일, 연합국 군대 1,200척의 대함대에 포위되어 공격을 당하고 있던 오키나와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야마토는 소형 군함 9척만을 거느리고 세토나िका이에서 출격하였다. 다음날 가고시마 남방 동지나해에서 총 350기 이상의 미군 비행기로부터 공격을 당했던 야마토는 1시간 반 정도의 전투를 치르다 오후 일찍 대포발과 함께 침몰하였다. 야마토에만 약 3,100명, 동행하였던 소형군함을 포함하여 3,700명 이상의 승선원이 사망하였다.<sup>6)</sup>

위의 전함 야마토에 대한 서술에서는 전함의 규모나 위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역사상 세계 최대의 전함”이지만 “비행기가 주역을 맡는 시대로 바뀌면서”, “결국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기술하고, 전사자의 숫자를 제시하였다. 지류사판 교과서에서는 ‘동지나해에 잠들어 있는 야마토’를 필두로, 아시아 침략 전쟁에 동원하였던 군사 시설물, 특히 군함과 전투기의 사진 자료가 빈번하게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일전쟁 시기 청국 북양함대의 주력군함이었던 定遠<sup>7)</sup>, 러일전쟁 시기 일본군 연합함대 기함 미카사[三笠]<sup>8)</sup>, 발진하는 일본의 공격대와 화염에 휩싸이며 침몰하는 아메리카 전함<sup>9)</sup>, 아메리카 군함에 육탄공격을 하는 특별공격기와 일본의 도시를 폭격하는 아메리카의 B-29<sup>10)</sup> 등이다. 위의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짧게 설명을 덧붙

6) 藤岡信勝 外, 2009,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 自由社, 7쪽(이하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으로 줄임).

7)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 自由社, 164쪽.

8) 위의 책, 169쪽.

9) 위의 책, 204쪽.

붙이고 있다.

- A. 청국의 주력 군함 定遠. 같은 사양의 鎮遠과 함께 독일로부터 수입하였고, 당시 동양 최대 최신의 군함으로서 그 이름은 일본의 서민들도 두려워하였으나, 황해 해전에서 청국함대는 신홍의 일본해군에 의해 산산히 깨져 재기하지 못했다.
- B. 전함 미카사. 일러전쟁에서 연합함대의 기함으로 참전하였으며, 도고 사령관이 타고 일본해 해전을 대승리로 이끌었다. 현재도 카나카와현 요코스카시에 기념함으로 보존되어 있다.
- C. 불타면서 침몰하는 아메리카의 전함군. 현지는 일요일 아침이었고 갑자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메리카군은 거의 반격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큰 손해를 입었다.
- D. 출격하는 일본 공격대. 일본해군은 이 작전을 위하여 6척의 항공모함으로 이루어진 함대를 이용하여 공중으로부터 공격하는 방법으로 큰 전과를 올렸다. 아메리카는 바로 그것을 배웠다.
- E. 아메리카의 군함에 몸으로 부딪치는 특별공격기. 1944년 10월 이래 추격당하던 일본군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작전을 수행하였다. 폭탄을 적재한 비행기를 승무원이 곧바로 적의 군함에 돌격하는 자살공격으로, 특별공격대(특공)라고 불렀다. 이 작전은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어 대략 3,900명의 장병이 죽었다. 사진 중앙의 윗부분에 돌격 직전의 특공기가 보인다.
- F. 일본의 도시를 폭격하는 아메리카 B-29. 장거리 비행과 대량의 폭탄 적재가 가능하였다. 3월 10일의 도쿄 대공습에서는 동서 5킬로미터, 남북 6킬로미터 구역에 정확하게 소이탄을 떨어뜨려, 화재로 사람들의 퇴로를 차단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의 도시를 차례차례 불태웠다.

위의 사진 자료 6장(A~F)을 통해서 상징적이고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등장과 패망의 모습이다. 사진의 이미지를 순서대로 엮어보면 전통적으로 제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청국이 보유한 동양 최대·최신의 군함을 신홍 일본의 해군이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하게 제압한 다음, 38척의 러시아함대를 맞이하여 일본 측은 수뢰정

---

10) 위의 책, 209쪽.

3척 만을 잃은 대신, 적의 군함 대부분을 격침(21척), 포로 6척, 도망 후 억류 6척의 전과를 거둬으로써 ‘세계 해전사상 이와 같은 완벽한 승리’를 거둔 적은 없었다. 그리고 진주만에 서도 새로운 전법으로 아메리카의 주력 해군을 궤멸시킨 일본군이었다. 이와 같이 떠오르는 태양 일본군의 상징이 ‘역사상 세계 최대의 전함 야마토’였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공군력을 중심으로 전쟁이 치러지면서 야마토의 침몰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의 젊은 군인들은 바다에서, 특공작전으로 하늘에서, 그리고 후방에서는 아메리카의 장거리 폭격기 B-29에 의하여 수많은 인명이 차례차례 희생된 것이 일본의 전쟁이었다. 대량의 인명이 죽어갔던 전쟁과 전쟁 사이에도 적국과 아군을 막론하고, 전쟁에 임하는 당시 사람들의 감성적인 발언들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연합함대는 바로 출동하여 격멸하고자 함. 오늘 날씨는 청명하나 파도 높음(러일전쟁)”<sup>11)</sup>, “이제까지 전쟁을 반대하고 있던 아메리카 국민들로 하여금 ‘진주만을 기억하라’는 말은 국민들을 대일본전쟁에 단결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sup>12)</sup>

이와 같이 일본이 감행하였던 전쟁을 마무리 하는 위치에 ‘일본을 해방군으로 맞이하는 인도네시아인’이란 칼럼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칼럼에 덧붙여 현지의 청년들을 모아 서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사진이나 일본군의 의료진찰 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동시에 배치함으로써 일본이 이들에게 긍정적으로 기능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 하였다.<sup>13)</sup> 일본을 통해서 서구열강으로부터 ‘해방’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인도네시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하나의 침략이 된다는 점을 애써 축소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통해 형성된 이미지는 일본제국주의의 아시아침략이라는 역사적 진실과는 메울 수 없는 거리를 가지는 것이었다.

### Ⅲ. 아시아 침략 전쟁에 대한 기술/배치의 변화양상

#### 1. 청일전쟁

지유사판 일청전쟁 관련 서술은 이전의 후쇼샤 교과서와 동일하나 문장 하나가 추가되었다. 즉, “일청전쟁은 歐美流의 근대 국가로 출발한 일본과 전통적인 중화질서와의 대결이었다”라는 부분이다.<sup>14)</sup> 일청전쟁이란 제목 아래에 소단락의 제목을 ‘조선을 둘러싼 일청의 대립’, ‘일청전쟁과 일본의 승인’, ‘下關條約과 삼국간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이

11)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 自由社, 171쪽.

12) 위의 책, 204쪽.

13) 위의 책, 207쪽.

14) 위의 책, 165쪽.

전과 같다. 이와 같이 소단락의 명칭은 동일하나 청일전쟁에 대한 전체 서술을 ‘일청전쟁과 삼국간섭’으로 바꾼 것은 일청전쟁의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삼국간섭 부분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학습자료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후쇼샤판에서는 도표와 지도로 ‘일본과 청국 해군력의 변화’, ‘日淸戰爭要圖’, ‘사진 자료로 체포된 갑오농민전쟁 지도자’, ‘김옥균’, ‘下關會議가 시작되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유샤판에서 나타난 자료의 경우 우선 ‘체포된 갑오농민전쟁의 지도자’ 사진이 삭제되었고, 체포되어 서울로 연행되는 전봉준 사진과 함께 나란히 제시되었던 ‘일본과 청국 해군력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 역시 삭제되었다.

앞 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두 자료가 배치되었던 지면 전체는 청국의 주력군함 ‘定遠’의 사진으로 채워졌고, 사진 설명으로 “같은 형태의 鎮遠과 함께 영국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당시 동양최대의 군함으로 그 이름은 일본의 서민들까지 두려워하였지만, 황해 해전에서 청국함대는 신홍의 일본해군에게 여지없이 깨져 재기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sup>15)</sup>

이와 함께 동일한 자료이면서도 내용 설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日淸戰爭要圖’라는 전쟁 진행의 개괄적인 지도의 설명을 들 수 있다. 이전의 후쇼샤판에는 지도에 대한 내용 설명이 없었다. 그런데 지유샤판에는 ‘일청전쟁의 주요한 전장 : 威海衛는 청국해군의 근거지였고, 旅順에는 육군의 요새가 있었다. 일본은 청국의 바로 입구에서 싸웠을 뿐이었으나 청군은 완벽하게 패배를 인정하였다’라는 설명이 제시되었다.<sup>16)</sup> 그 외에 김옥균에 관한 사진 상반신 사진은 얼굴 부분만으로 축소한 사진으로 제시되었다.

학습 보조 자료상의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중요한 역사서술상의 변화는 청일전쟁과 관련하여 동학농민전쟁 부분이 사라진 것이다. 사진 자료를 통한 것뿐만 아니라 청일전쟁 지도에서도 조선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다. 동학농민전쟁이 가진 의미를 삭제하는 대신 삼국간섭 즉,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 열강의 위협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기가 포인트’란에서는 “일청전쟁은 어떠한 전쟁이었나?”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6개항으로 제시하였다.<sup>17)</sup> 그 중 2항은 “조선의 농민폭동(갑오농민전쟁) 진압을 위해 양국의 군대가 출병 충돌”로만 제시함으로써 출병 이후 농민군에 대한 일본군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은폐하고 있다. 게다가 농민‘폭동’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사용함으로써 은연중에 일본군이 조선에 출병하여 이들의 ‘폭동’을 진압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3항의 “장비+훈련+규율+국민의식의 차이에서 일본이 승리”로 정리하면서, 청일전쟁 당시 일본이 청이나 조선에 비하여 우위에 설 수 있었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다.

15)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 自由社, 164쪽.

16) 위의 책, 165쪽.

17) 위의 책, 165쪽.

## 2. 러일전쟁

지유사판에서 러일전쟁 서술이 후쇼사판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목이 ‘일러전쟁’에서 ‘국가의 흥패가 걸렸던 일러전쟁’으로 바뀌었다. 그 외 본문의 소제목은 ‘일영동맹’, ‘일로개전과 전투의 행방’, ‘세계를 바꾼 일본의 승리’ 등으로 동일하다. 다만 ‘일러전쟁의 전개’ 부분에서 두 개 문장에서 단어를 바꾸거나 문장의 일부를 삭제하고 있다.<sup>18)</sup> 첫째, “1904년(明治37) 2월 일본은 러시아 군함에 공격을 개시하여 일러전쟁의 불꽃을 열었다”를 “일본은 러시아에 국교단절을 통고하여 일러전쟁의 불꽃을 열었다”로 바뀌었다. 다음으로는 “러시아는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발트해로부터 발틱함대를 파견했다. 전함 가운데 38척이 아프리카 남단을 우회하고 인도양을 횡단하여 약 7개월에 걸쳐서 일본해로 들어왔다”를 “... 본국으로부터 발틱함대를 파견하였다. 함대는 인도양을 횡단하고 동지나해를 거쳐 1905년 3월 일본해로 들어왔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러시아군함을 공격함으로써”를 “국교단절을 통고함으로써”로 바꾼 것은 전쟁의 개시를 국제법적으로 합리화하려는 기술이라 할 것이다. 본문 이외에 자료 제시 부분에서는 앞 절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군 연합함대의 “기함 미카사[三笠]” 사진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해해전」을 다음 페이지 전면에 걸쳐 제시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7개월 이상 걸려 인도양으로부터 동지나해에 달하는 장거리였다”가 “인도양으로부터 동지나해에 이르는 장거리였다”로 바뀌었다. 그리고 끝 부분에 제시하였던 다음과 같은 문장은 삭제하였다. “또한 같은 일러전쟁에서 활약했던 육군대장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는 전후 패전한 러시아 장군의 구명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메이지 일본에도 패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해주는 무사도는 살아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설명문과 사진자료가 결합하여 형성된 역사상은 어떤 것일까?

## 3.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

이 부분은 소제목에서는 ‘진주만공격’, ‘암전하는 전국’으로 후쇼사판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다만 문장의 일부를 바꾸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즉, 진주만 ‘공습’을 ‘기습’으로, ‘태평양함대’를 ‘태평양함대와 육군 항공부대’로, ‘일본의 서전의 승리’를 ‘전쟁 최초의 반년 간’ 정도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에 관한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후쇼사판에서 “일본장병은 감투정신을 발휘하여 잘 싸웠다”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일본장병은 이 싸움에 나라의 장래가 걸려있다고 믿고 잘 싸웠다”로 바뀌었다.<sup>19)</sup>

태평양전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전쟁의 경과에 대한 서술 부분보다는 태평양

18) 위의 책, 168~170쪽.

19)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 自由社, 204~205쪽.

전쟁과 아시아인의 관계에 서술 부분이다. 이른바 ‘대동아회의와 아시아 각국’이란 장은 소제목으로 ‘아시아에 확대되는 독립에 대한 희망’, ‘대동아회의’, ‘아시아제국과 일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제목은 후쇼사판과 동일하다. 다만 마지막 문장의 시작을 “일본의 남방 진출은 아시아의 해방이라는 명목을 내걸었지만 자국을 위한 자원 획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만”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일본이 수행하였던 전쟁의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문장은 “일본이 패전으로 철수한 이후 이와 같은 식민지들은 거의 10년 이내에 점차적으로 독립국이 되었다”라고 기술하였다.<sup>20)</sup> 이러한 서술은 마치 일본의 점령지가 되었던 지역의 국가들이 일본의 점령정책의 영향으로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로부터 독립국이 가능했다는 시혜적 논리가 기저에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소단락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전쟁은 전장이 되었던 아시아 여러 지역의 사람들에게 큰 손해와 괴로움을 끼쳤다. 특히 중국의 병사와 민중은 일본의 침공으로 다수의 희생자가 났다.”<sup>21)</sup> 하지만 교과서 어디에서도 청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전시기 동안 희생당한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 IV. 맺음말

2009년 4월 9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된 지 석 달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2005년 봄과 여름 사이를 생각하면서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머리말에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2005년의 0.39%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단순 비교이긴 하나 새역모 교과서가 처음 등장하였던 2001년의 채택율은 0.039%였다. 그렇다면 1차 검정에서 2차 검정을 거치면서 새역모 교과서의 채택율은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사실 가운데 하나로 일본에서 중학생 손에 쥐어졌던 교과서 숫자의 100배 이상에 해당하는 교과서가 ‘시판본’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대중에게 파고들었다는 점이다. 향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새역모와 같은 단체의 목소리에 공감을 하는 일반인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을 것이다.

2005년 4월, 그 때로부터 4년이란 시간이 흐른 올해 일본정부는 교과서 검정 발표를 몇 차례 미루다가 검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언제나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4년 전의 검정 결과 발표 시기와 비교해 볼 때 한국정부의 항의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은 우리를 무색하게 한다.

한국정부가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교과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

20) 위의 책, 207쪽.

21) 위의 책, 206쪽.

정을 촉구한 것에 대하여 일본 정부를 대신하여 문부과학상 시오노야 류(塩谷立)는 4월 10일 “검정은 엄정하게 실시되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라고 답변하였다. 즉, 일본정부는 교과서 검정 기준과 ‘근린제국조항’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교과서 검정을 실시했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한편, 새역모 측도 2004년과 검정 결과 발표 당일날 오후 “문부과학성의 꼼꼼한 검정을 통해 사실의 정확성이 높아졌고 표현이 개선되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sup>22)</sup> 새역모가 발표한 성명은 예전과 달리 형식적인 사과나 수정 요구 등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가 아닌 것은 확인하다. 오히려 새역모는 그들이 펴낸 교재가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거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층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까지 보이기도 한다.

4월 이후 국내 언론 등의 반응은 새역모 교과서가 출발하던 당시와 비교하여 낮은 채택율 등으로 자체 내의 분열과 대립으로 새역모의 교과서가 마치 곧 사라질 것이라는 인상마저 갖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낙관적인 전망은 아직은 성급한 것이리라. 일본정부가 앞장서서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핵문제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강경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새역모 교과서를 통해 일본 국민들이 바라보는 역사상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끝으로 한일 양국의 내부에서 동일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한다. 지난 시기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기억하는 소리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양국 사회가 보수화 되는 가운데, ‘자국’을 중심으로 사고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며, 또한 자국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교과서가 그 십년 동안 형식과 구체적 표현에서 보다 정확하고 치밀하게 개정판을 거듭하였다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긴 안목으로 치열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정재정, 2001,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韓國史觀의 특징 -扶桑社 간행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1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中村政則, 2001, 「일본 역사교과서(扶桑社刊)에 보이는 歷史敍述과 歷史觀」, 『한국독립운동사연구』1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하종문, 2001,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실태와 그 의도 - 후소샤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 정재정, 2002,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와 그 전망」, 『韓國史研究』116, 한국사연구회.
- 한철호, 2004,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 근대 관련 내용 분석 -『새역사교과서』(扶

22) 남상구, 2009, 앞의 발표문, 30쪽.

- 桑社)를 중심으로-」, 『東國史學』40, 동국사학회.
- 辛珠栢, 2005,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2005년도 검정본 분석 - 일제강점기 및 현대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근현대사연구』33, 한국근현대사연구회.
- 한철호, 2005,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근대사 서술과 역사인식」, 『韓國史研究』129, 한국사연구회.
- 허동현, 2005,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후소샤 판) 문제의 배경과 특징 -역사기억의 왜곡과 성찰-」, 『韓國史研究』129, 한국사연구회.
- 박찬승, 2005,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근현대사(1910년 이후) 서술과 역사관 분석 -후소샤판 교과서의 전쟁, 식민지 관련서술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129, 한국사연구회.
- 柳鏞泰, 2006, 「日本 歴史教科書の 동아시아 인식 : 脫亞觀念의 지속과 변화」, 『歷史教育』98, 역사교육연구회.
- 현명철, 2007, 「한·일 역사교과서의 근대사 기술 분석」, 『東北亞歷史論叢』17, 동북아역사재단.
- 권오현, 2008,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구성 틀과 구성 요소」, 『歷史教育論集』41, 역사교육학회.
- 박삼헌, 2008, 「일본중학교 후소샤(扶桑社)판 역사교과서의 삽화분석 -근대화에 대한 역사인식을 중심으로-」, 『日本歴史研究』27, 일본사학회.
- 정재정, 2008, 「2007년도 검정 합격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일관계 기술과 문제점」, 『韓日關係史研究』30, 한일관계사학회.
- 현명철, 2008, 「개항기 일본 역사교과서 서술의 검토」, 『韓日關係史研究』30, 한일관계사학회.
- 김민규, 2009, 「지유샤(自由社)刊 2009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 분석 : ‘근대’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2009년 ‘새역모’ 중학교 역사교과서 상세 분석』, 일본 ‘지유샤(自由社)’판 역사교과서 관련 동북아역사재단 학술대회 자료집.
- 남상구, 2009, 「‘새역모’ 발간 교과서의 검정상태에 나타난 일본 교과서 검정제도의 문제점」, 『2009년 ‘새역모’ 중학교 역사교과서 상세 분석』, 일본 ‘지유샤(自由社)’판 역사교과서 관련 동북아역사재단 학술대회 자료집.
- 연민수, 2009, 「『신편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역사관과 향후 교과서 문제 전망」, 『2009년 ‘새역모’ 중학교 역사교과서 상세 분석』, 일본 ‘지유샤(自由社)’판 역사교과서 관련 동북아역사재단 학술대회 자료집.
- 이원우, 2009, 「막말·명치전기 서술의 특징과 문제점」, 『2009년 ‘새역모’ 중학교 역사교과서 상세 분석』, 일본 ‘지유샤(自由社)’판 역사교과서 관련 동북아역사재단 학술대회 자료집.

## 토 론 문

## 「김정통과 중학교 교과서의 아시아침략에 대한 서술의 특징」

남 상 구(동북아역사재단)

- 사진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대 일본 제국주의 형성과정 전체를 관통하는 ‘근대 일본이 감행한 전쟁에 대한 총체적인 역사상’을 추출한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여겨집니다. ‘새역모’의 교과서 기술이 정치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본 발표와 같이 교과서를 관통하는 역사관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표문에서 “청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전 시기 동안 희생당한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셨는데, 태평양전쟁과 관련해서는 <77장 전 시하의 국민생활>의 소단원 <국민의 동원>에서 조선인 전시동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의 국민동원을 설명한 다음에 “조선반도와 대만에서는 일중전쟁 개시 후, 일본식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창씨개명이 실시되어 조선인과 대만인을 일본인화 하는 정책이 강화되었다. 전쟁말기에는 징병과 징용이 조선과 대만에도 적용되어 현지 사람들이 여러 희생과 고통을 당했다. 또한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일본이 광산 등에 끌려와 가혹한 조건과 대우 아래서 노역 당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등에 대한 기술이 누락된 것도 문제지만 조선인의 희생을 일본의 침략전쟁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라 침략전쟁에 동원된 국민(‘제국신민’)으로서 받은 피해로 기술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프랑스 등 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국민의 전쟁 피해나 동원을 교과서에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시아 침략에 대한 서술의 특징은 일본인이 받은 전쟁피해에 대한 서술과 비교할 때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지유사판 교과서의 사진을 보면 국민의 전쟁동원은 후소사판에 비해 좀 더 역동적으로 바뀐데 반해 전쟁 피해는 축소됩니다(붙임1 참조). 일본은 가해사실은 축소하고 피해사실만 강조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새역모’는 일본 국민의 전쟁피해를 ‘역사에 대한 애정을 깊게 하고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기른다’는 목표와는 맞지 않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문부성은 1963년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의 『新日本史』에 대한 검정에서 “242쪽에 ‘본토공습’, ‘원자폭탄과 그로 인해 폐허가 된

히로시마'라는 전쟁에 관한 어두운 사진이 실려 있고 244쪽에는 '전쟁에 나가는 학도',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생도'와 같이 전쟁에 열심히 협력하는 밝은 면도 나와 있지만 245 쪽에는 또 '전쟁의 참화'와 같은 사진(가두에서 모금하는 의수의 백의용사 사진)이 나와 전체적으로 너무 어둡다"고 지적했습니다.<sup>23)</sup> 문부성의 지적을 염두에 두고 '새역모' 교과서의 사진을 보면 그 의도가 더 분명해 집니다. '국가에 열심히 협력하는 국민'이 이들이 추구하는 전쟁과 국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2001년과 2005년 '새역모' 교과서의 채택률 저조했던 원인으로 국내의 시민단체와 언론의 교과서 채택저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셨는데, 발표문에서 지적하셨듯이 '새역모'의 목소에 공감하는 일반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내정간섭'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23) 家永三郎、1964、『教科書検定』、日本評論社。

붙임1. 태평양전쟁 관련 사진 비교

2005년(후소사)	2009년(지유사)
77. 전시 하 국민생활	
 <p>  遊力動員 工場で働く女学生。   学徒出陣の壮行大会 (東京・明治神宮外苑, 1943年10月21日)         </p>	 <p>  勤労動員 飛行機工場で働く女学生。連合部隊でもこうした職場には沢山の女性が動員されていた。   学徒出陣 1943年10月, 東京・明治神宮外苑でおこなわれた壮行大会。当時の大学生は軍が募集の入学年齢で、同年齢の男子の多くはすでに戦場におもむいていた。         </p>
 <p>  「ぜいたく追放」の立看板         </p>	 <p>  「ぜいたく追放」運動 「贅沢は敵だ」のプラカードを掲げて大阪の大通りを行進する女学生         </p>
 <p>  出撃する特攻隊         </p> <p>             戦場でも追いつめられた日本は、飛行機や潜航艇で敵艦に死を覚悟して体当たり攻撃を行う特別攻撃隊(特攻)をつくった。その数は、飛行機だけでも2500機近かった。写真は、鹿児島県知覧基地で女学生に見送られて飛び立つ特攻隊の戦闘機。         </p>	 <p>  日本の艦隊を襲撃するアメリカのB-29長距離爆撃機。大量の焼夷弾を投下してきた。9月10日の東京大空襲では東部(南10km)の区域に正確に焼夷弾を落とす。次の数日、火の海を歩いたのははじめ、日本の都市をつぎつぎに焼き払った。         </p> <p>             アメリカの軍艦に体当たりする特別攻撃隊 1944年10月以降、追いつめられた日本軍は世界に例がなかった作戦を実行するようになった。海軍を頼んだ飛行機を乗員ごと敵の艦船に突入させる自殺攻撃で、「特別攻撃隊」(特攻)と名づけた。この作戦は特攻の日本で続けられ、およそ3800名の犠牲がとくなく。写真中央に突入する特攻隊が見える。         </p>
 <p>  東京大空襲の惨状 米軍は、東西5km、南北6kmの区域内に焼夷弾を落とす。火の壁で人々の退路を断って爆撃した。         </p>	



④ 学童疎開 空襲などの危険をさけるため地方に疎開する子どもたち。



学童疎開 空襲の危険をさけるため地方に疎開する子どもたち。疎開のあいだに都会に残った家族を空襲で失った子も少なくなかった。

78. 종전의외교와 일본의 패전



④ 広島に投下された原子爆弾



B-29の爆撃で焼け野原になった東京の下町 現在の中央区長町一帯で背後は隅田川。  
爆発した原子爆弾 広島では15万人、兵隊では1万5千人が亡くなり、さらに多くの人々が放射能被曝の後遺症で苦しむことになった。



<컬럼>20세기의 전쟁과 전체주의 희생자



④ シベリア抑留者の埋葬 (『鎖魂のシベリア』 吉田勇 作)



ソ連によるシベリア抑留者の収容所 舞鶴引揚記念館の復元展示。きびしい労働に加え、栄養価の低い食事と不十分な暖房などにより6万人以上が現地で死亡した。



④ 原爆で廃墟となった広島産業奨励館(原爆ドーム) 1997年、世界遺産に指定された。



原爆で廃墟となった広島産業奨励館 戦後「原爆ドーム」とよばれ、1997年、世界遺産に登録された。



# 검정 통과 중학교 교과서의 현대 한일관계 서술의 특징

신 주 백(연세대)

〈 목 차 〉

I. 머리말	2. 1945년 8월 전후에 관한 기술
II. 구성	3. 한국현대사의 시작에 관한 기술
III. 현대사 서술	4.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에 관한 기술
1. 현대 한일관계사를 직접 기술한 부분	IV. 맺음말

## I. 머리말

연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역사갈등의 주범인 일본 우익의 일부가 다시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발행하였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2009년 검정에 통과한 역사교과서를 《일본인의 역사교과서》라는 책에 포함시켜 지유사에서 발행한 것이다.

이 책은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를 핵심 구성으로 하지만, 새역모의 생각을 알 수 있는 ‘生活をうるおす日本の傳統’, ‘日本を讀み解く15の視座’라는 코너도 있다. 특히 ‘日本を讀み解く15の視座’코너는 교과서 서술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표문은 1945년 전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기술한 내용을 검토한다. 현대사의 구성을 검토할 제2장에서도 확인되겠지만 현대사에 관한 기술은 그다지 많은 분량이 아니다. 일본의 학교 현장에서도 거의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도 하다. 더구나 이번 지유사 교과서의 특징과도 연관이 있지만, 현대 한일관계와 관련된 서술을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검토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발표문에서는 편집의 구성방식, 그리고 글의 전개방식과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맥락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발표문에서는 현대 한일관계와 관련된 본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분석하겠지만,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日本を讀み解く15の視座’코너의 내용도 함께 참조하겠다. 그리고 같은 우익 계열로서 현재 일본의 역사왜곡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日本會議에서 발행한 《これだけは知っておきたい大東亞戦争:20の最新基礎知識》(2005, 明星社)도 적극 인용하겠다.<sup>1)</sup>

\* 발표용 글입니다. 필요한 분은 참조만 해 주세요.

1) 발표자가 참조한 것은 2008년 제3쇄 발행본이다.

## II. 구성

우선 아래 <표 1>을 통해 현대 서술 부분의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짚어보자. 扶桑社版도 그랬지만, 지류사판 역사교과서는 1945년 이후를 현대라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 5장 세계대전의 역사-대정·소화시대부터 평성까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부터를 세계현대사로 보면서 천황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sup>2)</sup>

<표 1> 역사교과서 목차 비교

후소사(2002) 〈新しい歴史教科書〉	후소사(2006) 〈新しい歴史教科書 改訂版〉	지류사(2009)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
제5장 세계대전의 시대와 일본	제5장 세계대전의 시대와 일본	제 5장 세계대전의 역사 -대정·소화시대부터 평성까지
71 終戦外交と日本の敗戦	77 終戦外交と日本の敗戦	78 終戦をめぐる外交と日本の敗戦
제3절 일본 부흥과 국제사회		
72 占領下の日本	78 占領下の日本と日本国憲法	79 占領された日本と日本国憲法
73 極東国際軍事裁判	79 占領政策の轉換と独立の回復	80 占領政策の轉換と独立の回復
74 独立の回復と国際社会への復帰	80 米ソ冷戦下の日本と世界	81 米ソ冷戦下の世界と日本
75 米ソ冷戦下の日本と世界		
76 戦後の社会と文化		
제4절 경제대국·일본의 역사적 사명		
77 世界の奇跡 高度経済成長	81 世界の奇跡・高度経済成長	82 世界の奇跡・高度経済成長
78 日本の国際的役割	82 共産主義崩壊後の世界と日本の役割	<b>83 戦前・戦後の昭和の文化</b>
79 21世紀を迎えて	84 共産主義の崩壊と高度対抗社会	

\* 비교 : 소단원 이름의 변화여부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쉽도록 일본어 원문대로 게재하였다.

굵게 표시한 것이 새롭게 추가된 단원명이다.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사 부분은 2006년판에 비해 구성에 큰 변화가 없다. 다른 시기의 구성과 달리 소단원의 제목도 거의 바뀌지 않았다. 다만, ‘83. 전전·전후 소화의 역사’가 새로 추가되었는데, 2001년판 扶桑社版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약간 수정한 정도이다.

그러면서도 제5장의 제목에 딸린 副題도 2002년과 2006년도 후소사판에 없었는데, 천황

2) ‘장’의 제목을 ‘세계대전의 역사’라 명명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역사’라는 이름의 역사교과서이므로, 세계사적인 기준에서 이렇게 나누었을 가능성도 있다.

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교과서 본문의 맨 끝에 쇼와천황을 소개한 한 쪽 분량의 단독코너 이외에 ‘歴史へゴー！昭和天皇のお言葉’를 새로 추가하였다. 특히 ‘쇼와 천황의 말씀’이란 코너는 “쇼와 천황의 발언에는 다음과 같이 평화와 인류, 국민에 대한 책임, 자연 등에 대한 생각이 느껴지는 것이 적지 않다. 다음 발언에서 전쟁을 포함한 쇼와라는 시대에 대해 생각해 보자”라는 생각열기 차원의 도입 글을 통해 천황이 평화를 수호하고 국민을 사랑한 지도자였음을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명시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는 “쇼와라는 일본에 격동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걸어간 쇼와천황의 다음 발언에서 그 생각을 상상해 보자”라는 미묘한 도입 글을 검정 후 이처럼 바꾼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본문의 내용도 군부의 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고 헌법을 지키고 평화를 사랑하며, 국민의 희생에 애도를 표시했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천황의 침략전쟁의 최고 책임자였던 쇼와천황, 식민지 지배의 최고 책임자였던 천황의 이미지는 배제한 채 반대된 이미지만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한 의도된 편집 기획이라고 볼 수 있다.

### Ⅲ. 현대사 서술

#### 1. 현대 한일관계사를 직접 기술한 부분

먼저 현대 한일관계를 기술한 부분에서 내용 변화가 있었는지 아래 <표 2>를 통해 확인해 보자.

<표 2> 지유사판과 후소사판에 있는 현대 한일관계사 서술의 변화 비교

소 단 원	내 용 (2006년판과의 비교)
80. 점령정책의 전환과 회복	국제연합과 냉전의 개시 : (중략) 조선반도에서는 1948년, 남부에 아메리카가 지지하는 대한민국, 북부에 소련의 영향하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이 성립 대립하였다. 이렇게 해서 냉전은 동아시아로 확산되었다. (216쪽)
	점령정책의 전환 : (중략) 1950년 6월, 북조선은 남북의 무력통일을 향해 소련의 지지 아래 돌연 한국에 침공하였다. 한국군과 맥아더가 지휘하는 아메리카군 주체의 國連軍이 이에 반격했지만, <b>북조선측에는 중국의용군도 가담하여</b> 전황은 일진일퇴를 되풀이하였다. 전쟁은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조선전쟁) (217쪽)
82 세계의 기적·고도경제성장	외교관계의 진전 : 1965년(소화40)에는, 일본은 한국과 일한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하고 유상 2억 달러, 무상 3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약속하였다. (221쪽)

소 단 원	내 용 (2006년판과의 비교)
84. 공산주의의 붕괴와 고도 정보사회	<p><b>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b> : (중략) 공산주의 진영(→ 체제)의 붕괴에 의해 세계 규모의 전쟁 위험은 사라졌지만, 동아시아에는 일부 공산주의(→ <b>협조적이지 않는</b>) 국가가 남아 있고, 또 민족이나 종교의 대립을 바탕으로 한 지역 분쟁도 없어질 것 같지 않다. (중략)</p> <p>사진 : 북조선에 납치되어 귀국한 일본인들(2002.10.15) <b>1970년대부터 일본해측을 중심으로 일반인이 돌연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빈발하였다.</b> 2002년 9월 <b>평양으로 출발한</b> 고이즈미 수상에 대하여 북조선은 일본인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후, 납치피해자의 일부는 귀국했지만, 지금도 납치되었다고 간주되는 다수의 일본인의 소식이 불명확하고,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 (225쪽)</p>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사관 교과서는 후소사관의 완전한 복제품이다.<sup>3)</sup> 현대 한일관계에 관한 기술은 특별히 크게 바꾸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경우는 없다. 오히려 새역모 자신의 역사인식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세련되게 다듬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 2. 1945년 8월 전후에 관한 기술

자유사관 역사교과서는 위기의 순간 언제나 중심에 섰던 천황을 중심으로 역사교과서를 기술하며, 중한예속사관, 구미추수사관, 공산주의찬미사관을 극복하겠다는 의도에서 작성된 교재이다. 그들은 이 네 가지 사항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8종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확연히 다른 점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네 가지 역사관 가운데 현대사와 관련된 역사 사실로 보기를 들고 있는 주제가 1945년 8월 전후의 역사해석이다. 그들에 따르면,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아시아는 해방되었다”<sup>4)</sup>는 언급은 대표적인 구미추수사관이다. 단순히 일본이 패배했기 때문에 실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사관 교과서에서는 “뒤에 일본이 패전으로 철퇴한 후, 이들 식민지는 거의 십수년에 걸쳐 점차 자력으로 독립국이 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sup>5)</sup>

하지만 새역모가 단순히 사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시아·태평양전쟁 곧, ‘대동아전쟁’을 어떻게 보고, <대동아공동선언(1943.11)>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즉, 일본은 구미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여러 나라의 독립을 도와준다는 방침을 대동아전쟁 당초부터 내세웠다. 전쟁중 일본이 점령한 아시아 지역에서 독립이 결정되지 않은 나라

3) 이것의 정치성에 관해서는 신주백, <자유사관 역사교과서의 근대사 서술 분석> 참조.

4) <戰後15 - 日本が無條件降伏し, アジアは解放された……敗戦>, 《史》 74, 24쪽.

5)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 自由社, 2009, 207쪽.

는 말레이시아·싱가포르뿐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도 국가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조선과 대만에서는 자치로부터 독립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거라는 형식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었다. 결국 만약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아시아에서 일본의 식민지 帝國이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과 자치가 달성된 자유로운 아시아가 탄생할 수 있었다.<sup>6)</sup>

새역모의 이와 같은 인식에 바탕을 둔 교과서 서술은 자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한국, 중국, 베트남의 민족운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역사인식이다. 달리 말하면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역사를 개척해 갔던 현지인들 곧, 오늘의 주인들을 부정하는 역사인식이다. 새역모가 아시아·태평양전쟁이 해방전쟁이었다는 자신의 역사인식을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교묘하게 숨겨둔 채 주변 국가들의 비판을 피해가는 세련된 접근한 것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기술은 연합국의 일련의 전후처리방침 자체를 무시하는 기술이다. 왜냐하면 연합국은 일본의 행위를 침략으로 보았고, 전후 민주주의와 인권의 복원을 전쟁의 중요한 목표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류사관 교과서에서는 1945년 7월 포츠담선언이 군대의 무조건 항복을 규정했지 국가의 무조건 항복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 선언 자체는 유조건 항복 문서라고 곡해하며, ‘독일정부’가 붕괴된 이후 독일군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했는데 비해,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일본에 대해 전쟁종결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기술하고 있다.<sup>7)</sup>

그런데 연합국은 이미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에서 무조건 항복을 전쟁 종결 방식의 원칙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포츠담선언이 요구한 무조건 항복은 이때의 합의를 존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내각 등이 1945년 들어 천황제를 온존시킨다는 대전제 하에서 여러 채널을 동원하여 ‘종전협상’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것이다.<sup>8)</sup>

### 3. 한국현대사의 시작에 관한 기술

위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지류사관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에 관해 처음 언급한 것은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는 부분에서다. 이때 독립했다는 의미에서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945년부터 1948년 8월까지의 역사는 무엇인가? 지류사관 역사교과서는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점령’이라고 본다. 우리가 흔히 ‘해방3년’ ‘해방공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지류사관만이 아니라 대다수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이 시기를 미군과 소련군

6) 日本會議事業センター, 〈日本が負けたからアジア諸國は獨立できたのか?〉, 《これだけは知っておきたい大東亞戦争:20の最新基礎知識》, 明星社, 2008, 22-23쪽.

7) 〈戦後15 - 日本が無條件降伏し, アジアは解放された……敗戦〉, 《史》 74, 24쪽.

8) 이에 대해서는 신주백, 〈일본의 패전대책과 식민지 조선〉, 《日本文化研究》 18, 2006.4 참조.

이 점령한 기간으로 본다. 또 다른 지배의 시기로 한국현대사의 첫 출발지점을 보고 있는 것이다.

‘2)’에서 기술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점령이란 입장에서 한국현대사의 첫 시기를 보게 되면 일본의 패전과 아시아의 독립을 곧 바로 연결 지을 수 없다는 논리가 타당한 것처럼 된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더구나 ‘2)’와 같은 관점을 따라 이 사실을 독해한다면 3년의 한국현대사는 일본이 지배하던 시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도 있다. GHQ에 의해 ‘점령당한’ 일본과 한반도가 다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처지 곧, 패전국의 상황처럼 이해될 소지도 있다.

반면에 우리는 건국준비의 과정을 거쳐 해방이 되었으며 미군정 3년간의 기간도 미군정을 부각시키기보다 우리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일간에 역사인식의 간극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러나 1945년 8월 이후 한반도의 상황을 사실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굳이 사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해도 이는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지역에서 소군정은 없었으며, 남한지역에서 미군정은 ‘점령정책’을 실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점은, 역사를 자신의 주체적 역사로 해석하려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이다. 자유사관은 주어가 GHQ인 데서 알 수 있듯이, 1951년까지 일본의 역사를 ‘점령당한’ 역사로 기술한다. 그래서 일본인의 주체적인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한반도의 3년을 같은 관점과 비슷한 태도를 갖고 역사를 이해하도록 독자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 4.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 에 관한 기술

일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아주 다양할 것이다. 일본인 스스로가 담당하고 싶어 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크고 다양할 것이다. 자유사관 역사교과서에서는 일본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수 있는 데서 과제를 찾고 있다. 맞는 지적이다.

그런데 자유사관 역사교과서는 후소사관과 달리 공산주의라는 말을 ‘협조적이지 않는’으로 바꾸었지만 여전히 공산주의의 위협을 강조하는 대목의 날개 부분에 위의 <표2>에도 나와 있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기술하고 있다. 납치문제는 일본인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인류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북한을 비판해야할 사안하다.

그러나 자유사관 교과서는 납치문제를 인권적 측면에서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비판적 접근보다 이념적 접근을 우선하며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학생들이 갖도록 조장하고 있다.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인한 인권침해에 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태도와 아주 다른 모습인 것이다. 일본사회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를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학생으로 하여금 생각해 볼 여지를 애초부터 주고 있지 않은 것이다. 마치 유일한 피폭 국가라는 점을 부각시켜 희생자인 양 행동하는 일본인이 있는 것처럼 납치문제도 비슷한 국제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편적 가치와 잣대가 들어갈 여지는 없다. 보편이란 이름으로 일본만의 자기중심적 인식을 정당화하고 있을 뿐이다. 지유샤판 역사교과서를 ‘싸움닭을 키우는 역사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 IV.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지 않고 지유샤판 역사교과서의 발행과 내용이 같은 의미를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끝내겠다.

- \* 지유샤판 역사교과서는 ‘후소샤판의 완전 복제품’으로 같은 종류의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일이 벌어지는 유일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책의 검정통과는 문부과학성이 역사왜곡의 주도자이고, 우익 역사관의 방파제라는 사실이 이번 검정통과를 통해 대중적으로 보여주었다.
- \* 지유샤판 역사교과서는 사실에 관한 한 갈등회피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역사관을 교묘하면서도 세련되게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천황중심사관, 전쟁미화사관 적극 내세우고 있다.
- \* 지유샤판 역사교과서는 자애로운 입헌군주로서의 천황을 모습을 복원하면서 천황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일본사회를 꿈꾸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가 학교교육 차원으로 제한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 \* 지유샤판 교과서는 한국인의 주체적인 역사 개척을 간과하고 있다. 연합국의 점령과 일본의 경제협력의 역사로 설명되어질 수 있게 하고 있다.

토론문

## 검정 통과 중학교 교과서의 현대 한일관계 서술의 특징에 대한 토론

남 상 호(경기대)

발표문은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에서 기술된 1945년 전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검토하고 있다.

- 1] 발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구구절절 타당한 것이라 생각하며, 확실히 해 둘 필요성에서 확인차 질문함
  - (ㄱ) 발표문 "2)1945년 8월 전후에 관한 기술"과 관련하여
  - (ㄴ) 발표문 "3)한국현대사 시작에 관한 기술"과 관련하여
  - (ㄷ) 발표문 "4)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관한 기술"과 관련하여
  - (ㄹ) "지유샤관 역사교과서는 사실에 관한 한 갈등회피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역사관을 교묘하면서도 세련되게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천황중심사관, 전쟁미화사관 적극 내세우고 있다."와 관련하여
  - (ㅁ) 지유샤관 교과서는 한국인의 주체적인 역사 개척을 간과하고 있다. 연합국의 점령과 일본의 경제협력의 역사로 설명되어질 수 있게 하고 있다.
  
- 2] 한국사회에서 [여기서는 일본역사교과서 문제에 한정되지만] 일본사회에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와 관련하여  
발표문 중 “지유샤관 역사교과서는 자애로운 입헌군주로서의 천황을 모습을 복원하면서 천황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일본사회를 꿈꾸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가 학교교육 차원으로 제한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서술에 대한 질문

## 전환기 일본교과서 문제의 諸相

---

- 집필자 : 정재정, 김은숙, 이재석, 손승철, 최덕수, 신주백
- 발 행 : 2009년 7월
- 펴낸이 : 김용덕
- 펴낸곳 : 동북아역사재단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본관11-12층
- 전화 02-2012-6051
- 팩스 02-2012-6177

---

비매품